





2006

국방백서



국방부

발간사



2006년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이룬 참으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었습니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서, 지난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국방체제의 일대 개혁이 가능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격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과 10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였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 국방태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 핵위협에 대비하는 한편, 정부와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 노력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안보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방개혁은 우리 군이,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양상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부합하고 국방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선진국형 군대로 발전 시켜나가기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방개혁은 21세기 선진조국의 생존과 번영을 뒷받침하는 국가적 과업임과 동시에 우리 군을 '선진정예강군'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인 만큼 일관되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 주도 미국 지원'으로 전환하는데 합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한미동맹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 과정을 잘 관리함으로써 변화된 안보환경에 부합된 최적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에 있음을 잘 인식하여야 합니다. 한미동맹관계가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방력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우리 군이 진정한 강군이 되려면 국민의 사랑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군에 부여된 소임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여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들은 하나같이 우리 국방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이러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6 국방백서」가 우리 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국방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의 국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2006.12.29.

국방부장관

김 장 수

목 차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02

제1절 세계 안보정세	03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08
제3절 북한정세와 군사위협	15

제2장 국방정책 기조 26

제1절 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	27
제2절 국방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30
제3절 '선진정예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36

제3장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태세 확립 44

제1절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45
제2절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58
제3절 전투임무위주 교육훈련	62
제4절 예비전력 정예화	69

제4장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 강화 74

제1절 정예 군사력 건설	75
제2절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84
제3절 대외 군사협력관계 발전	95
제4절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112

제5장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118

제1절 정예 국방인력의 확보와 관리	119
제2절 국방자원관리의 선진화	139
제3절 국방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	147
제4절 국방정보화 추진	154
제5절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	161

제6장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170

제1절 국민편의 증진	171
제2절 병무행정 개선	183
제3절 국군포로 송환 노력	187
제4절 환경친화적인 군 운영	190
제5절 국방홍보의 활성화	193

부 록

1.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2. 남북 경제지표 비교
3. 북한 연도별 군사비
4. 북한 핵문제 관련 경과일지
5.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과/제원
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7. 제38차 SCM 공동성명
8. 유엔 평화유지 활동 현황
9. 우리 군의 피병 현황
10. 세계 주요국가의 국방비 비교
11. 연차별 정부재정과 국방비
12. 남북 군사력 비교
13.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현황
14. 남북군사회담 경과일지
15. 제37차 SCM 공동성명
16. 주요 국제군비통제협약/기구
17. 국방기구도
18.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약어 모음

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RF :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ASC : Asia Security Conference 아시아안보회의

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ATACMS :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육군 전술유도 무기체계

ATCIS : 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지상전술지휘정보체계

AWACS :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공중조기경보통제기

BCTP :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전투지휘훈련

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절차개선

BTL :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의 일종

BTO : Build-Transfer-Operate 민자사업방식의 일종

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생물무기금지조약

C/J LOTS : Combined/Joint Logistics Over The Shore 연합·합동 해안양륙 군수지원 작전

C4ISR :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및 감시·정찰

CDIP :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 연합방위 증강사업

CERT :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컴퓨터침해사고대응반

CIO : Chief Information Officer 고위관리자

CIS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CODA :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연합권한위임사항

CPAS : Command Post Automation System 지휘소자동화체계

CPX : Command Post Exercise 지휘소연습

CRDL : Critical Requirement Deficiency List 긴급소요 부족품 목록

CRS : Command Relations Study (한·미)지휘관계연구

CSA : Comprehensive Security Assessment 포괄적 안보상황평가

CSCAP :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아 · 태지역 안보협력이사회

CSG : Carrier Strike Group (미국)항모강습단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조약

CWT : Customer Waiting Time 사용자 대기시간

DOD : Defense Officials' Dialogue 국방관리대화

EA : Enterprise Architecture 전사적 아키텍처

EASI :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동아시아 전략구상

EBO : Effects Based Operations 효과중심작전

EU :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 신속억제방안

FE : Foal Eagle 독수리 연습

FMP : Force Module Package 전투력 증강

FOTA :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FTA :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G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

IA : Implementing Agreement 용산기지 이전 이행협정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IO : Information Operations 정보작전

IR Pointer : Infra-Red Pointer 적외선지시기

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

JOS : Joint Operations Simulation 합동작전모의

JSA : Joint Security Area 공동경비구역

JVS : Joint Vision Study 미래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

약어 모음

KCTC : Korean Army Advanced Combat Training Center 한국군 과학화 훈련장

KJCCS : Korea Joint Command & Control System 합동지휘통제체계

KNCCS : Korean Naval Command Control System 해군 지휘통제체계

KNTDS : Korean Naval Tactical Data System 해군 전술자료처리체계

LAN : Local Area Network 근거리통신망

LNWFZ-NEA : Limited Nuclear Weapon Free Zone for Northeast Asia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

LPP : Land Partnership Plan 연합토지관리계획

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 한미군사위원회 회의

MCRC : Master Control & Reporting Center 중앙방공관제소

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

MIMS :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군사정보 통합처리체계

MNF : Multi-National Forces 다국적군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MTWS : Marine Training War-game Simulation 해병대 워게임 모의훈련

NCW : Network Centric Warfare 네트워크 중심전

NEACD :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동북아 협력대화

NLL :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NSS :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

NVG : Night Vision Goggle 야간투시경

OPCW :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국제비화학무기금지기구)화학무기금지기구

PAC-3 : Patriot Advanced Capability 3 요격미사일

PCRM :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정책고객서비스

PGM : Precision Guided Munitions 정밀유도무기

PKF : Peacekeeping Forces 평화유지군

PRT : Provincial/Regional Reconstruction Team (이라크) 한미연합 지방재건단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RCT : Repair Cycle Time 정비 소요시간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식별

RIMPAC : Rim of the Pacific Exercise 환태평양훈련

RSOI : Reception (수용), Staging (대기), Onward Movement (전방이동) and Integration (통합) 연합전시증원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미안보협의회의

SNP : South-North Pipeline 남북송유관

SPC : Security Policy Conference 안보정책회의

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 한미안보정책구상

TACC : Theater Air Control Center 전구항공통제본부

TKP : Trans Korea Pipeline 한국종단송유관

TOR : Terms of Reference 관련약정

TPFDD : Time Phased Force Deployment Data 시차별 부대전개제원

UA : Umbrella Agreement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

UAV :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항공기

UFL : Ulchi Focus Lens 을지포커스렌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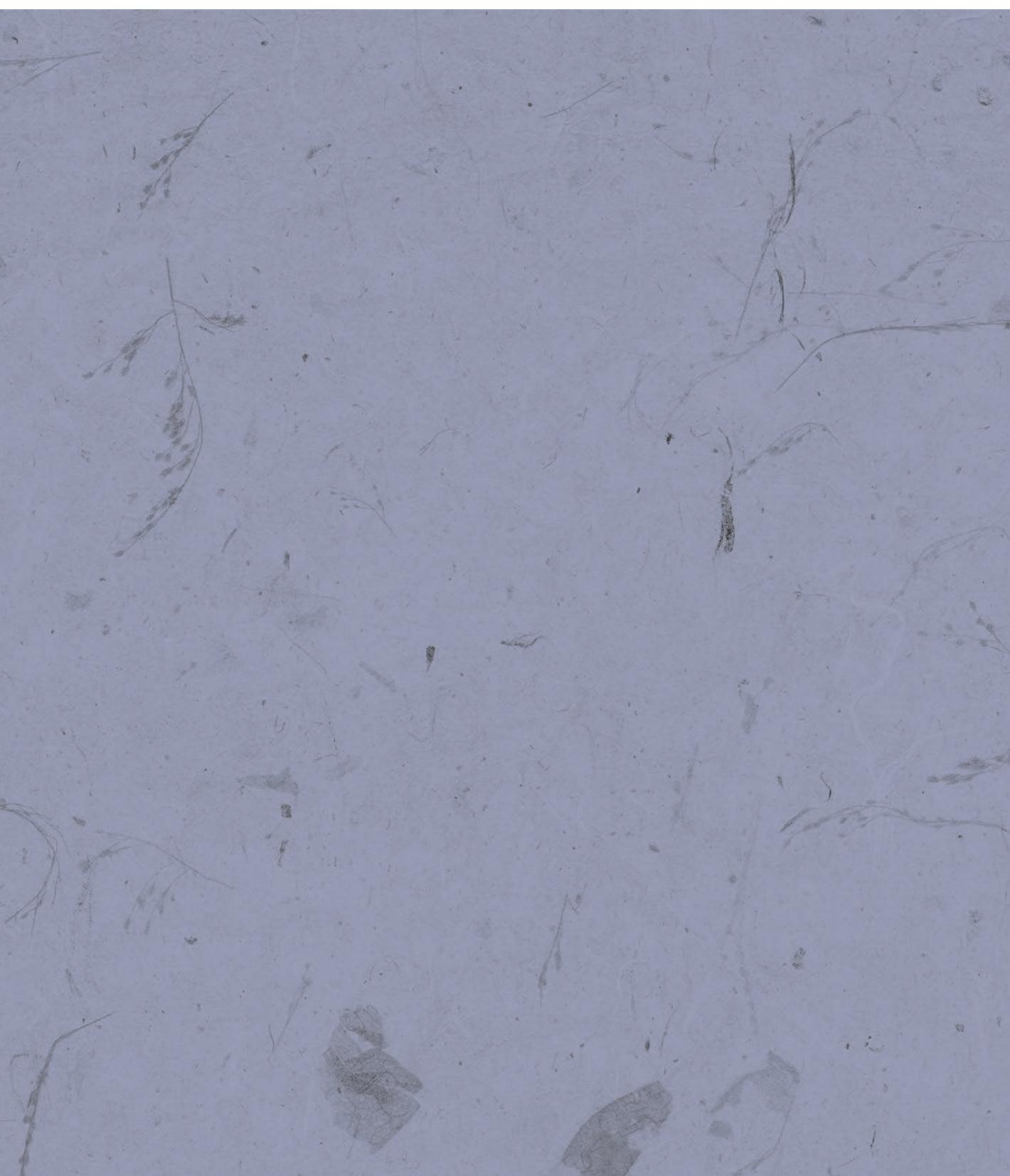
UNTSO : 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Observers 유엔 정전감시기구 참관국가

VoIP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 음성통신

WAN : Wide Area Network 광역통신망

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WRSA :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동맹국을 위한 전쟁비축물자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제1절 세계 안보정세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제3절 북한정세와 군사위협

제 1 절 세계 안보정세

세계 안보정세의 특징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성격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안정 및 평화를 위한 전략적인 연대와 견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1년 9·11테러 이후 국제 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대 테러와 비확산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지역적으로는 다양한 갈등요인으로 말미암아 국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1. 전략적 연대와 견제를 통한 국익 추구

오늘날 세계 안보환경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 간 전면전의 가능성은 줄었으나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었고, 과거 잠재되었던 갈등 요인들이 표면화 되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성격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이를 위해 모든 분야에서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은 물론, 자국에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전략적인 연대와 견제를 병행함으로써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9·11테러를 계기로 대 테러전을 전개하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새로운 국제 안보 체제의 형성을 주도해 왔고, 주요 국가들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동조하고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러시아와 중국 및 유럽 주요 국가들은 미국이 안보개념을 확대하여 공세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에 대해 견제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EU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미국-EU 간의 대립, WMD 확산문제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한 EU 자체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의 핵 개발 움직임 등 ‘새로운 위협에의 대처’, ‘EU 인근 국가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 그리고 ‘효율적 다자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 형성’을 전략 목표로 하는 유럽안보전략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안보질서 형성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국과 중국이 최근 급속한 경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와의 협력과 교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2006년 3월 부시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서 미·인도 핵협정에 서명하고, 인도와의 군사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첨단 전투기 판매를 수락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아시아 질서에 새로운 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06년 11월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인도의 싱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인도 전략적 관계 증진을 위한 13개 협정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가 간 역학관계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사실은 최근 유가의 급상승과 함께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국제 질서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9·11테러와 뒤이은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중동산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 불안감이 확산되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원인 중동은 물론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어 해당 지역 정세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국제 정세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간 전략적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우려국 및 테러집단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관련물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성을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유럽·아시아 등 11개
주요국 참여하에 출범하였으며,
현재 80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EU:
European Union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1 장 >>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사안별로는 견제를 하는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 각국이 대량살상무기 제조 기술을 손쉽게 접하게 되면서 이란,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은 국가 위상의 제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 군사안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WMD 확보 노력 을 계속하고 있다.



▲ 스페인 열차 테러 현장

특히, 일부 국가들이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 하고, 개발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는 국제 암거래 등을 통해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은 세계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 탄저균과 사린가스 등의 생화학무기는 제조가 쉽고 생산비용이 저렴 하여 다수의 약소국가뿐만 아니라 테러조직들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는 점도 우려된다.

더욱이 9·11테러를 자행한 단체가 ‘알 카에다’라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테러집단이라고 알려지면서, 테러와 WMD 확산 방지 문제는 일부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차원의 문제이므로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범세계 차원에서 대 테러는 물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대책이 구체화되게 되었다. 이는 대 테러와 비확산이 앞으로 상당기간 국제안보 분야에서 핵심적인 현안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NSS :
National Security Strategy

특히 2006년 3월 16일 미국은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테러와 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네 가지 목표를 발표하였다. 이는 ① 예방 차 원에서 테러리스트를 공격, ② 테러리스트와 불량 국가들 간 WMD 거래 차단, ③ 불량국가들의 테러리스트그룹 지원 차단, ④ 테러리스트들의 특정 국가 기지사용 차단으로 테러를 밟본색원하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EU는 2004년 3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서 대 테러선언을 채택하여 테러와 관련된 정보교환, 사법협력, 국경통제, 테러자금 차단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대 테러체제와 비핵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간의 정보교환, 수사협조, 테러분자 색출과 인도 등에 관한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 테러와 비핵산을 위한 자금동결, 민주화 지원 등 비군사적 수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과 지역 차원에서 테러예방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비핵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화학무기금지조약(CWC) 및 생물무기금지조약(BWC) 그리고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국제협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대량살상 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비핵산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3. 지역적 불안정성과 국지분쟁의 지속

영토 · 자원 분쟁, 종교 · 인종 · 민족 갈등, 분리 독립운동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지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2006년 12월 말 현재 중동에서는 2003년 3월에 개전한 이라크 전쟁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2006년 7월의 이스라엘-레바논전은 종전이 되었는데도 분쟁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수단 내전은 1983년 이후 21년 동안 지속되었고 현재도 다민족 구성, 권력이양 등의 이유로 분쟁이 잠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도처에서는 크고 작은 국지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시아파 · 수니파 간의 종파 분쟁이 확산되는 한편,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정파 간의 의견대립 등으로 당초 다국적군이 계획했던 이라크의 안정화 작전은 차질을 빚고 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마스 내각이 2006년 출범하면서 양측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긴장이 고조되었다. 또한 2006년 7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로 진격하여 헤즈볼라와의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등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하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들이 민주화와 정권교체 과정에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01 장 >>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 이스라엘 – 레바논간 전투

카스피해 연안 에너지를 둘러싼 관련국 및 강대국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지역의 정세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서남아시아에서는 인도·파키스탄의 분쟁이 지역 불안의 요인으로 되고 있다. 양국 간에는 카슈미르 귀속문제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무력분쟁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양국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경쟁을 지속하면서도 군사적 충돌예방을 포함하여 긴장완화

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듯 냉전 종식 이후에도 지역적 불안정성에 따른 국가 간의 무력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민족과 자원 및 종교에 기인하는 내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지분쟁에 따른 인권침해, 난민발생, 기아 및 테러 등은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될 당면 문제이다.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세계적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협력이 증진되는 추세 속에 동북아 지역도 경제적 협력관계와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북핵문제로 구조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고, 양안 문제, 역사문제, 도서 및 영토분쟁 등의 갈등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 최대의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고 각국의 군사력 현대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한편, 역내 국가 간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이 표면화되고 있어 지역 불안정의 요인이 되고 있다.

1. 역내 안보구도

동북아 지역 역시 국가 간에 경제적 협력관계와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본의 경기회복 추세, 그리고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에 힘입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역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아세안(ASEAN)+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통하여 다자간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역내 질서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견제와 대립의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와 기술 중심의 번영을 추구하는 경제적인 면의 질서보다는 정치·군사 차원의 주도권 확보를 추구하는 지정학적 질서가 우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안보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대테러와 비핵산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보통 국가의 보통 군대화’를 추구하면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인도양을 넘어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FTA :
Free Trade Agreement

ASEAN+3 :
ASEAN+한·중·일

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RF :
ASEAN Regional Forum
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01 장 >>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중국과 러시아도 전략적 제휴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이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증진하며 군사교류협력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지역에는 냉전적 안보 구도가 해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적 갈등·대립 구도와 협력 구도가 공존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 역내 강대국들은 역동적인 안보 역학 관계 속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역내 안보현안

동북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첨예하게 안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 중에서 북한의 핵 문제는 동북아는 물론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 이자 도전 요인이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에 돌입했고, 북한이 이에 대해 반발하는 등 역내 안보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대북 금융제재와 대량살상 무기화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에는 반대하면서도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양안 문제, 역내 국가 간 역사 인식의 차이, 도서 및 영토분쟁 우려 등 지역 갈등요인이 잠복되어 있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막기 위해 제정한 ‘반국가 분열법’ 제정 1주년이 되는 2006년 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만의 독립을 강력히 반대하는 정치적인 결의를 채택하였고, 대만의 ‘천수이벤’ 총통은 그 전날 “대만의 독립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양안 문제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졌다.

한편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고, 일부 보수 세력들이 과거의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등 동북아 평화증진에 역행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변국들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조어대(釣魚臺) : 중국명 담오위타이례위, 일본명 센카쿠 제도),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북방 4개 섬을 둘러싼 분쟁 요인이 내재해 있다. 조어대 주변 해역은 천연가스와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해양 공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설정과 관련하여 역내 국가들은 서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 편차의 존재가 바로 잠재적인 분쟁요인이 되고 있다.

EEZ :
Exclusive Economic Zone

3. 역내 주요 국가의 군사동향

군사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동북아에는 유럽이나 그 밖의 지역과 같은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는데,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등 군사강국들이 나름대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대부분 군사변혁이나 군사혁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군사력을 첨단화하여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을 개관해보면 【도표 1-1】과 같다.

☞부록 1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참조

【도표 1-1】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05-2006 (原著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5.10.) 등

01 장 >>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가. 미국의 군사동향

G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GPR)’에 따라 유사시 언제 어디서든 가용병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치중하면서 해외의 해·공군기지를 중추기지로 확보하여 유사시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기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147만여 명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군사변혁을 추진하여 합동기동군 개념의 여단 중심형 군 구조로 재편해 나가고 있다.



▲ 미 ‘Valiant Shield 2006’ 기동훈련 장면

용감한 방패(Valiant Shield) 훈련 :
22,000여 명의 병력과 항공모함 3척
등이 참가하고 최초로 중국 참관단이
참가하여 괌 일대에서 실시함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동북아 지역에서도 미군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한 미군 재배치 계획이 2004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되어 추진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지난 2006년 5월 1일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병력 8천 명을 괌으로 이동시키고, 워싱턴에 배치된 미 육군 1군단사령부를 일본의 자마 기지로 이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CSG :
Carrier Strike Group

AWACS :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현재 동북아 지역의 미군은 1개 항모강습단(CSG)과 8개 전투비행대 대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등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성능 정보수집체계와 수집된 첨보를 분석·평가하여 작전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전력체계와 이와 연계된 정밀타격전력을 구비하고 있다.

나. 일본의 군사동향

일본은 2006년 3월 통합막료회의를 폐지하고 통합막료감부를 신설하여 통합막료장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지휘통제하고 방위청 장관의 군령권 집행을 보좌하도록 그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정보본부를 장관 직속에 두도록 개편하였다. 또한 방위청을 ‘성(省)’으로 승격하는 방위성 승격 법안이 2006년 6월에 의회에 제출되어, 12월15일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자위대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게 되었다.

자위대는 24만여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보 분야의 군사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정찰위성 4기를 조기에 확보하고, 정보수집용 무인 정찰기 도입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는 구형 무기체계를 과감히 도태시키면서 신형 전차, SM-3 탑재 이지스함, 13,500톤급 헬기모함, 공중급유기 등 첨단 무기 체계를 증강하고 있다.

또한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해 10월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MD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해상배치요격미사일과 지상배치요격 미사일의 배치를 시작하여 미·일 공동으로 2010년까지 MD체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의 통합운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훈련 횟수를 늘리고 입체적인 지휘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위대 통합 C4I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집약·전달·공유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일미군과의 상호운용성과 통합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5월 주일미군 개편안에 최종 합의하였다.

다. 중국의 군사동향

중국의 군사전략은 ‘첨단기술 조건하 국지전 승리’ 전략으로 정보화·기계화를 동시에 추진,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군 구조 개편, 총체적 전쟁수행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전략개념을 바탕으로 군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지상군의 신속대응 능력, 해군의 원양 작전

SM-3 (Standard Missile 3) :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100km 이상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 PAC-3 (Patriot Advanced Capability 3) : 요격미사일

MD(Missile Defense) 체계 :
탄도미사일에 대한 3종 미사일
방어체계로 가장 적국이 미사일
발사 시, 1단계로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요격용 미사일로 요격하고,
실패 시 2단계인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 Ground Based
Interceptor)로 요격하며, 3단계는
개량 패트리엇 미사일인 PAC-3로
방어하는 체계.

01 장 >>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능력, 공군의 장거리작전 능력 강화와 정보전 능력을 향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동평 3호 미사일

중국 국방비에는 인건비·유지비·장비비만 포함되고, 연구개발·무기 도입비 및 군의 영리활동으로 충당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2006.5.23)는 중국의 실제 국방비 규모를 700~1,050억불로 추정하고 있음.

한편, 중국군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12월 까지 20만 명의 감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병력은 약 22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36%에 해당한다.

예산은 2006년 3월 4일 전인대(全人大) 회의에서 2006년 국방비를 전년대비 14.7% 증액(5년간 2배 증액)한 351억불(2,838억 위엔)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2005년 총예산의 7.43%에 해당하며, GDP 대비

전력증강을 위해 전략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공격헬기부대를 주축으로 한 육군항공단의 증설, 동남부 지역에 기동 전술미사일부대 창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3척과 킬로급

잠수함 11척을 도입하여 근해 방어작전 능력을 향상하였으며, 최근에는 뤼하이(旅海)급

미사일 구축함 4척의 추가 건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정거리가 8,000km에 달하는 쥐랑(巨浪)-Ⅱ형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총 3척을 취역할 예정이다.



▲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 Su-27(Flanker)

더불어 러시아에서 Su-27/30을 비롯한 최신예 전투기를 도입하고 나아가 기술이 전을 통하여 면허생산도 하고 있다. 2006년 8월 현재 조기경보기 콩징(空警)-2000의 시험비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0대(1개 연대) 규모인 공중급유기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의 공중 급유 장치를 보완하여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확대하고 있다.

라. 러시아의 군사동향

러시아는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군사력을 질적으로 증강하여 ‘강대국 위상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지·해·공·전략·우주군으로 유지되던 5군 체제를 2005년 지·해·공군의 3군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그 밖의 전략미사일군·우주군·공정부대 등 3개 병종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6년까지 국방부 예하병력을 120만 명에서 103만여 명으로 감축하였고, 앞으로 현 수준의 병력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러시아군은 현재의 혼합병제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계약에 따라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수가 55%를 넘어서고 있으며 2008년에는 70%로 늘릴 예정이다.

전략무기의 경우 양적으로는 감축하고 있지만, Topol-M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을 2005년 까지 4개 연대에 실전 배치하여 핵전력 부대의 신속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Topol-M 미사일을 해상발사용으로 개량한 Bulava (SS-NX-30) SLBM을 개발 중이고, 2008년에 전략 핵잠수함에 탑재하여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Tu-160 Blackjack전폭기를 개량하여 핵전력을 현대화하여 전략적 억지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Topol-M 미사일

제3절 북한정세와 군사위협

북한은 2006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국정운영의 중점을 '선군정치' 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통한 체제 강화'에 두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위폐문제 등 불법행위와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말미암아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경색되고 있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양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여전히 한반도와 지역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1. 북한의 당면정세

가. 내부정세

북한은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심으로 체제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고, 일부 당·정 조직을 개편하여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체제유지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핵 실험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핵실험 성공 환영 군민(軍民)대회'를 개최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해 오고 있다.



▲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핵실험 성공 기념 군민대회 장면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식량과 에너지 난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혁과 기간산업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식량 증산을 위하여 영농

『부록 2 “남북 경제지표 비교” 참조

방법을 개선하고 생필품 증산을 위해 경공업을 중점 육성하는 등 주민들의 기초생활 향상과 경제발전 기반구조 재건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홍수 등 재해가 겹쳐 경제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대외교류 증가에 따른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일탈현상 단속과 비정부기관(NGO) 요원의 방북 제한, 탈북자 단속강화 등의 통제조치와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한 2005년 11월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대 방문 활동이 대폭 증가하였다(2005. 1월 ~ 10월, 30회 → 2005. 11월 ~ 2006. 6월, 64 회). 이는 미국의 추가제재 등 상황악화에 대비하여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독려하고, 충성심을 고취하여 체제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북한군은 최근 신형 지대지 · 지대함 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미사일의 개발과 전력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천마호 전차 생산과 장사정포 탄약의 성능개량을 위한 시험사격 등 일부 핵심전력을 계속하여 증강하고 있다.

또한 기계화부대의 기동훈련과 동 · 서해에서 합동상륙훈련을 활발히 진행하고 서해안 초계비행을 실시하는 등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나. 대외정책

북한과 미국은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기본적인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경고에 구애받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하여 관계가 더욱 경색되었으며, 앞으로 6자회담의 향방과 핵문제 해결 진전 상황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납치자 문제와 우경화 경향, MD체계 구축 등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계속하여 강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미사일 시험발사



▲ 김정일 국방위원장 군부대 방문 기념 촬영

01 장 >>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와 핵실험 이후 일본이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하면서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는 정상회담을 비롯한 당·정·군 고위 인사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양국을 후원세력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핵실험 이후 양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하면서 외교적 갈등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다. 대남정책



▲ 이산가족 상봉 장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등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하면서,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사업 등 실리 위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족공조를 내세워 주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반미투쟁을 선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과 한미 동맹관계의 이간을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경제적 실리획득을 위하여 남북한의 교류와 회담에는 적극적이나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2. 북한의 군사 정책·전략 및 군사지휘기구

가. 군사 정책과 전략

- ◆ 4대 군사노선
- ① 전 국토의 요새화
- ② 전 인민의 무장화
- ③ 군 장비의 현대화
- ④ 전군의 간부화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군사정책으로 채택한 아래 오랫동안 전쟁준비를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군사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난의 심화를 무릅쓰고 국가 자원을 군사부문에 우선 배분하여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북한군의 군사전략은 한반도 전장여건을 감안하여 초전 기습공격과 정규·비정규전의 배합전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강력한 화력과 기계화·자주화 기동부대로 전과 확대를 달성하여 미 중원군 도착 이전에



▲ 북한군 군사훈련장면

전쟁을 종결하는 단기속전속결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전력을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군사비를 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의 군사비는 당국에서 발표하는 것 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06년 4월 최고인민회의 11기 4차 회의에서 2006년도 국방비를 국가 총예산의 15.9% 수준으로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과 예산체계를 고려할 때 실질 군사비는 국민 총소득(GNI)의 3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북한의 군사비는 발표된 군사비 이외에도 군수 경제운영 체제와 무기수출, 군부대 외화벌이 사업 등 독자적인 군 예산 체계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록 3 “북한 연도별 군사비” 참조

나. 군사지휘기구

북한 군사지휘의 최상위기관은 국방위원회이다. 국방위원회는 전반적인 국방사업을 결정하고 지도하는 기관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인민무력부는 군 관련 외교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 대표성이 있으며, 총정치국은 군의 당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리하고, 총참모부가 실질적으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통합군 체제로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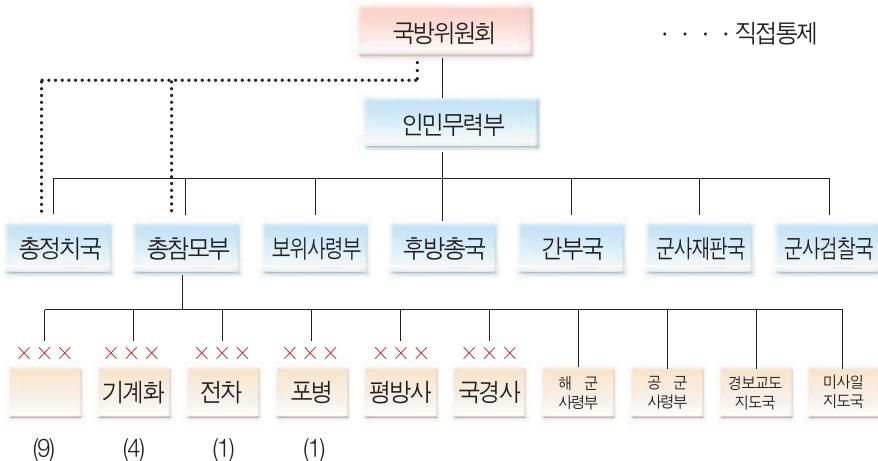
01 장 >>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 총참모장 김영춘

김정일 국방위원장체제 출범 후 인민무력부장과 총정치국장, 총참모장을 직접 통제하면서 인민무력부의 위상과 기능이 과거에 비해 약화는 되었으나 인민무력부가 여전히 군의 대표기능은 계속 수행하고 있다. 국방위원회의 예하 기구로 인민무력부가 편성되어 있으며 북한의 군사지휘 기구도는 【도표1-2】와 같다.

【도표1-2】 북한의 군사지휘 기구도



3. 북한군의 편성 · 장비 및 배치

가. 지상군

북한 지상군은 9개 전후방군단, 4개 기계화군단, 1개 전차군단, 1개 포병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 등 총 19개의 군단급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전투부대는 75개 보병사단(교도사단 포함), 30여 개 포병여단, 10여 개 전차여단, 20여 개 기계화여단, 25개 특수전여단, 10여 개 기타 여단 등 총 170여 개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은 전방에 4개 군단, 후방에 1개 전차군단, 2개 기계화군단과 1개 포병군단 등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배치하고 있어 유사시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의 공격전력 가운데 큰 위협중의 하나인 전차는 T-50 계열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군은 기존 T-62 전차의 주포를 교체하고 반응 장갑을 부착하는 등 성능을 개량한 천마호 전차를 생산·배치하고 있다. 특히 전방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170밀리 자주포와 240밀리 방사포는 우리의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 현 진지에서 수도권에 대해 기습적인 대량집중사격이 가능하다.

북한 지상군의 주요장비 보유현황은 【도표1-3】과 같다.

한편, 전방군단 특수전부대를 포함한 12만여 명에 달하는 특수전부대는 유사시 남한 전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하여 후방지역 교란과 혼란 조성을 기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전선 지역의 주요 접근로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땅굴을 통해 은밀 침투를 병행할 때에는 기습의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 천마호 전차



▲ 170밀리 자주포



▲ 특수전부대

【도표 1-3】 북한 지상군의 장비현황



01 장 >>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나. 해 군

북한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서해의 2개 함대사와 12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함정 보유현황은 【도표 1-4】와 같다.

【도표 1-4】 북한 해군의 함정현황



※ 지상군 소속 해상경비정(160여 척)은 제외



▲ 상어급 소형 잠수함



▲ 로미오급 잠수함



▲ 코마급 유도탄 함정

전투함정 중 수상전투함정은 경구축함, 경비함, 유도탄함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투함정은 약 60%가 전방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유도탄함정은 대함 미사일 2~4기를 장착하고 있다.

잠수함정은 로미오급·상어급 잠수함과 침투용 잠수정 등 60여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과 특수전 부대의 침투지원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지원함정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상륙함 등의 상륙용 함정과 소해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해군은 2개의 저격여단과 공기부양정 130여 척, 고속상륙정 90여 척 등 260여 척의 병력수송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공기부양정은 40~52kts의 고속기동이 가능하다.

다. 공 군

북한 공군은 공군사령부 중앙통제 아래 4개 비행사단과 2개의 전술수송여단 및 2개의 공군저격여단, 그리고 지상방공부대로 5개의 SAM 여단 및 3개의 전탐기 연대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 공군의 항공기 현황은 【도표1-5】와 같다.

【도표1-5】 북한 공군의 항공기 현황



이중 전투기의 약 40% 정도를 평양-원산 이남 기지에 전진 배치하고 있으며, 서남부·서북부·동부·동북부 등 4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주요 공군전력을 배비하고 있다. 특히 AN-2기를 이용하여 저공·저속으로 아군 후방 깊숙이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비행기지는 20여 개의 작전기지를 포함하여 예비기지, 비상 활주로 등 다수의 비행기지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작전기지는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격납고와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다.



▲ MiG-29 전투기

01 장 >>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 SA-5 지대공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부대는 장거리 고고도 SA-5 미사일을 동·서부에 배치하고, SA-2/3 미사일은 DMZ 일대와 동·서 해안, 평양권 지역에 밀집 배치하고 있다.

라. 예비전력

북한은 사회 전체가 거대한 병영체제로서 「4대 군사노선」에 따라 전 인민을 무장하고 있다. 현재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전시동원 대상으로 하여 770만여 명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5~30일 동안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노농적위대

북한 예비전력은 전투 동원대상인 교도대(남자 : 17~50세, 미혼여자 : 17~30세)가 62만여 명, 향토예비군 성격의 노농적위대(17~60세 남자와 17~30세 미혼여자 중 현역과 교도대 미편성자)가 572만여 명, 고등중학교 군사조직에 해당하는 붉은청년 근위대(14~16세, 4~6학년)가 94만여 명이며, 그 외에도 호위사령부, 인민보안성, 군수동원총국, 속도전청년돌격대 등 약 42만여 명의 준군사부대가 있다.

마. 전략무기 개발

1) 핵 개발

핵연료 주기 :
광석상태의 우라늄이
정련·변환·농축·가공 단계를
거쳐 원자로에서 사용된 후,
재처리, 재활용 및 고준위
폐기물 영구처리 되기까지의
전 과정

※부록 4 “북한 핵문제 관련
경과 일지” 참조

북한은 1960년대에 영변에 핵시설을 건설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핵연료의 정련·변환·가공 기술을 집중 연구하였다. 1980년대 이후 5MWe 원자로를 가동하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핵물질을 확보하는 등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고, 이와 병행하여 고폭실험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94년 북미 기본합의 이전에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 10~14kg으로 핵무기 1~2개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 후 북한의 주장대로 2003년과 2005년에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을 경우 30여kg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적 대북제재와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2006년 10월 3일 핵실험 계획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후, 2006년 10월 9일 전격적으로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한편, 북한이 해외에서 원심분리기 관련 부품을 도입하는 등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추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관련 정보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원심분리기 :
고속회전 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U^{235} 와 U^{238} 을
분리시키는 장치

2) 중 · 장거리 미사일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에 사정거리 300km의 SCUD-B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후, 사정거리 500km에 이르는 SCUD-C를 생산하여 작전배치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작전배치하였다.

1998년 8월에는 대포동 1호 발사 실험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운반체의 엔진연소와 탄체의 다단계 분리 등 제반 기능을 실험한 것으로 보아 중 · 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를 개발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5일에 대포동 2호 미사일과 SCUD/노동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하였다.

대포동 2호는 사정거리가 6,700km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나, 운반체의 무게를 줄이거나 3단계 추진 로켓을 추가 장착할 경우, 사정거리는 더 연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포동1호 미사일

01 장 >>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3) 화생무기

화학화 선언 :
1961년 12월 25일 인민군
당위원회 전원 회의 시 김일성이
“인민군대를 화학화하고,
화학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라”고
지시

북한은 1961년 12월 김일성의 ‘화학화 선언’ 이후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화학무기를 연구하고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학무기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독가스와 세균무기를 생산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은 여러 개의 화학공장에서 생산한 약 2,500~5,000톤의 신경작용제 등 각종 작용제 등을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 탄저균·천연두·콜레라 등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2장

국방정책 기조

제1절 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

제2절 국방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제3절 ‘선진정예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제1절 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의 활동이다.

참여정부는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국가이익을 도출하고 우리의 안보환경과 국가역량을 고려하여 국가안보목표와 국가안보전략기조를 설정하고, 이를 「국가안보전략지침」으로 제시하였다.

1.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목표

국가이익은 국가의 안전보장, 번영과 발전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어떠한 안보환경에서도 일관되게 지향해야 할 가치를 의미한다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① 국가안전보장, ②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③ 경제 발전과 복리증진, ④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⑤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라는 다섯 가지 이익을 국가이익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영토·주권을 수호하여 국가 존립을 보장하고, 자유·평등·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적인 가치와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며, 국민경제의 번영과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평화공존·공동번영의 남북관계 정립과 통일국가 건설을 지향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 추구와 선린우호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국가안보목표는 국가이익의 핵심적 요소인 국가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서 당면한 안보환경과 가용한 국력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목표이다. 정부는 국가안보목표를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②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③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로 설정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해 대응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은 남북간 화해협력을 기초로 함께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동북아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의 공동번영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는 국가의 안보관심을 국민 개개인의 안전문제로까지 확장하여 다양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2. 국가안보전략기조와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정부는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전략 기조를 다음 네 가지로 구체화하여 분야별 지침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공존·공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평화 번영 정책 추진’, 둘째, 대외관계에서 우리가 동시에 실현해 나갈 대립되거나 상이한 목표와 요구들 사이에 균형을 취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셋째,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을 추구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넷째, 대내외의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포괄적 안보 지향’이다.

비군사적 위협 :
국가 및 비국가적 행위자의
군사력 이외의 수단 또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위협

이 가운데 국방 분야에서 구현해야 할 중요한 지침은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이다. 참여정부는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도발할 경우 이를 격퇴할 수 있는 대북 억제력을 갖추되, 동맹과 대외 안보협력을 활용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을 국가안보전략기조의 하나로 설정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02 장 »국방정책 기조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통령의 전략지침을 구현할 수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대외 안보협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도발해 올 때에는 이를 격퇴하는 데에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위적 방위역량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위적 방위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국방개혁 2020」으로 발전되어 ‘21세기 선진정예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2절 국방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다양한 국방여건에서 국가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구현 할 수 있도록 국방정책목표를 정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국방목표는 1972년에 제정된 이래 1981년과 1994년 두 차례 개정된 것으로, 국가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참여정부 의 국가안보목표, 국가안보전략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1. 국방목표



▲ 2006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국방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로 설정하였다.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 한다는 것은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미래의 모든 잠재적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실험,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둘째, ‘평화통일을 뒷받침’ 한다 함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이룩하여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함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한다 함은 우리의 국가위상과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인접 국가들과 군사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등 국제사회의 세계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2. 국방정책 기본방향

국방부는 국가안보목표와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방정책 기본방향을 ①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③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④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으로 설정하여 군의 역량을 집중하여 일관성 있게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가.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우리 군은 어떠한 유형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춤으로써 적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하는 경우에는 전승을 달성할 수 있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전면전 도발이나 침투·국지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한반도 전쟁억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감시정보·조기경보 체계를 유지하고 위기관리체제와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재조정을 추진하면서 연합 작전능력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참의 조직을 보강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최근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된 국제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테러 유형별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 테러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와 대 테러 작전부대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무형전력의 극대화를 위해 장병 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와 신세대 장병의 성향을 고려하여 신세대 장병 특성에 부합된 정신교육 기법을 개발하고, 국군 TV와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정신교육 프로그램과 시청각교재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장병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나.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국가안보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고 확고한 국방태세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국가전략, 정치·경제의 국제적 위상, 한미동맹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는 동맹이나 대외 군사협력을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자주적인 국방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비롯된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으로서 우리 안보에 대한 자주적 역량을 갖추어 나갈 때, 한미동맹도 더욱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온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주한미군 재조정, 동맹비전 공동연구와 지휘관계 협의, 연합군사능력 발전 등 최근의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되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주적 전쟁억제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미래 잠재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하고,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적 기술능력 확보와 방위산업기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자주 국방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우리 안보에 유리한 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외 군사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익 증진과 국제적 위상제고를 도모할 것이다.

다.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국방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자기평가와 개혁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제한된 국방재원 범위에서 국방운영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관리체제로 혁신하기 위해 국방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공무원 전문성 향상 교육

국방부본부의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문민 중심으로 국방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국가정책과 군사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각 군 간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군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현대전의 승패는 병력규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화된 첨단 무기·장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군도 군 구조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연계하여 간부의 비율을 확대하고 정예 국방인력을 확보·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국방관리체제를 혁신하여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혼저히 높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방자원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요구 증대, 무기 체계의 고도정밀화와 다양화에 따른 운영 유지비의 증가 등 국방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군수분야의 발전과 네트워크 중심의 전장운영 개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국방 정보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양질의 전투근무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부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상비병력은 전투·작전 임무에 집중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장병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병영환경과 복지여건을 향상하고, 선진국형 군 의무지원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장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라.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아무리 첨단무기와 장비로 무장된 강력한 군대라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군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병영문화 개선, ‘열린 국방’ 구현, 국민편익증진 등의 대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새로운 병영문화 개선은 군 생활 중 자기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목표를 부여하여 ‘개인도 발전하고, 나라도 지키는 군’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군대를 만들어 나가며,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각종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참여와 개방성·투명성이 보장되는 ‘열린 국방’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병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고객지향성을 제고해 나가며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국방 현안과 국민의 관심사항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 또한, 국방정책 발전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안전과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민의 국방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즉, 국가적 재해·재난관리와 복구지원을 위한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고, 각종 군사 활동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관련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군 환경시설 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국민의 입장에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02 장 »국방정책 기조

있도록 각종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3절 ‘선진정예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국방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협력적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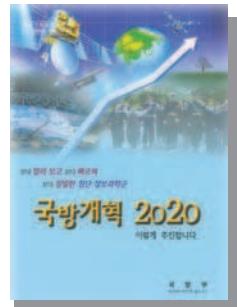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은 한미동맹 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미래 안보상황과 전쟁 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개편하고 전력체계를 확보하여 통합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첨단 정보 과학군을 지향하고 있다.

더불어,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인력운용 체계, 획득 및 군수지원체계, 국방정보화 등 국방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여 ‘21세기 선진정예강군 건설’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1. 「국방개혁 2020」 발전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2005년 1월부터 과거 국방개혁의 미비점과 일부 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구조적·제도적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분석함은 물론, 주요 국가들의 개혁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방개혁 2020」을 작성하였다.

「국방개혁 2020」이 지향하고 있는 장기 국방비전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자주적 선진국방’의 구현이다. 이는 미래 안보 상황과 전쟁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집약형 군 구조와 전력체계를 완성하여 ‘자위적 방위역량’을 확보하고,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의 요구에 부응한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02 장 >> 국방정책 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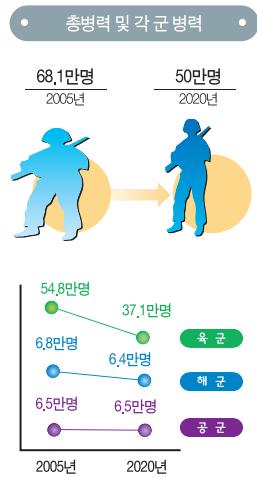
이러한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부는 2005년 6월 1일부로 「국방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방개혁안을 작성하였고, 2005년 9월 1일에 「국방개혁 2020」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국방개혁의 목표를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정예강군 건설’로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4대 중점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군 구조와 전력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국방의 문민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군은 전투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하며, 셋째, 첨단 정보과학군에 부합한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 체제로 혁신하고, 넷째,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로 개선함으로써 국방전반의 체질을 개선하여 효율적 국방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다.

2. 국방개혁의 핵심과제

이번 「국방개혁 2020」은 안보상황의 전망과 우리의 역량을 참작하여 2020년까지의 개혁구상을 담고 있으며 국방개혁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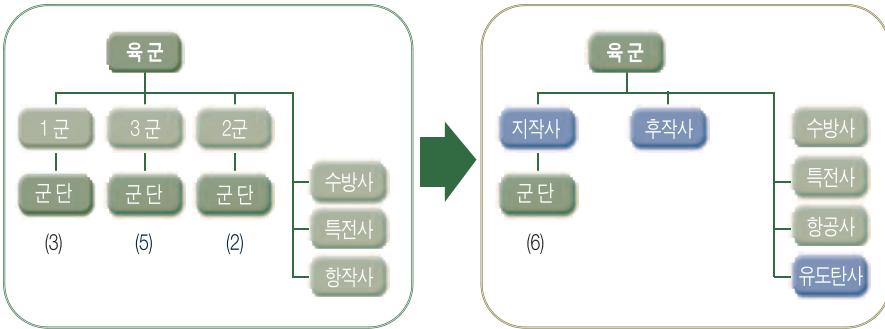


먼저 군은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질적으로 정예화하여 과학기술군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2005년 68만여 명의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방위기획과 작전수행의 중심기관으로서 육·해·공군의 통합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과 조직을 강화할 것이다.

육군은 군단과 사단의 수는 줄여 나가되, 단위 부대의 전투력은 2~3배로 강화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여 무인정찰기·차기 전차와 장갑차·화력체계 등을 증강하고 지휘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현대전 양상에 적합한 조직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육군 부대구조 변화는 【도표 2-1】과 같다.

【도표 2-1】 육군 부대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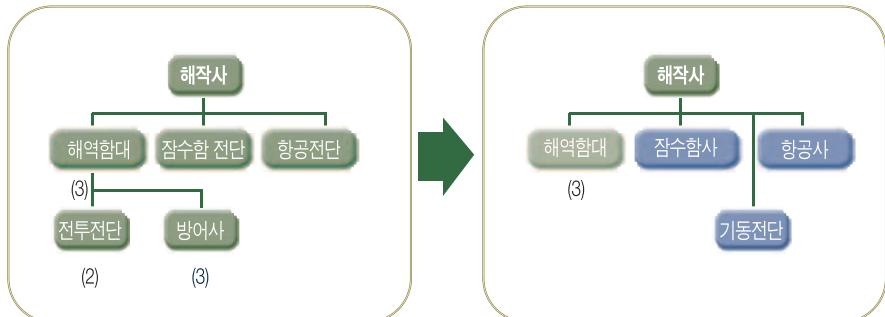


특히, 1·3군을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하고, 2군사령부도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하게 된다. 또한 전후 50년 이상 유지해 온 GOP 경계체계도 개선하여 첨단 경계 장비를 편제한 경비여단이 전담하게 됨으로써 경계 병력은 절감하면서 경계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GOP:
General Outpost 일반전초

해군은 수중·수상·항공 입체전력 운용능력을 강화하여 근해 방어형 전력구조에서 해상교통로와 해양자원 보호 등 전방위 국가 이익을 적극 수호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예정이다. 부대 구조는 지금의 3개 함대사와 잠수함·항공 전단체제에서 3개 함대사령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와 기동전단 체제로 보강·개편하여 기동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키고, 미래전장에서 임무수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발전될 것이다. 해군 부대구조 변화는 【도표 2-2】와 같다.

【도표 2-2】 해군 부대구조 변화



해병대는 입체적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지상작전 등의 임무와 상황에 적합한 융통성 있는 공지기동부대와 전략도서방어 부대구조로 발전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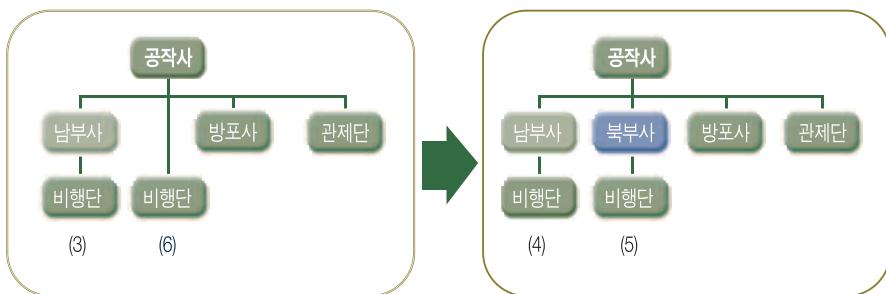
공군은 공중우세와 정밀타격에 적합한 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평시

02 장 » 국방정책 기조

적의 징후를 감시하고 응징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전시에는 공중우세를 확보하여 지상과 해상작전 수행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한반도 전역에 걸쳐 작전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공군 부대구조 변화는 【도표 2-3】과 같다. 한반도 항공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북부사령부를 창설하여 2개 전투사령부, 9개 비행단, 1개 방공포병사령부와 1개 관제단 구조로 바뀔 것이다.

【도표 2-3】 공군 부대구조 변화



예비전력의 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 규모와 연동하여 조정하는 동시에 상비군의 대체 전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정예화해 나갈 것이다.

국방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국방인력이 새로운 군 구조와 전력구조에 부합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부의 구성비를 높이고 유급지원 병제 도입을 추진하며,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방관리 전반을 혁신하여 국방운영의 투명성 · 전문성 · 책임성 · 효율성을 향상하게 될 것이다.

한편,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병사들이 군복무를 인생의 발전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병영 내 자율적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학습 체계를 마련하여, 내무반 등 병영시설을 개선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개혁 2020」의 내용 중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별도의 법안으로 작성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안보 여건과 국방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할 때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정 ·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국방개혁의 효과

이번 「국방개혁 2020」은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국방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소산물이며 군이 수뇌부를 중심으로 시대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 우리 군의 모습은 【도표 2-4】와 같다.

【도표 2-4】 2020년 우리 군의 모습



첫째, 정보 · 지식 중심의 첨단 정보과학군이 되어 선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즉, 적보다 ‘더 멀리 보고, 빠르게 기동하며, 정밀하게 타격’ 할 수 있는 첨단 감시장비와 기동 및 타격 수단을 확보하여 전쟁 억제력을 완비하고 3군 간 균형잡힌 군 구조와 전력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둘째, 효율적 ·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으로 전환되어 국방관리를 혁신하고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자원 절약형 국방운영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병영문화와 복무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상’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5. 법제화 추진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의 주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법안을 작성할 때에 먼저 국방개혁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일관되게 추진 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개혁의 기본 틀과 정신을 반영하는 과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작성한 『국방개혁기본법안』은 대통령의 재가(2005년 12월 2일)를 얻어 국회에 제출하였고, 공청회 실시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2006년 12월 1일).

☞부록 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참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 정부의 기본의무 등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는 국방개혁추진과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방 문민기반의 확대와 국방 인력운용 구조의 발전 등 국방 운영체제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에서는 군 구조 개편과 전력체계의 균형발전 및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지휘관 균형편성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의 병영문화의 개선·발전에서는 장병들의 군 임무수행 여건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병영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6. 2005~2006년 국방개혁 추진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제화 추진과 함께 「군구조개편준비단」을 발족(2005년 12월 1일부)하고 「군 구조 개편 종합추진계획」을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적인 방위기획과 작전 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1차 합동참모본부의 개편을 완료(2006년 1월)하였다. 아울러, 부대운용개념 및 배치 방안, 동원사단 해체 및 전시 재창설 방안, 후방작전사령부 창설 관련 단계별 개편 방안 및 전력 소요 등 군 구조 개편 추진 관련 우선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확정하였다.

02 장 »국방정책 기조

또한 「국방운영혁신준비단」을 발족(2006년 1월 1일부)하여 국방운영 분야의 개혁과제를 추진하였다. 즉, 「국방운영혁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방운영의 문민기반을 확대하고 방위사업청을 신설하여 전력업무 체계의 합리성을 높였다.

더불어, 전투근무지원 분야 아웃소싱 추진을 위한 『군 책임운영기관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장병 자기계발 여건 조성, 병영시설 개선, 『장병복무기본법』 제정 추진 등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국방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방개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운영해 온 「군구조개편준비단」과 「국방운영혁신준비단」을 「국방개혁 추진단」으로 통합 · 편성(2006년 10월 9일부)하여 국방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제3장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태세 확립

제1절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제2절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제3절 전투임무위주 교육훈련

제4절 예비전력 정예화

제 1 절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우리 군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북한의 침투·국지도발·전면전 등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 군별 전력을 첨단화함과 아울러, 확고한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원 즉응태세를 완비하고 장병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군사대비태세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1.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가. 합동참모본부 조직 강화

합동참모본부는 4본부 2참모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직은 【도표 3-1】과 같다. 각 군의 작전사 등 작전부대를 작전 지휘 및 감독하며, 합동 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하여 합동 및 연합작전 등을 수행 한다.

군 구조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합참 중심의 독자적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체계를 갖추기 위해 합참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1단계로 2006년에 정보·작전 위주로 필수 조직을 우선 보강하였고,

【도표 3-1】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조직



2단계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 지휘관계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장차전 양상과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합동성 강화'를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합동개념-실험-전투발전의 연계를 통한 합동전투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합동개념서」를 발간하여 미래전에 대비한 '합동군 운용개념'을 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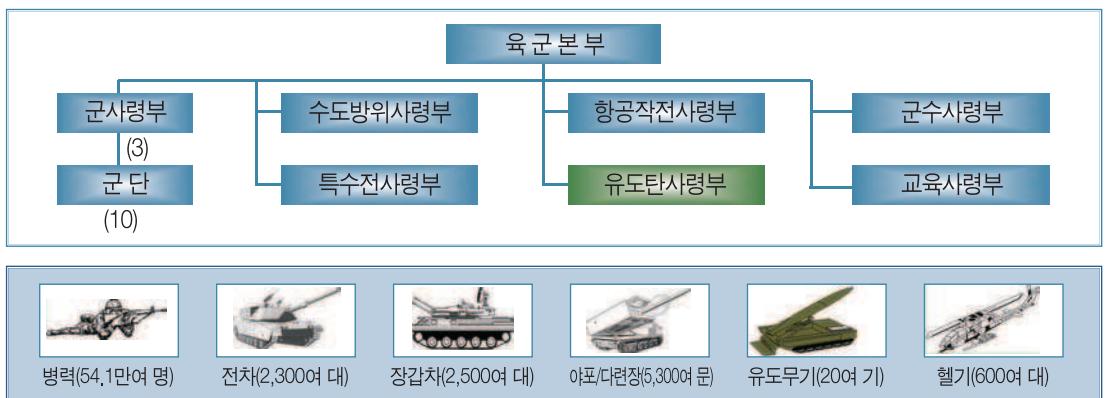
앞으로 제대별 NCW 개념에 의한 전투수행방법 발전 및 전력소요 창출, 합동군사교육제도 개선, 합동교리 발전, 합동특기제도 도입, 합동성 위원회 운용, 그리고 합동참모대학을 '합동성 강화 전담기관'으로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한국적 합동전투발전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나. 각 군별 조직 및 보유전력

1) 육군

육군은 육군본부와 3개 군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유도탄사령부와 이를 지원하는 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2】와 같다.

【도표 3-2】 육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1군과 3군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전방 책임지역의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2군은 1·3군 후방지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한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 서울의 기능유지 지원과 중요시설 방호 등 수도권 방위

03 장 >>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태세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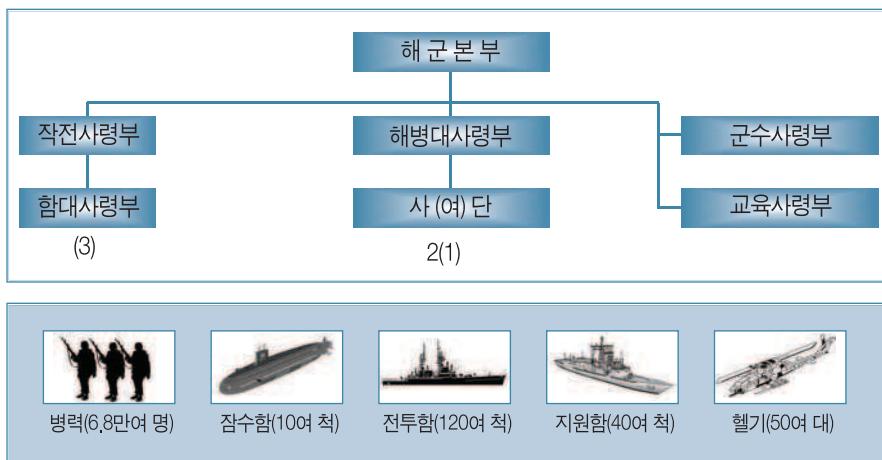
임무를 수행하고, 특수전사령부는 첨보수집과 아군의 화력유도, 그 밖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며, 항공작전사령부는 다양한 기종의 헬기를 운용하여 기동부대에 대한 화력지원과 수송·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2006년 9월에는 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하여 정밀타격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육군은 현재의 병력중심 부대구조에서 병력과 부대 수를 축소하는 대신 무기체계를 첨단화하여 기동력·타격력·생존성·정밀도를 향상하고 지상에서의 공세기동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화되고 완전성이 구비된 기술집약형 부대구조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2) 해군

해군은 해군본부와 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그 밖의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3】과 같다.

【도표 3-3】 해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해상작전을 통제하고 이를 수행한다. 그리고 각종 함정, 항공기를 운용하여 수상전·잠수함전·기뢰전·상륙전 등을 수행하며, 예하의 함대사령부는 구축함·호위함·초계함·고속정 등의 전투함을 운용하여 책임해역 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해병대사령부는 적의 측·후방 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부대로서 평시에는 수도 서울 서측방 방호와 서북도서 방어임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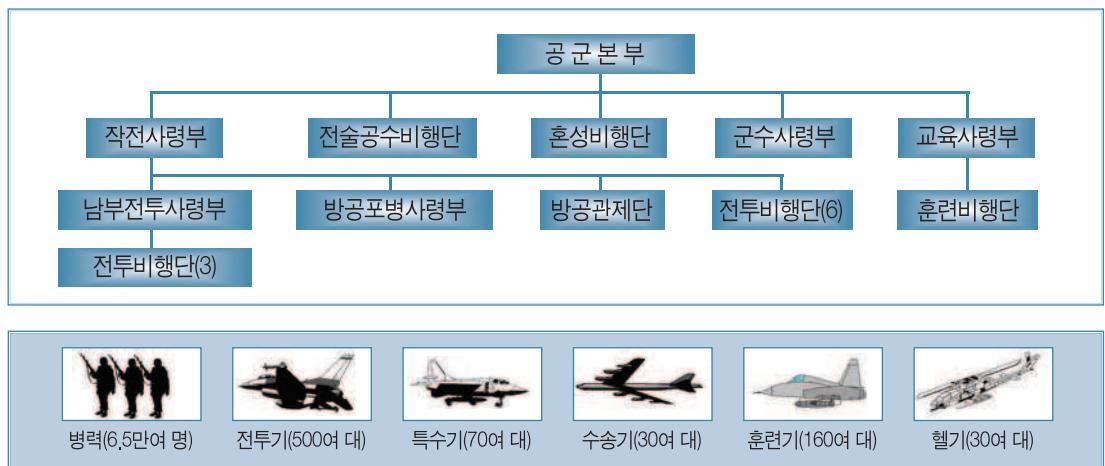
해군은 기동전단을 창설하여 주변 해역에 대한 통제능력을 확대하고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수상·수중·공중을 포함한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해군은 이지스급 구축함, 차기호위함과 장보고-Ⅱ 잠수함, 장보고-Ⅲ 잠수함 등 첨단 수상·수중 전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해병대는 무인정찰기, 상륙용 다련장포와 차기 상륙용 장갑차 등을 확보하여 여단급 상륙작전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3) 공군

공군은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 그 밖의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4】와 같다.

【도표 3-4】 공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작전사령부는 모든 항공전역 수행과정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고, 전투기, 특수기 등을 운용하여 제공작전, 전략공격작전, 항공차단작전, 근접항공지원작전 등의 항공작전을 수행한다. 작전사령부 소속 남부전투사령부는 남부 관할지역에 대한 분권적 전술조치 및 항공작전을 수행하며, 방공포병사령부는 저·중·고 고도별 방공무기를 운용하여 다층적 방공작전을 수행한다.

항공전역(航空戰役)
Air Campaign: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일련의 항공작전

공군은 감시정찰체계, 고성능 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정밀 유도무기 등을 확보하여 공중우세와 정밀타격에 적합한 전력구조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북부 관할지역에 대한 분권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지휘구조로 발전하기 위해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03 장 >>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태세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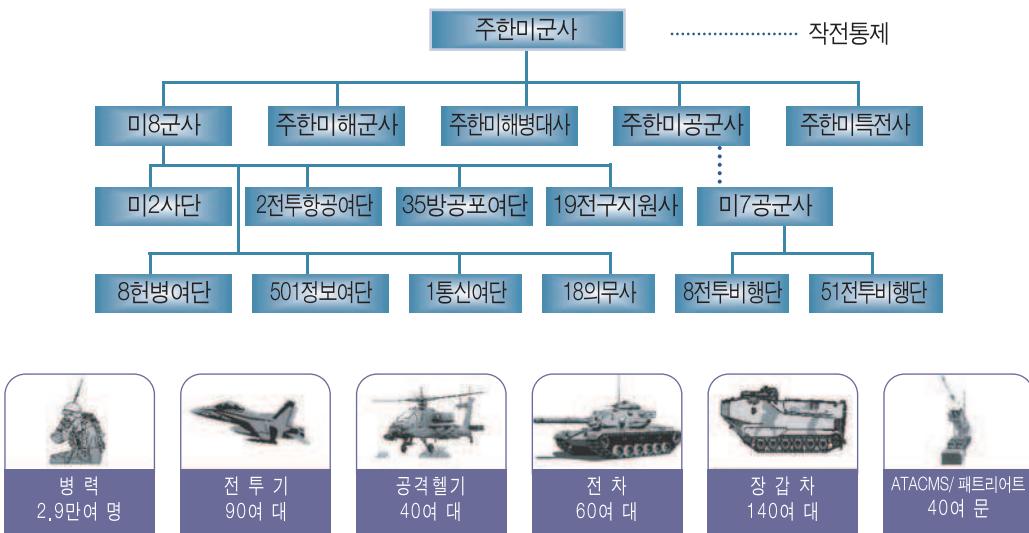
다. 주한미군과 증원전력 운용

1) 주한미군 현황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군/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으며 그 예하 사령부로는 미8군사령부, 주한 미해군사령부, 주한 미해병대사령부, 주한 미공군사령부, 주한 미특전사령부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한미군 사령부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5】와 같다.

【도표 3-5】 주한미군사령부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ATACMS :
육군 전술유도무기체계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
육군에서 운용하는 지대지
미사일로서 사거리는 최대
300km임.

주한미군은 2사단과 2전투항공여단을 주축으로 에이브라함(Abraham) 전차, 브래들리(Bradley) 장갑차를 비롯하여 155미리 자주 곡사포, 다련장 로켓과 패트리어트를 포함한 지대공 유도탄, 아파치헬기 등을 주요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구상(GPR)’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2,500명을 3단계로 감축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하였으며, 감축되는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110억 달러를 투자해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2) 증원전력

유사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 증원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약 69만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의 규모이다.

미 증원전력은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에 따라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전개되며, 이러한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는 ‘신속 억제방안(FDO)’, ‘전투력증강(FMP)’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신속억제방안’은 전쟁발발 이전에 위기가 발생하면 시행되는 외교·정치·경제·군사적 방안으로서 약 13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투력증강’은 ‘신속억제방안’ 등으로 전쟁억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초전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와 전투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조치로, 긴급전개 항공기, 항모전투단 등 주요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TPFDD (Time Phased Force Deployment Data):
유엔사/연합사 작전계획 시행을 위해
연합사령관이 요구하는 미증원부대의
부대전개목록 및 제원을 말함.

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

FMP :
Force Module Package



▲ 미 항모 키티호크

03 장 >>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태세 확립

2. 군사대비태세

우리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테러 등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위협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과 관련하여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하면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능력의 점진적 확충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가. 조기경보와 위기관리체제 확립

우리 군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해·공역에 대해 다양한 정찰 및 감시 수단과 한미 연합정보자산을 운용하여 24시간 감시 및 조기 경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군과 그 밖에 위협세력의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여 실시간에 전파할 수 있는 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상황을 상정하여 각 위기상황별 대응매뉴얼을 작성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위기조치기구를 기능적으로 통합운용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초기단계부터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공동대응하도록 하였다.

위기상황에서는 단시간 내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신속하게 결정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평시 한미 간에 협의체제를 발전시키고 주기적인 한미 연합위기관리 연습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한미 지휘소자동화체계를 광범위하게 연동하고 획기적으로 성능을 개량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침투·국지도발 대비태세 유지

남북한 간 교류증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2년 서해교전에 이어 북방한계선 침범, 비무장지대 무단 월경 및 GP 총격도발 등 대남 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추적·감시함은 물론,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울릉도·독도 등 우리 관할 해역에 대한 초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서북해역에서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하여 절대 우위의 전력을 상시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발할 때 교전규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남북 함정 간 통신체계의 운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 해안경계임무 수행장면



▲ 서북 5도와 독도 초계활동

03 장 >>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태세 확립



▲ F-16 독도 초계비행 장면

또한, 비무장지대와 취약지역의 경계에서 기존의 병력위주 경계 체제를 과학화된 감시장비로 대폭 보완하여 경계태세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남북 도로, 철도 운행 중 남북관리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우발 사태에 대비하여 상시 완벽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 전면전 대비태세 확립

한미 연합군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4시간 한반도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와 신속한 대응조치로 적의 기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경우에는 한미 연합조기경보체제와 신속한 대응조치로 적의 기습을 거부하고, 개전 초부터 적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 핵심 전력으로 정밀타격함으로써 조기에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수립해 놓고 있다. 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전과 같은 연합·합동 연습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합·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증진함은 물론,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간 합동성·통합성·동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리를 정립하고 ‘효과중심작전(EBO)’, ‘정보작전(IO)’, ‘네트워크 중심전(NCW)’ 등 새로운 대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여, 먼저 타격할 수 있는 C4ISR-PGM 체제를 점진적으로 구비해 나가고 있으며 주기적이고 실전적인 연합·합동 연습, 훈련과 점검으로 완벽한 전면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라. 테러 대비태세 유지

우리 군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대 테러작전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테러대비계획을 보완하고자 군사시설 테러와 대 국민 테러 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였다.

EBO :
Effects Based Operations

IO(Information Operations) :
정보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전·평시
가용한 수단을 통합하여 이축의 정보
및 정보체계를 방어하고, 상대의 정보
및 정보체계에 공격을 가하거나
영향을 주는 작전

NOW :
Network Centric Warfare

C4ISR :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및
감시·정찰

정밀 유도무기(PGM) :
Precision Guided Munitions

또한 고도의 진압작전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대 테러 작전부대의 장비를 최신장비로 보강하는 한편, 훈련장 과학화를 추진하고 테러 전담요원인 대 테러 특공대, 초동조치부대, 폭발물처리반, 오염사고처리반 등에 대해 전문화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생·화학 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화학지원대가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대 테러 유관기관과 상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테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고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다.



▲ 부산 APEC 테러대비 훈련

3. 동원즉응태세 완비

우리 군은 전쟁수행 지원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운용하기 위해 평시부터 즉응동원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 인원 동원

인원 동원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 부대의 소요병력을 충원하고, 군사작전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확보하며, 정부 기능유지와 중점관리업체(동원지정업체)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인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병력동원, 전시근로소집, 기술인력동원으로 구분된다.

중점관리업체(동원지정업체) :
전시 동원계획에 의하여 동원할
업체를 지정하여 임무를 고지한 업체

‘병력동원’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 선포 시 군 부대 확장(증편이나 창설)이나 손실보충에 소요되는 병력을 동원하여 군 부대 전투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병력동원은 인원동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전시 병력동원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예예비군을 지정하여 관리하며, 동원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결지를 지역별로 권역화하여 조정하고, 동원병력 수송 및 호송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03 장 >>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태세 확립

‘전시근로소집’은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피해복구, 보급품과 탄약운반 등 전시 노무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전시근로소집자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집대상자를 제2국민역에서 보충역 출신 예비군으로 조정하였다.

‘기술인력동원’은 전투지원과 전투근무지원을 위한 장비를 운용하거나 정비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신기술과 정보화 분야의 기술면허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추가 선정하고 있다.

나. 물자 동원

물자 동원은 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자, 장비, 시설 및 업체 등의 자원을 적시·적소에 동원하여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전쟁 지속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상 자원에 따라 산업동원, 수송동원, 건설동원, 통신동원으로 구분한다.

‘산업동원’은 식품·피복류·유류·축성자재 등의 물자, 생산 및 정비 업체, 홍보매체, 병원 등을 대상으로 군 요구규격에 적합한 품목을 동원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자원 주무부처와 협조하여 정부 합동조사체제를 구축하였다.

‘수송동원’은 유사시에 군에 필요한 자동차·선박·항공기 등 수송용 장비와 정비업체, 운송 및 하역업체 등을 사용동원하거나 통제 운영하는 것으로 동원응소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자원부족 지역은 대체지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사용동원:
일정기간 동원하여 사용하다가
동원해제 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장비를 동원할 때 적용

통제운영:
동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생산, 수리, 가공, 유통과정들을
통제하는 것이며, 통제되는 부분
외에는 업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업체동원 등에 적용

‘건설동원’은 군에 필요한 건물, 토지, 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정비 업체, 건설업체 등을 사용동원하거나 통제운영하는 것으로 동원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해당 시·도에 장비가 부족할 경우 유사장비로 대체하여 동원하도록 개선하였다.

‘통신동원’은 일반통신(국제·국내회선)과 위성통신 회선, 정보통신 업체를 사용동원하거나 통제운영하는 것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민간 분야 정보통신 인프라를 군사작전지원에 적절히 활용하여 전시에 지휘 통제통신 지원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고속 데이터망과 IT업체의 동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4. 장병 정신전력 강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서는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이 확립되고 필승의 군인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는 군의 무형전력 증강 차원에서 매우 중요 하며 전투기량 향상에 버금가는 분야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국방부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국가관), 누구로부터 지켜야 하며(안보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군인정신)”를 확실히 알고 신념화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예장병을 육성함으로써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병 정신전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가. 중점분야와 그 의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며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이다. 이를 확고히 하는 것이 국가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누구로부터 지켜야 하는가는 명약관화하다. 국가의 존립, 안전보장, 자주권 행사, 번영과 발전 등 우리 국가이익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대상이나 이를 지원하고 동조하는 세력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 안보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군인은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울 때 국가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군인의 사고와 행동의 지표이자 기준이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군인정신이다.



▲ 체력단련을 통한 군인정신 함양

나. 구현방법

장병 정신교육은 학교 정신교육과 부대 정신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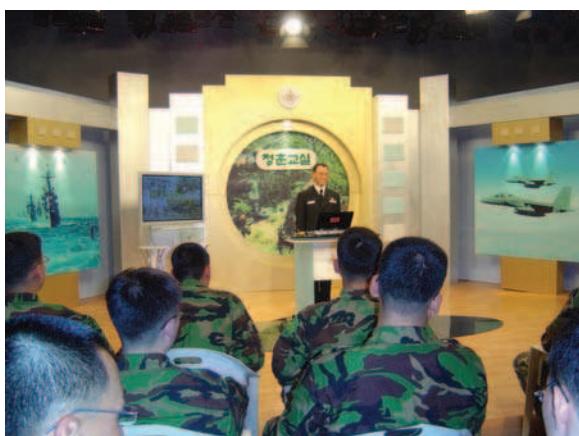
03 장 >>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태세 확립

간부는 학교 정신교육을 통해 정신교육 교관 능력을 구비하고, 입대 장정에 대해서는 군대의 임무와 특성을 이해하여 병영생활에 조기 적응 할 수 있는 ‘군인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신병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대 정신교육은 학교교육과 신병교육을 수료하고 실무부대에 배치된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군인가치관을 신념화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과시간 교육과 병영 생활화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민간 전문강사 초빙교육, 국방대학교 정신교육지원단 순회 교육 등 다양한 정신교육방법을 활용하여 부대 정신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 정신교육이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게 추진되도록 관련 지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수시로 하달하고 있다.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신교육 기본교재를 제작·보급함은 물론, 교관 참고교재 및 장병 정서순화를 위한 정기간행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국군TV 정신교육 자료 녹화 장면

또한 변화된 시대상황과 신세대 장병의 성향을 고려하여 장병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신념화·행동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과학화 시대에 알맞게 교육하기 위해 사이버 정신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정신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 전용 위성 TV방송을 통해 전군 동시교육 체계를 구축하였다.

제2절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북한은 1968년 ‘1·21사태’를 비롯하여 1996년 ‘강릉잠수함 침투’, 2002년 ‘서해교전’, 북방 한계선(NLL) 침범, GP 총격도발 등 끊임없이 대남도발을 자행해 왔다. 지금도 군사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12만여 명의 특수전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군사적 위협 외에 테러, 재해·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용 가능한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이 필요하다.

1. 통합방위 체제

통합방위본부는 통합방위업무의 주무 부서로서, 합동참모의장을 통합방위본부장으로 하여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조정, 통합방위태세의 확인·감독,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분석과 대비책 수립,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침과 계획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통합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통합방위 관련 최고 의결기구로서, 국가적 통합방위정책,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침,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을 심의·의결한다. 지역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통합방위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서,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 사태(을종 및 병종) 선포, 통합방위작전·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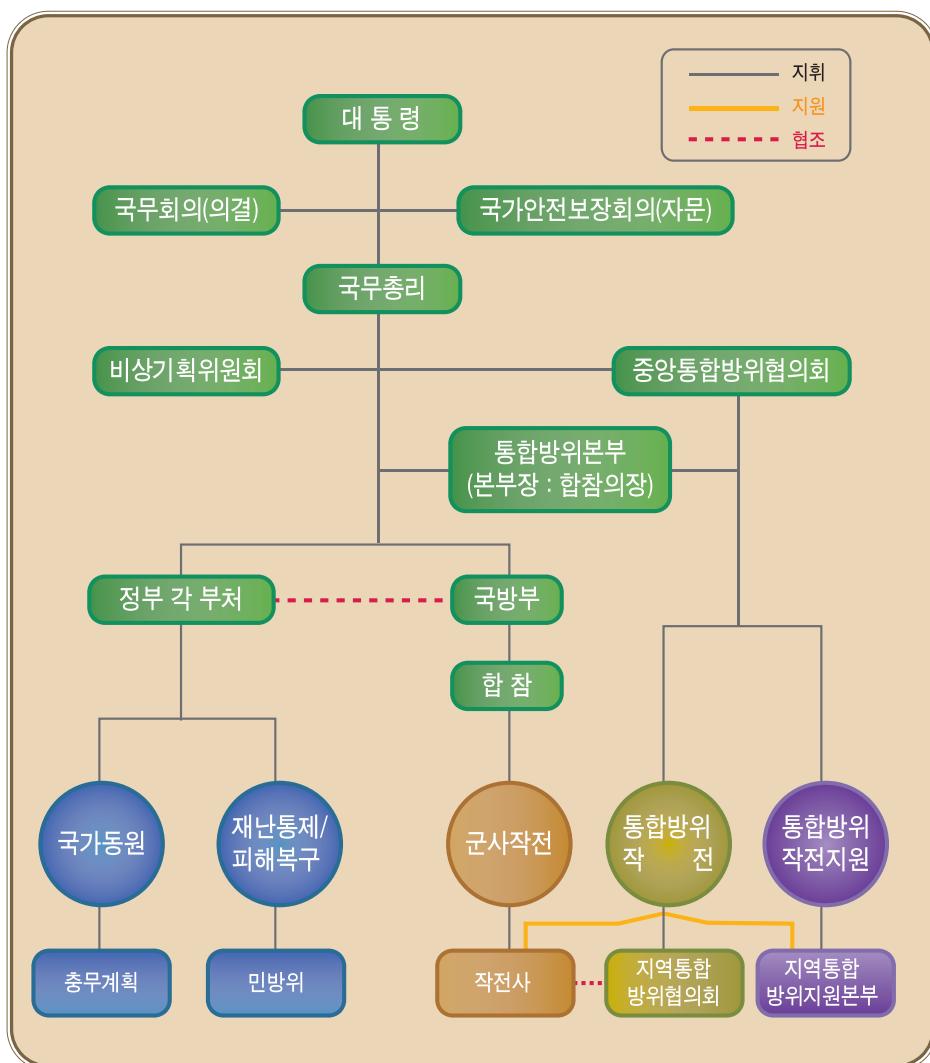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

03 장 >>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태세 확립

지원 대책을 심의 · 의결한다.

또한 광역시 · 도지사 및 시 · 군 · 구, 읍 · 면 · 동장 소속으로 설치된 통합방위지원본부는 통합방위작전과 훈련에 대해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와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 지원, 취약지 주민신고체제 확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표 3-6】 “통합 방위 체제” 참조)

【도표 3-6】 통합방위 체제



2. 통합방위 작전태세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더욱 필요해짐에 따라 지역안보태세확립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적이 침투·도발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작전을 지원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군사령관을 작전지휘관으로 임명하여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단위 민·관·군의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국가방위요소들이 통합방위법규에 명시된 지휘·협조 아래 기능별·제대별 노력의 통합으로 승수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에 따라 유사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적 침투·도발과 재해·재난 등의 사태 발생 시 민·관·군 작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통합통신망을 구축하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IT시대에 걸맞은 수직·수평적 정보 공유를 위해 광역시·도 상황실과 광역통신망(WAN)과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휘소 내 각 기능실 간 근거리 통신망(LAN)과 CCTV, 양방향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에 상황을 확인·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보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 상황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다.

국가 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자체 방호계획을 발전시키고, 과학화된 감시장비와 경계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군과 경찰은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통합방호계획을 발전시키고, 관련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통합방위 관련 훈련 개선에

LAN :
Local Area Network

WAN :
Wide Area Network



▲ 국가중요시설 방호 지도방문

03 장 >>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태세 확립

역점을 두어 훈련의 내용과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훈련 통제와 평가방법, 훈련 내용과 시간을 보완하였다.

3. 향토방위작전 태세

향토방위작전은 전·평시에 특정지역 내에 침투한 적을 조기에 소탕하고 국가 중요시설과 병참선 등을 방호하기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하여 수행하는 민·관·군 통합작전이다.

전·평시의 향토방위작전 수행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예비군 전투장비 현대화와 향방물자를 보충해 나가는 한편, 예비군 육성 주체별 지원 책임과 지원사항, 체계적인 육성계획 수립과 업무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향토방위작전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 예비군의 대침투작전 참가

제3절 전투임무위주 교육훈련

우리 군은 개인과 부대가 유사 시 전투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량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특히 전투임무에 기초해서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연합전시증원(RSOI) 및 독수리(FE) 연습, 태극연습, 호국훈련, 군단급 FTX 등 다양한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각종 연습 및 훈련 시 핵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UFL :
Ulchi Focus Lens

연습 (Exercise) :
작전기획, 준비, 시행을 포함하여
모의된 전시작전이나 군사기동
즉, 작전계획 시행훈련으로, 연습은
전투·전투지원·전투근무지원
절차와 교리를 적용하여 최대한
실제와 같도록 실시하는 것

1.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가. 을지포커스 렌즈(UFL) 연습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은 한국 방위를 위해 해마다 8월경 정부차원의 군사지원을 위한 ‘을지연습’과 군사차원의 작전계획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포커스렌즈연습’을 통합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정부 및 군사 종합지휘소연습(CPX, Command Post Exercise)이다.

정부 부처와 시·군·구급 이상 행정기관 그리고 한국군과 연합사, 주한미군, 미 중원전력이 참가하여 정부-군사연습을 연계한 전시대비 연습과 한미 연합작전 절차연습으로 전투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훈련(Training) :
개인과 부대가 부여 받은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식과 행동을 체득하는
조직적 숙달 과정

* 연합훈련 : 단일 임무수행을 위해
공동행동을 취하는 2개 또는 그 이상
국가의 군대가 실시하는 훈련

합동훈련 :
육·해·공군 중 2개 군 이상의
통합된 군사활동을 위하여 상호
협조체계에 의하거나 단일 지휘관의
지휘 및 통제하에 실시하는 훈련

RSOI :
Reception(수용), Staging(대기),
Onward Movement(전방이동)
and Integration(통합)

나. 연합전시증원(RSOI)/독수리(FE) 연습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중원전력에 대한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 절차를 숙달하고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 지원, 상호 군수지원, 동원 및 전투력 복원 절차 등 지원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휘소연습(CPX)이다. 해마다 3월경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한국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작전사급 이상 부대와 연합사, 주한



▲ 연합전시증원연습

03 장 >>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태세 확립

미군사령부 그리고 미군 증원부대 등이 참가한다.

FE :
Foal Eagle
독수리(FE)연습은 한미 연합·합동 작전 및 연합특수작전과 후방지역 방호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병기동훈련이다.

2002년 이후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은 하나의 연습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 연합공중강습훈련



▲ 연합특수작전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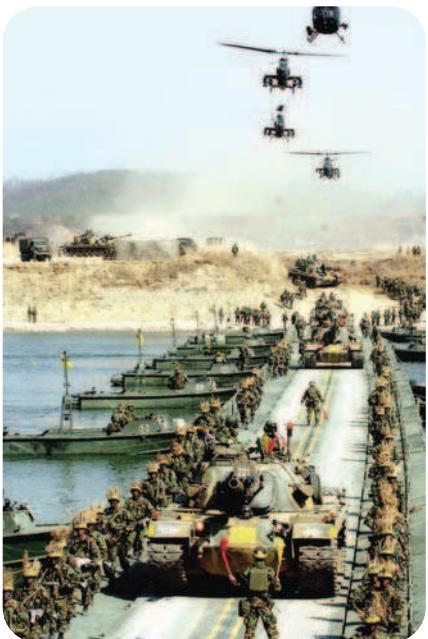
다. 태극연습

태극연습은 전시에 대비하여 합참의 독자적인 방위기획 능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합참 차원의 전력 및 구조발전 소요를 도출하기 위해 위게임 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종합지휘소연습(CPX)이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합참 주도의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지휘소연습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5년 실무급 연습으로 시작되었으며, 1996년부터 ‘압록강연습’으로 명명하고 연습 참가규모를 작전사까지 확대하여, 합참 차원의 종합지휘소연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4년부터는 ‘태극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명실상부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연습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2005년부터는 합참에서 개발한 위게임 모델인 ‘태극 JOS 모델’을 적용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합동작전모의(JOS) :
Joint Operations Simulation

합참은 태극연습으로 전시임무와 기능의 수행절차를 숙달하고 전투 위주의 사고와 합동성을 강화하여 합동작전, 대화력전 및 종심작전, 효과중심작전, 안정화작전 체계 등을 발전시키고 있다.



▲ 부교를 이용한 도하작전

라. 호국훈련

호국훈련은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여 대부대 작계시행 절차를 숙달하고, 통합전투와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1996년 11월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부대 야외기동 훈련이다.

이 훈련은 해안과 내륙 축선별로 전면전 대비절차를 숙달하게 하는 것이다.

이 훈련으로 지휘관 의도에 부합하는 작전수행과 전술구사 능력을 배양하고, 통합화력 운용 및 대화력전

수행체제를 완비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각종 신형장비와 운용교리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고, 작전환경과 군 부대구조 변화에 따른 대비계획을 점검해 나가고 있다. 이로써 작전적 수준의 한국군 합동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마. 화랑훈련

화랑훈련은 후방지역 통합방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1977년부터 1981년까지 3군사령부 통제 아래 실시되던 수도권 대침투종합 훈련을 전군으로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이는 통합방위 본부 주관으로 민·관·군 전 작전요소가 참가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 훈련은 전국을 총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홀수연도에는 서울 권역, 인천·경기 권역,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권역 등 3개 권역에서 실시하고, 짹수연도에는 대전·충청·광주·전라·제주 권역과 강원 권역 등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훈련은 후방 지역에



▲ 도로 제독훈련

03 장 >>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태세 확립

대한 전·평시 연계된 작계시행절차를 숙달하고, 지역주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며,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바. 군단급 FTX

군단급 FTX(Field Training Exercise)는 군단급 제대의 통합전투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1995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서 통제하는 대부대 야외기동훈련이다. 순기에 맞추어 훈련개념과 지침을 작전사로 하달하면 작전사는 훈련 참가부대를 편성하고 훈련을 통제한다.

합동교전심판모델 :
과학적인 기법에 의해 신속,
공정한 교전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97년부터 합참에서 자체 개발하여
군단급 FTX와 호국훈련 시 적용하는
모델

ATCIS :
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훈련부대는 육·공군과 해병대로 편성되며 쌍방 자유기동훈련을 통해 합동 및 협동작전능력을 향상한다. 1998년부터는 국내에서 개발한 합동 교전심판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합동성·통합성·동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훈련을 유도하고 제대별 수준에 맞는 전술전기와 전투수행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지상전술지휘정보 체계 운용

또한 2006년 훈련부터는 군단급 제대에 정보·과학 기술의 변화에 따른 최첨단 디지털 전투체계인 지상 전술지휘정보체계(ATCIS)를 구축, 각 훈련별로 처음 시험 적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상·하급제대 사이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전투수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훈련체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각 군별 훈련

가. 육군

육군은 평시에 적 침투나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완전자전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전시에는 모든 지상작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싸우는 방법

대로 훈련하고, 훈련한 방법대로 싸우는'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부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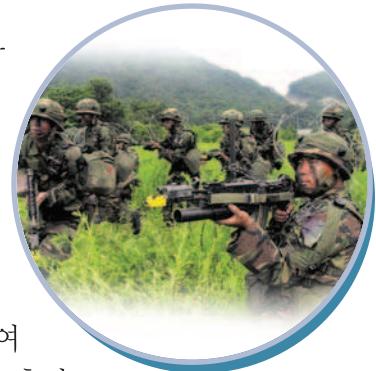
육군은 부대훈련의 과학화를 위하여 전투지휘훈련과 과학화전투훈련, 모의장비훈련 등 훈련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전장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하여 교육훈련의 실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있다.

전투지휘훈련(BCTP)은 첨단 컴퓨터 모의기법(Simulation)을 이용한 과학적인 부대훈련 방법으로서, 1999년부터 자체 개발한 「창조21 모델」과 「화랑21 모델」을 적용하여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군단, 사단, 연대 및 대대 단위로 해당부대 지휘관과 참모의 전투지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부대지휘절차 숙달, 통합전투력 운용능력의 제고 등에 주안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BCTP :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과학화 전투훈련은 실제 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첨단 과학 기술과 통신수단을 활용, 전문 대항군을 운용하여 실시하는 쌍방 자유기동훈련이다. 현재는 인제·홍천 훈련장에서 대대급 부대규모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대급 부대 규모와 기계화 부대의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모의장비훈련(Virtual Simulation)은 실제훈련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전투장비 위주로 모의장비를 개발하여 가상전장 환경에서 사격, 조종, 전술모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훈련이다.



▲ 과학화 전투훈련 모습

나. 해 군

해군은 완벽한 전투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서·남해 각 해역별로 전장 환경에 부합된 실전적 해상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해군에서 실시하는 주요 훈련으로는 해상기동 훈련, 연합훈련, 성분훈련, 순항훈련 등이 있다.

해상기동훈련은 유사 시 적 해상전력을 조기에 격멸 하여 해상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최신예 전투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 입체전력이



▲ 해상기동훈련

03 장 >>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태세 확립

참가하는 작전사급, 함대급, 전투전단급 기동훈련을 연평균 10여 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연합훈련은 연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과 다국 간에 인도주의적 지원과 군사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국 간 연합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한미 간에는 대특작부대 훈련, 대잠해양탐색훈련, 잠수함·기뢰전·구조전·상륙전·특수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일과 한·러 간의 구조와 탐색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0여 개국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하여 다국 간 연합작전 능력과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RIMPAC :
Rim of the Pacific Exercise

성분훈련은 해군 특성상 성분별 전투력 증강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잠전·기뢰전·상륙전·구조 및 탐색전·특수전·잠수함 훈련 등을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순항훈련은 해사생도를 대상으로 해군장교로서 구비해야 할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우방국을 친선방문하여 각국 간 군사외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해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0~150여 일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다. 공군



▲ F-15K 편대비행

공군훈련은 크게 방어제공훈련, 공세제공훈련 및 항공차단훈련, 지상군·해군 근접지원훈련 및 기타훈련으로 구분된다.

‘방어제공훈련’은 적의 영공침범을 저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적 침투전술을 적용한 가상 적기를 대상으로 요격기와 방공포를 운용하여 탐지·식별·요격·격파하는 훈련이다.

‘공세제공훈련’은 공중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적 지역에 대해 항공력을 운용하는 훈련이다. ‘항공차단훈련’은 적의 군사 잠재력이 우군의 지상군·해군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이를 교란·지연·파괴하여 적 전력의 증원, 재보급 및 기동성 등을 제한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공세제공 및 항공차단 훈련은 전술 표적을

대상으로 공군 단독훈련 또는 한미연합 공격편대군훈련과 지대지종심 타격훈련으로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간 긴급표적에 대한 공격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긴급항공차단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근접지원훈련은 지상군과 해군을 지원하기 위해 전천후 정밀공격이 가능한 전투기와 야간투시경(NVG) 및 적외선 지시기(IR Pointer) 등 야시 장비를 활용하여 지·해상 가상표적에 대해 주·야간 공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전적 능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실무장 폭격훈련, 정밀유도 무기 실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적의 170밀리, 240밀리 방사포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화력전 훈련을 한미 대화력전 수행본부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적 특작부대의 해상침투에 대비하여 해상침투저지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라. 해병대

해병대는 독자적인 상륙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한 다목적 신속 대응군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병대의 주요 훈련으로는 연합·합동 상륙훈련과 합참 및 연합사 주관 주요 훈련, 작계 임무수행을 위한 사·여단별 훈련, 전투지휘훈련, 그 밖의 훈련이 있다.

연합·합동 상륙훈련은 사단과 연대상륙단 규모의 부대가 참가하여 탑재·선결부대 작전, 함안 이동 및 임체적 상륙을 위하여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합 해병지상전훈련, 연합 수색훈련, 연합 공병 훈련, 연합 도하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합참과 연합사 주관 훈련인 연합·합동 해안양륙 군수지원(C/JLOTS) 훈련 등에도 참가하고 있다.

사(여)단별 훈련으로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규모의 상륙기습훈련, 지상 작전, 특수작전 등 연중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서북 도서 방어훈련과 증원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여)단 및 연대급 지휘관과 참모의 활동절차를 점검하고 작계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컴퓨터 모의기법(MTWS)을 활용한 워게임 훈련을 연 2~3회 실시하고 있다.

NVG :
Night Vision Goggle

IR Pointer :
Infra-Red Pointer



▲ 상륙훈련

C/JLOTS :
Combined/Joint Logistics Over
The Shore

MTWS :
Marine Training War-game
Simulation

제4절 예비전력 정예화

오늘날 선진 각국은 국방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상비전력은 긴요전력 위주로 운용하면서, 예비전력의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가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장차전 양상은 국가의 모든 자원이 동원되는 국가총력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비전력의 효율적인 운용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제한된 국방재원과 동원환경 등을 참조하여, 상비전력 건설방향과 연계된 정예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효과적인 전시동원태세를 확립하고 향토방위작전 수행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예비군 자원관리와 교육훈련 발전 등 예비전력 정예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1. 예비군 편성과 자원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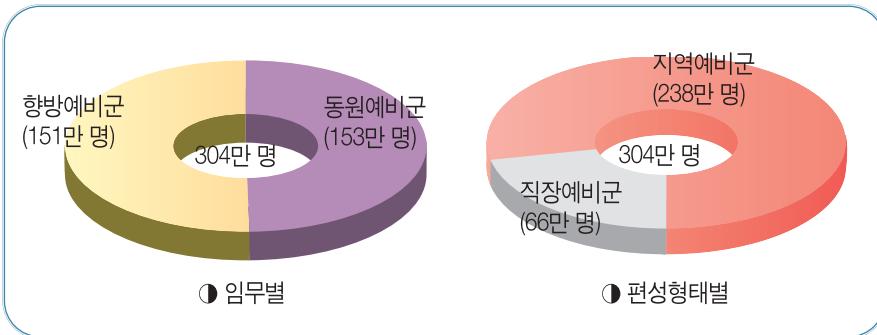
가. 예비군 편성

예비군은 임무에 따라 향방예비군과 동원예비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향방예비군은 책임지역별로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동원예비군은 전시 군부대의 증·창설이나 손실병력에 대한 보충요원으로 현역과 동일한 전투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예비군은 약 300여만 명으로, 지역예비군 부대와 직장예비군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군의 편성은 예비역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 정년까지, 군복무를 필한 예비역과 보충역의 병은 군복무를 마친 후 8년차까지 편성하여 운용하며 예비군 현황은 아래 【도표 3-7】과 같다.

【도표 3-7】 예비군 현황



이러한 예비전력의 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 규모와 연동하여 조정하는 동시에 유사시 상비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예화하고, 예비군 편성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갈 것이다.

나. 자원관리

지역예비군 부대는 책임지역의 예비군 자원관리와 향토방위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읍·면·동 단위로 편성되어 있고, 시·군·구 단위로는 별도의 기동대를 편성·운용하고 있다.

직장예비군부대는 소속 직장의 예비군 자원수에 따라 여단에서 분대 까지 편성되어 있다.

또한 예비군 자원관리와 예비군훈련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병무청-각 군 본부-예비군부대 사이에 전산망을 연동하여 활용하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2. 예비군 훈련

예비군 교육훈련은 ‘동원절차 숙달 및 동원 후 전투력 발휘 보장’과 ‘향토 방위 작전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면서도 교육훈련의 수준과 강도를 높여 즉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제도를 개선해 가고 있다.

03 장 >>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태세 확립



▲ 서바이벌 장비를 이용한 훈련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방법은 인터넷을 활용한 방법으로 개선하여 동원훈련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예비군이 스스로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비군 대상별 훈련기간은 【도표 3-8】과 같다.

【도표 3-8】 예비군 대상별 훈련기간

(단위 : 시간)

구 분		연간훈련시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향방훈련	기타/예비
병	동원지정자	100	28 (2박3일)		72
	동원미지정자	100		36	64
	5~6년차	68		20	48
간부	동원지정자, 동원미지정 장교	100	28 (2박3일)		72
	동원미지정 부사관	100		36	64



▲ 예비군훈련장 위치정보 제공

또한 전시임무에 맞게 실전적인 예비군 훈련을 위하여 기존 훈련장을 확장하고, 전장상황을 고려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전투행동을 숙달할 수 있는 실습위주 훈련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실전적이면서 신세대 취향에 맞도록 마일즈와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한 훈련방법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휴일에도 예비군훈련을 실시하여 생업활동으로 평일에는 훈련하기 어려운 예비군에게 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예비군이 훈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훈련장 위치 정보를 '위치안내기'로 제공하는 등 예비군 편의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가. 동원 훈련

동원훈련은 군 부대에 동원지정된 예비군 중 1~4년차 자원을 대상으로 전시임무에 기초하여 증·창설 절차숙달 훈련, 개인과 팀 단위 직책수행 훈련, 전시 작전계획 시행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동원사단 가운데 일부는 작전지역 거점에서 숙영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불참자는 해당부대에 재입영하게 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나. 동원미참자 훈련

동원미참자 훈련은 1~4년차 예비군 가운데 동원미지정자와 동원훈련 미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개인 전술전기와 병과 및 주특기 능력향상, 향방작전 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소속 군 및 병과부대 책임 아래 훈련을 실시하고, 일부 지역의 해·공군 자원은 해·공군 부대로 입영하게 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다. 향토방위 훈련

향토방위 훈련은 향방기본 훈련과 향방작계 훈련으로 구분한다. 향방 기본 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부대임무 수행에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숙달하게 함으로써 향토방위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향방작계 훈련은 1~4년차 병 자원 중 동원미지정자와 5~6년차를 대상으로 향방작계시행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제4장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제1절 정예 군사력 건설

제2절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제3절 대외 군사협력관계 발전

제4절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제 1 절 정예 군사력 건설

우리 군은 자주적 전쟁억제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총분성 전력 기반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 '정예 군사력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먼저 갖추고, 효율적인 전투력의 통합 운용이 가능하도록 C4I 체계를 구축하며, 기동·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고 현존 기반전력을 내실화하는 한편,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육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1. 군사력 건설 경과 및 평가

우리 군은 6·25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의 무상 군원장비에 의존하여 전력을 유지하여 오다가 1974년부터 우리의 국방비를 투입하여 전력 증강에 착수하였다.

'율곡사업'으로 기본병기의 모방생산으로 시작한 재래식 무기 생산은 모두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첨단무기를 국외도입하여 장비의 현대화도 달성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일부 첨단 핵심전력의 국내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자주국방의 노력과 한미동맹에 기초한 협력안보를 축으로 하여 6·25전쟁 이후 53년 동안 일부 국지 도발은 있었지만 한반도에서 대북전쟁 억제에 성공하였으며, 현재의 대북전력은 양적으로는 열세하나 질적으로는 우세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미래 잠재적 위협까지 동시 대비하여 추진해 온 결과, 현재는 미래전 대비 첨단 핵심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군사력 건설의 목표 및 방향

우리 군은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미래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의 여건과 가용재원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자주적 전쟁 억제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잠재적 군사위협에 대응 가능한 ‘방위충분성(防衛充分性) 전력’을 구비하는 것을 목표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력 건설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력위주의 양적 재래식 구조를 기술위주의 질적 첨단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전력을 증강하고, 둘째, 정보·지식과 네트워크 중심의 과학군 전력구조로 발전시켜 ‘감시·정찰–지휘·통제–타격’의 전쟁 수행개념에 맞는 전력으로 개선하며, 셋째, 기반전력을 내실화하여 첨단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보장하고 High–Low Mix 개념에 따른 전력화를 추진하며, 넷째, 장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첨단전력의 독자개발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특히,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기존의 계획에 추가하여 핵 위협을 줄이거나 대비하기 위한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방호 전력 소요’를 추가 식별하여 보강할 계획이다.

방위충분성 전력 :
적의 침략행위와 일방적인 자국의
국익 강요를 저지할 수 있으면서도
적이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을 만한
정도의 방위적 군사력

High-Low Mix 개념 :
장비배치에 있어 고성능의
무기체계와 저성능의 무기체계를
결합시키는 것과 그 구상

3.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가. 2006년도 방위력개선사업

2006년도 국방비 전체 규모는 2005년보다 6.7% 증가한 22조 5,129억 원이며, 방위력개선비 규모는 2005년보다 16.0% 증가한 7조 4,994억 원이다. 이 가운데 수리부속 등 경상경비 1조 9,074억 원을 제외한 순수 방위력개선비는 5조 8,077억 원이다. 2006년도에 추진하는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 착수사업은 【도표 4-1】과 같다.

04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도표 4-1】 2006년 추진 주요 계속사업/신규 착수사업

구 분	계 속 사 업	신 규 착 수 사 업
감시정찰/ 지휘통제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기경보통제기· 지상전술C4I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위성통신장비· 지상감시레이다
기동/화력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K1A1 전차· K-9 자주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륙돌격장갑차· GOP과학화경계시스템
해상/상륙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개토-II/III급 구축함· 장보고-II급 잠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기 호위함
공중/유도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F-15K 전투기· T-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대함유도탄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도무인정찰기, 한국형기동헬기, 중고도대공무기체계 등	



▲T-50 훈련기

▼ K-9 자주포



▼ 광개토-II급 구축함



나. '07~'11 국방중기계획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중기기간의 방위력개선사업은 '자주적 전쟁 억제 능력 확충과 방위충분성 전력기반 구축'을 목표로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Sensor) 구비, 전투력 통합운용을 위한 전장관리체계(C4I) 구축, 장거리 타격 능력과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전력(Shoo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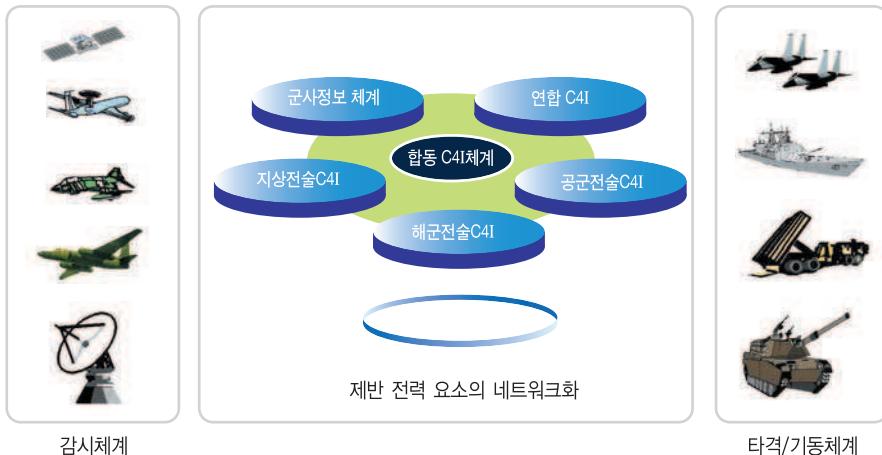
확보 추진, 현존 기반전력 보강, 기술의 자주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방위 산업 기반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다.

감시·정찰 전력 확보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구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전략적 수준의 감시와 조기경보가 가능하도록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전술정찰정보 수집체계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다.

전장관리체계 구축은 전 제대가 실시간 ‘감시·정찰-지휘·통제-타격’ 할 수 있도록 전략 및 전술 C4I체계와 군 위성통신체계 등을 전력화 함으로써 2011년까지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기반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합참에서 각 군 작전사급까지 연결하는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지속적으로 성능을 향상하고, 전술제대급 C4I체계를 전력화하며, 각 군 및 제대의 군사정보를 종합 처리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도를 합동지휘통제체계와 연계하여 전력화 할 계획이다. 또한, 전술통신체계를 2008년까지 차세대통신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러한 전장관리체계 개념은 【도표 4-2】와 같다.

KJCCS :
Korea Joint Command & Control System

【도표 4-2】 전장관리체계 개념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K-9 자주포, 대구경다련장(탄약), 이지스 구축함, 214급(1,800t급) 잠수함, 함대함 유도탄, F-15K와 차세대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04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F-15K



▲ 214급 잠수함

현존 기반전력 내실화 차원에서 노후되었거나 성능이 저하된 전력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전투력 발휘를 보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육군은 기계화부대와 기갑부대를 각각 1개 부대씩 개편하고, K1A1 전차를 지속적으로 전력화하며, 대포병팀지레이더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해군은 7,000톤급 이지스 구축함과 구형 호위함의 대체 전력인 차기호위함을 확보할 예정이다. 공중전력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등훈련기(T-50)를 양산하고 F-5E/F 수명 연장 사업을 계속하면서, 대형수송기 및 레이저 유도 폭탄 사업을 신규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공 및 방호능력 증강을 위해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차기유도무기(SAM-X) 및 신형 제독차 등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 K1A1 전차



▲ 천마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다. '08~'12 국방중기계획 수립방향

2007년도에 발간될 「08~'12 국방중기계획」에서는 「06~'10 정부중기 재정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동안 보완된 국방개혁 소요와 북한의 핵실험 등 변화된 안보상황에 대비하는 전력소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이미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도 병행하면서 타당성이 검증된 신규전력에 대해서도 적정수준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국방중기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 무기체계 전력화 과정 ●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투자는 장기간의 전력화 선행기간(lead time)을 고려하여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며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전력을 운용할 수 있다.

그런만큼, 국방투자는 현재의 재정·안보 여건보다는 10년 이후의 안보환경과 경제 능력을 예측하여 적정소요를 결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다.

● 전력화 기간 예시 ●

K1A1 전차

소요제기 (1990)	무기체계선정 (1991)	연구개발 (1993 ~ 1997)	초도양산 (1999 ~ 2001)	후속양산 (2000 ~ 2011)
----------------	------------------	-----------------------	-----------------------	-----------------------

초도전력화 (12년 소요)

후속양산 (22년 소요)

이지스급 구축함

소요반영 (1995)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1996~2008)	1번함 전력화 (2008)	2~3번함 전력화 (2010 ~ 2012)
----------------	---------------------------------	-------------------	----------------------------

1번함 전력화 (13년 소요)

후속함 전력화 (17년 소요)

F-15K 전투기

소요제기 (1988)	기종결정 (2002)	1호기 도입 (2005)	후속기 도입 (2005~2008)
----------------	----------------	------------------	-----------------------

1호기 도입 (17년 소요)

후속기 도입 (20년 소요)

4.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 육성

가. 국방연구개발 정책의 발전

선진국들은 국방과학기술력과 정보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심 전력을 확보하고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첨단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국방비를 집중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우리나라 국방획득 과정을 보면 상당 부분 국내 연구개발보다는 외국의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단기간에 전력을 증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국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였고 선진국의 기술 이전 회피 등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심화되는

04 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악순환이 이어져 온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발전적인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는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고, 2020년까지는 미래 첨단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자위적 방위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나. 무기체계 연구개발 현황



▲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우리 군은 국방과학기술의 혁신기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에 들어 와서 핵심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선도적 기술에 집중 투자하였다. 그 결과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어뢰음향 대항 체계, 군단급 정찰용 무인 항공기, 함정용 전자전 장비, KO-1 전술통제기, 함대함 유도무기,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신형 경여뢰, 실시간 지휘 통제·통신 체계(C4I), 우리 나라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인 T-50, 전투기 외장형 전자방해장비, 항만 감시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완료하였다.

특히 기본훈련기 KT-1은 2001년 초 인도네시아에 수출하였고,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최근에는 필리핀, 중남미 국가 등과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K-9 자주포는 2000년 터키에 수출한 이후 여러 국가와의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KT-1 전술통제기



▲ 함대함 유도무기

다. 국내 방위산업 기반 구축

우리 정부가 방위산업 기반을 공고히 해 온 결과, 2005년 말 현재 1,405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방산물자를 생산·공급하는 한편, 세계에서 12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또한 2006년 1월 『방위사업법』의 제정에 따라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과 방위산업 육성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표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위산업체 가동률의 경우 제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방위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정비하고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방위산업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조달이 곤란한 군 전용장비와 물자의 안정적인 조달과 품질보증을 위한 제도로서,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폐지 후에도 전략물자 등 주요 물자 생산업체의 정책적 육성 수단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다.

【도표 4-3】 방위산업체 경영실태('01 ~ '05)

구 분	매출액 (억원)	경상이익 (억원)	가동률(%)	
			방 산	제조업
2001	37,013	-1,149	50.3	75.3
2002	43,447	253	54.5	78.3
2003	42,681	555	57.3	78.3
2004	46,440	863	56.1	80.3
2005	53,165	1,486	57.8	79.8

* 출처 : 2006 방위산업체 경영분석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6.11)

이외에도 방위산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출할 때 정부보유 기술 사용료 면제 등 수출 물량에 대한 간접비 일부 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방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방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계획된 투자는 차질 없이 집행하며 지속적으로 방위산업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소요제기부터 국내 방위산업 생산력과 기술력 등을 반영한 의사



▲ 한국형 휴대용 대공유도무기(KP-SAM)

전문화·계열 제도 :
방위산업 분야의 중복 투자 방지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1993년 도입

04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K-200 한국형 장갑차



▲ 경어뢰

결정은 물론, 군과 방위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 등 체계적인 방산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방위산업기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무기체계별 동종 및 유사 업종끼리 자발적으로 설비합리화하고, 방위산업체를 고도화된 연구개발인력과 생산인력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등 방위산업 분야의 구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라. 방산 국제협력 확대 추진

국산 방산물자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도입된 무기의 안정적인 운용보장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 방산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4개국과 방산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유럽, 남미, 아시아 등으로 교류 국가를 다원화하였다. 그리고 도입무기의 장기적·안정적 운용보장을 위해 품질보증, 가격정보 교환, 기술자료 교환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방산협력협정 체결 국가와 정기적으로 방산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산 방산물자의 수출지원, 국제 공동협력사업의 발굴·추진, 선진 기술 도입과 국외도입장비의 원활한 군수지원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미, 아시아 및 중동국가 등을 대상으로 신규 방산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Defense Asia 2006' 한 장면

국내 방산업체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산 수출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군사외교 지침 보완 및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군사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무관의 현지 수출지원활동을 강화하고, 범정부적인 방산수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수출 지원인력을 증원하여 국방부 수출 전담 기구 보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이상 쌓아온 한미 양국간의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동일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한편 9·11테러 이후 국내외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한미동맹도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한미 양국은 2005년부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체를 구성하여 주한미군 재조정의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

1. 한미동맹 관계의 재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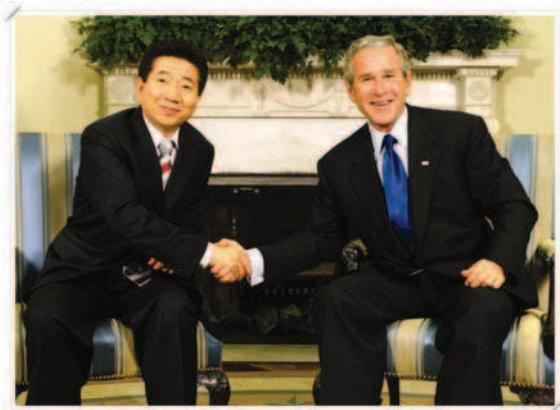
가. 배경

한미동맹 관계는 남북관계 진전과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비한 미국의 전략변화 등 우리의 안보환경 변화 등에 따라 미래 지향적으로 조정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새로이 드러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위협' 중심에서 '능력'에 기초한 전략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전략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군사변혁으로 전력의 첨단화·기동화·경량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04 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한미 정상회담(2006.9), 워싱턴 D.C.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GPR)’은 기본적으로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역할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군도 방위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역할 분담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경제성장에 힘입은 국력의 신장으로 보다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성숙한 동맹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왔다.

나.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사업은 서울 도심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군대의 이전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하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한미동맹 강화를 위하여 1988년 3월부터 추진하였다.

1993년 이후 과도한 이전비용 문제 등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2001년 12월 용산기지 내 미군 아파트 건립 문제를 계기로 이전사업의 재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용산기지 조기이전 원칙에 합의하였고 이후 긴밀하게 협상이 진행되었다.

협상 결과, 한미 양국은 2008년 말을 목표로 유엔사/연합사(UNC/CFC)를 포함한 용산기지를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용산기지이전협정(UA/IA)』을 체결하였고, 2004년 12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음으로써 용산기지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부지확보 시간 소요, 환경영향평가, 한미간의 비용분담 협상 등을 위한 시간 추가소요로 이전 완료 시점은 한미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미2사단 재배치는 주로 경기 북부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한 미2사단을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미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기지 통·폐합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UA (Umbrella Agreement) :
용산 기지이전 관련 원칙, 부지, 비용 등을 포함하는 조약 형식의 문서로서 전문과 8개 조로 구성

IA (Implementing Agreement) :
용산 기지이전 계획 이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조약 형식의 문서로서 전문과 7개 항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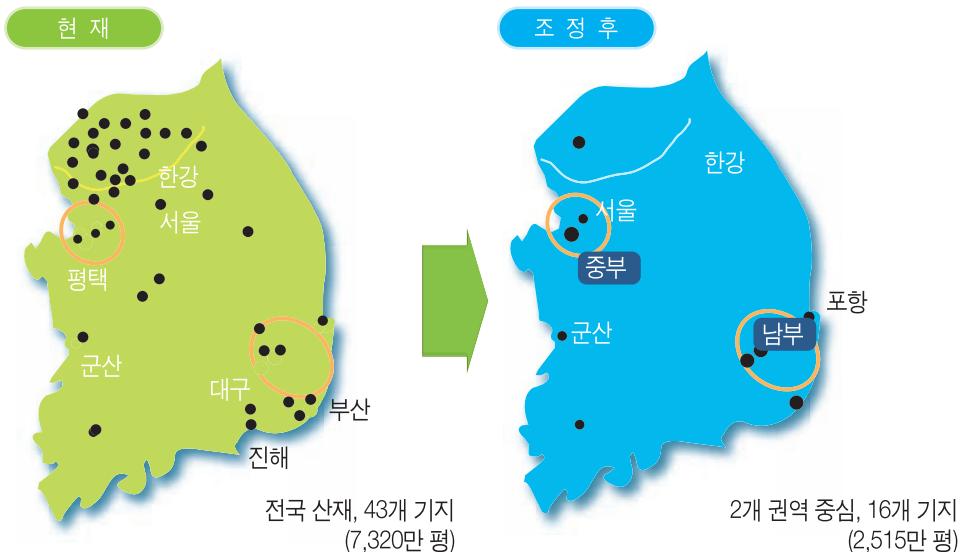
제1단계로 2006년까지 한강 이북지역에 위치한 주한미군 군소기지를 동두천·의정부 지역으로 이전 통합하고, 제2단계는 2008년까지 주요 부대를 평택 및 군산지역 등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은 【도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 권역 16개 기지로 재배치 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약 5천여 만 평이 우리에게 넘어올 예정이다.

미2사단 재배치를 위한 부지확보와 기반시설 공사는 2008년 말을 목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을 체결하였다.

LPP(Land Partnership Plan) :
제33차 SCM ('01.11.15)에서
한미의향서를 체결하고 국회 본회의
('02.10.31)에서 비준함

【도표 4-4】 주한미군 재배치



2004년 12월 국회 비준 이후, 평택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간담회, 지역 시민사회 단체 설명회, 언론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며, 특별법에 근거한 제반 주민지원 대책을 강구하면서 미군기지 이전지역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끝에 2006년 1월에 미군기지 이전지역 부지의 소유권을 국방부로 이전하였으며, 이후 예정지역에 대한 측량과 지반 조사 등의 시설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04 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정부는 2006년에 「시설종합계획」을 작성하였고, 이전부지에 대해 환경 영향 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며, 대상지역 주민 이주지원 및 이주 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을 완료한 후 2007년부터는 기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 군사임무 전환과 주한미군 현대화

1) 군사임무 전환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1968년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을 계기로 주요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양국 국방장관간의 연례 안보협의체로 운영해오다, 1971년 미7기단 철수가 논의되면서 양국의 국방·외교관계 고위관리가 참여하는 한미간 최고 안보협의기구로서 군사위원회에 전략지침을 하달한다.

JSA :
Joint Security Area

한미 양국은 지난 2002년 12월 제3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이 수행해 온 일부 군사임무를 한국군에 전환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맡고 있던 10대 군사임무 가운데 주야탐색구조 임무를 제외한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 후방지역 제독작전임무, 신속지뢰 설치, 공지사격장 관리, 대화력전수행본부 임무, 주보급로 통제임무, 해상 대 특작부대 작전임무, 근접항공지원 통제임무, 기상예보 임무 등은 이미 한국군이 인수하였다. 주야탐색구조 임무는 2008년 말에 인수할 예정이다. 제37차 SCM(2005년 10월)에서는 추가 군사임무전환 검토를 합의하였으나, 제38차 SCM에서 양국이 군사지휘관계 조정에 합의함에 따라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한미군의 군사임무전환은 한국군의 능력 증대에 따른 임무 확대와 아울러 한국 방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제고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군의 능력을 고려하면서 주한미군의 군사임무전환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주한미군 현대화

한미 양국은 2008년까지 3단계로 12,500명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합의된 계획에 따라 감축이 이행되면 주한미군의 주둔병력 규모는 2003년 37,500여 명에서 2008년 말에는 약 25,000여 명이 될 것이다. 양측이 합의한 단계별 감축 일정은 【도표 4-5】와 같다.

【도표 4-5】 '04~'08년간 주한미군 단계별 감축 일정

단 계	년 도	감축인원	주둔인원
1 단 계	2004	5,000명	32,500명
2 단 계	2005~2006	5,000명	27,500명
3 단 계	2007~2008	2,500명	25,000명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에 걸쳐 150개 분야에 11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여 주한미군의 전력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능력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을 재편하여 전력운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력 현대화는 주로 전투부대 능력, C4ISR 분야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C4ISR :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및 정찰

2.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

가. 추진 배경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6·25전쟁 당시 국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누란의 위기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으며, 이중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말 한국 합참으로 이양되었다. 이후 연합군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과 평시에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행사하고 있다.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논의는 1987년 8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작전통제권 환수 및 용산기지 이전」이라는 선거공약 제시와, 1989년 미국의 「년-워너 수정안」에 이은 1990~1992년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에 따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논의가 확장되었다. 「년-워너 수정안」은 1990~1992년 동안 미국과 한국 간에 체결된 군사 협정으로, 1991년 12월 31일에 유통되는 군사 기관과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
전시 작전통제되는 한국군 부대에 대하여 연합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연습 등 6개 항 분야의 권한을 위임한 것

「년-워너 수정안」 :
1990~1991 회계연도 미 국방부의 군사적 기능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고 병력수준을 규정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제출된 법안에 한미 관계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추가한 법안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
「년-워너 수정안」의 요구에 따라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 (1990, 1991, 1992년 3차례 보고)

04 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EASI)」을 기초로 한미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연구와 협의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

1991년 제13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을 1993~1995년에 이양하고, 1996년 이후에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협의하기로 한미가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로 먼저 1994년 12월 1일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였다.

1993년 이후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의 RAND 연구소가 공동으로 미래 동맹발전을 위하여 공동연구를 하였고,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양국 국방부 국장급간에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연구와 협의가 있었다.

FOTA :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미래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
(JVS, Joint Vision Study) :
2004년 제36차 SCM시 힘의에 따라
변화된 안보상황에 부합하는
한미동맹 발전의 청사진을 구상하기
위한 공동협의

아울러, 2003년부터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협의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에서 한미 국방 당국 간에 미래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미래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JVS)」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미래 한미 지휘관계에 대해 연구와 협의가 진행되어 왔다.

나. 추진 현황

로드맵 (Road Map) :
‘특정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 목적지와
중간 경유지를 설정한 개략적인
이동로’를 의미하며,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한·미 지휘관계 유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선행 과제가
포함되며 구체적 일정은 포함되지
않음

관련약정 (TOR, Terms of Reference) :
2006년 3월, 한·미 양측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비롯한 지휘 관계
연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목적, 원칙, 주체, 일정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문서화 한 것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미래 한미동맹 발전연구를 바탕으로 2005년 10월 제37차 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에 관한 논의를 ‘적절히 가속화’ 하자는 데 입장을 같이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었다.

2006년 3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로드맵 연구 및 보고를 위한 관련약정(TOR)」을 체결하고 연합실무단을 구성하여, 긴밀한 협의 끝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2006년 10월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양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과 관련하여 4가지 원칙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하고, ② 주한미 군 지속주둔과 미 중원군 전개를 보장하고, ③ 정보자산 등 한국군 부족 전력은 미측이 지속 지원하며, ④ 연합대비태세와 억제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합의된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유사시 미 중원군 전개를 전제로 하여, 새로운 한미 군사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정보 및 위기관리 협조체계–제대별 작전계획 작성–한미 연합연습 체계구축’ 등으로 실질적인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가는 것이다.

다.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미래 한미동맹 군사구조는 ‘한국주도–미국지원’ 형태의 새로운 한미 공동방위체제이며, 이를 위해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군사협조본부를 설치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사협조본부는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핵심기구로서 예하에 10여 개의 상설·비상설 기구를 보유하여 정보·위기관리, 계획 작성, 연습과 훈련 등 억제 및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게 된다. 또한, 정보 및 공군전력 운용에 있어서도 강력한 협력 체제를 이루어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공동방위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 군사위협의 안정적 관리, 남북관계의 진전, 군사적 신뢰구축 기반조성, 주한미군 재조정 등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도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며, 전쟁억제를 위한 한미 공동의 대비태세를 굳건히 유지할 것이다.

3.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가. 방위비 분담

방위비 분담(협의)은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정부는 1991년부터 우방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수준과 한국방위에 대한 주한미군의 기여도와 한미 군사동맹 관계를 ‘동반자적 안보협력관계’로 발전시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위비 분담금 :
방위비 분담금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통상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즉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근거하여
분담하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금.

04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를 분담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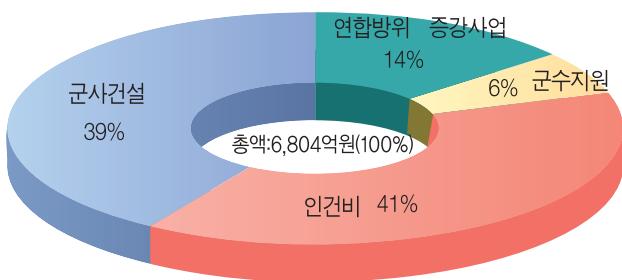
CDIP :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

한국 측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 원의 인건비, 막사 등 비전투 시설 건축을 위한 군사건설, 탄약고 등 전투용 및 전투근무지원 시설 건설을 위한 연합방위 증강사업(CDIP), 철도·차량 수송 등 용역 및 물자 지원을 위한 군수지원 등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도에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6억 2,200만 달러였다.

방위비 분담 협상은 2004년까지는 국방부에서 담당하여 오다가 2005년부터 방위비 분담 협상 주무부처를 외교통상부로 변경한 이래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미국의 국무부를 중심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5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상을 실시하여 2005년 6월에 타결되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6,804억 원으로 감액하고, 전액 원화기준으로 집행하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하면서 같은기간 인상률을 동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방위비 분담금을 감액하게 된 배경은 용산기지 이전, LPP, 이라크 파병, 주한 미군 감축 등 환경변화를 감안한 것이었다. 2006년도 방위비 분담금 항목별 배분 현황은 아래 【도표 4-6】과 같다.

【도표 4-6】 2006년도 방위비 분담금 항목별 배분비율 현황



한미 양국은 2007년 이후의 방위비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2006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여섯 차례의 고위급 협상을 개최하여 2006년 12월 6일 최종 합의하였다. 합의내용은 유효기간은 2년으로, 2007년 분담금을 7,255억 원으로 하고, 2008년에는 2007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분담금은 2005년 이래 예산 집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액 원화로 지불하고 있다.

나. 민원해소 및 훈련여건 개선

주한미군의 실전적 훈련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미군에 의한 사고 및 피해와 미 공군사격장의 소음 등으로 훈련장 인근 주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불만이 야기되었고, 나아가 훈련 여건도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장 주변 여건을 개선하고, 주한미군이 훈련 중 준수해야 할 각종 안전지침을 마련하는 SOFA 운영개선 조치를 취하였다. 즉, 우리 정부는 경기 북부지역의 도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도시설과 굴곡·병목지점을 확장 및 개선하였다. 또한 주한미군은 미군 부대이동 계획의 사전통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 훈련 도중 안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가고 있다.

한미동맹을 국가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하여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긴요한 미군의 훈련 여건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주한미군이 효과적인 훈련은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다. 한미 유대강화 활동

한미 양국은 인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한국군-주한미군-지역주민’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시행하고 있다.

한미 친선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한국군은 ‘한미 부대 간 자매결연’, ‘주한미군 초청행사’, ‘주한미군에 대한 후견인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New Horizons Day), ‘좋은 이웃 프로그램’(Good Neighbor Program), ‘부대 개방행사’ 등 다양한 유대강화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주한미군은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수해복구, 의료지원 등 대민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서 환영받는 주한미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미간의 이러한 유대강화 활동은 문화와 환경이 다른 주한미군과

New Horizons Day :
주한미군이 신규전입 미군장병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와 국민정서에 대한 이해 증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Good Neighbor Program :
연합사령관 주관하에 주한미군과 지역주민간 유대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04 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한미 친선 줄다리기

한국국민 사이에 문화적 일체감을 공유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주한 미군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과 함께 미군기지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주민들과 주한미군이 좋은 이웃으로서 공존하면서 주한미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보다 기여하는 새로운 협력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4. 미래 한미동맹 발전

지난 50여 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초석이 되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긴밀한 안보협력과 활발한 경제교류, 민간협력 등 한미관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이제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며 발전하고 있다.

“지금 한미동맹은 매우 공고
하며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 육사졸업식 대통령 치사 중 ('06. 3. 3)



한미 양국은 2004년까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의 성공적 합의를 바탕으로, 현안 뿐만 아니라 미래 동맹 발전과 관련된 의제들을 중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사한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2005년부터 ‘한미안보 정책구상(SPI)’을 가동해 나가고 있다. 이 협의체에서는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CSA)’, ‘한미 동맹의 비전 연구(JVS)’, ‘한미 지휘관계 연구(CRS)’ 등을 3대 의제로 하여 한미 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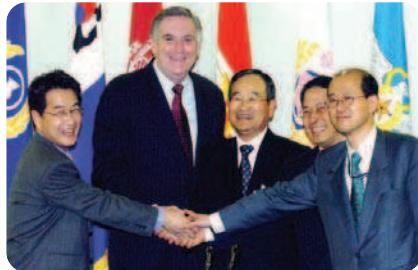
CSA :
Comprehensive Security
Assessment

JVS :
Joint Vision Study

CRS :
Command Relations Study

2006년 10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 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

한미동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반영하여 한미동맹 관계를 재조정하면서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2006년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부록 7 “제38차 SCM
공동성명” 참조



▲ 2006년 제38차 SCM

제3절 대외 군사협력관계 발전

우리 군의 군사외교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국제적인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며, 우방국들과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국제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주변국과 균형된 군사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국가 간 군사교류를 확대하며 역내 국가 간 다자 간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발전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 평화 활동과 국제 군비통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1. 주변국과의 군사관계

가. 한·일 관계



▲ 한·일 군사교류 관계관회의

일본은 우리와 함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주요한 이웃 국가이다. 국방부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정례적인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의 안보정세 평가, 국방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교환 등을 통하여 한반도 및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일 양국 간의 역사인식 문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은 양국의 군사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극복해야 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양국 간에는 1994년 처음으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 이래 각 군 총장 상호방문 등 군 고위급 교류 및 실무 차원의 국방정책실무회의, 각 군간 회의, 정보교류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다. 각 군 대학과 사관생도 상호 교환방문을 비롯하여 군 유학생 교류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인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일 해상 수색·구조훈련, 수송기 상호 방문, 국제평화유지활동에서의 상호협력(동티모르, 이라크) 등 다양한 군사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그동안 구축한 일본과의 군사적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하면서, 2006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관계’로 나아가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구현하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을 위해 양국 간 실질적인 안보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 한·중 관계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구도의 특수성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고 상호 호혜적인 한·중 군사 교류로의 발전이 일부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중 간 군사관계의 발전은 북핵문제 등 안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래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른 분야에 비해 초보적 수준에 있는 양국의 군사 교류를 다양화하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며, 그 시작은 상호주의에 근거한 교류의 정례화·제도화와 양국 간 군사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군사관계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중 군사교류는 1993년 12월 주중 한국 무관부와 1994년 4월 주한 중국무관부가 각각 개설된 이래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으며, 2003년 7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꾸준히



▲ 해사생도 중국 방문

04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양국의 군사교류는 크게 군 고위급 교류, 군 실무급 교류, 그밖의 교류 등 3개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다. 군 고위급 교류는 양국의 국방장관(국방부장), 합참의장(총참모장), 각 군 총장과 사령관(군구사령원 및 정치위원) 등의 상호방문으로 실시되고 있다. 군 실무급 교류는 국방부, 합참, 각 군 차원의 정보·정책 담당자 사이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다. 그 밖의 연례 국방학술회의, 군사연구·교육기관장 상호방문과, 육·해·공군 대학 학생장교의 단기 방문·연수 및 각종 체육교류 등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양국 군은 합정과 항공기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다. 한·러 관계



▲ 한·러 위험방지협정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수교 이듬해인 1991년에 양국 무관부를 개설하고, 군 지도급 인사 교류 등을 포함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등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1990년 수교 이후 16년 동안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왔으며,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5년 4월 우리 국방장관의 러시아 방문기간 중, 양국 국방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안보에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남북 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기여와 군사교류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 최초로 개최된 육군 대표회의와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방정책실무회의, 2002년에 체결된 「한·러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 협정」 이행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등에서 양국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06년 3월에는 러시아 공군사령관이 방한하였으며, 2006년 6월

에는 극동군관구 사령관이 방한하고, 2006년 9월에는 우리 국방차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군 고위급 인사의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써 양국 함정의 상호방문 중 대 테러 및 해상 공동 수색·구조훈련을 병행하는 등 군사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의 군사관계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2. 역외 지역과의 관계

가. 동남아 및 대양주 지역

동남아 지역은 냉전종식 이후의 안정된 안보구조가 ASEAN을 중심으로 지속 유지됨에 따라 점차 중요한 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말라카 해협 등 해양 수송로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경제 발전에 따른 방산협력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군사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동남아 국가들과 군 지도급 인사 교류, 정보교류회의,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군사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의 군 주요 인사들과 국방대학교 학생들의 방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양주 지역의 국방외교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은 해상 교통로 안전 확보에 우리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요 무기체계가 우리와 유사하여 방산협력 여건이 유리해 군사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5월에는 윤광웅 전 국방장관이 호주를 방문하여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호주 및



▲ 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



▲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

04 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뉴질랜드와 국방정책실무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상호 안보 관심사와 교류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수시로 함정 교환방문, 국방대학원생 상호방문, 군사교육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서 군사교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나. 유럽 지역



▲ 독일 「2005 한국의 해」 행사 시
국방부 군악대 참가

유럽 국가들과의 군사외교는 군사교류 활동을 통해 선진 군사교리와 기술을 발전시키고 군사과학기술의 상호 교환 등을 통한 군사교류·협력과 방산 수출 증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참전국과의 지속적인 유대 강화를 위해 참전용사 재방한, 참전 기념비 건립, 전쟁 미경험 세대에 대한 교류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의 주요 군사교류 활동은 2005년 9월 우리 국방부장관의 터키 방문과 2006년 7월 터키 국방장관 방한으로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과 우호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지역 주요 국가와의 정례회의체로는 국방정책실무회의,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정보교류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 방산협력을 중심으로 교류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군사교육 교류는 우리 군 장교가 독일 외 5개 국의 군사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 스웨덴 등과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터키,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자국의 장교를 우리 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군사교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 서남아 및 중동 지역

서남아 지역 국가와의 군사교류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국방대학원생 교환방문, 위탁교육 파견과 순항함대 상호 방문 등으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중동지역 국가와의 군사관계는 에너지 안보 면에서 전략적 가치의 중

요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중동 국가와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고 군사교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어 상호 무관부 설치, 방산 수출과 기술협력 등 호혜적인 군사교류 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2006년 2월에는 이라크 파병부대 전개 지원을 위해 카타르에 주둔하고 있는 미 중부사 소속부대 연락장교 파견을 위한 SOFA 협정을 체결하고, 11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연방(UAE)과 국방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중동국가와 군사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라. 기타 지역

북미 지역의 캐나다와는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양국 국방 현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해군 간 연합훈련, 함정 상호방문 등의 교류를 통하여 양국 간 군사적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활발히 확산되고 있는 지역으로, 방산협력과 군 교육교류 등 이들 지역 국가와의 군사교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3월에는 국방차관이 브라질, 멕시코, 과테말라를 방문하여 방산협력을 촉진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브라질과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중남미 지역과 미래 지향적인 방산·군수협력이 기대된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2004년 9월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과 2006년 5월의 아제르바이잔 방문, 2005년 국무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 우리나라와 CIS 국가들 간에 경제교류협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2005년에 카자흐스탄 해군 창설 지원, 군 지도급 인사 상호 방문, 「한국·카자흐스탄 군사교육교류협력 MOU」 체결 등 군사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방외교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과 CIS 국가 간의 군사 관계는 정부의 에너지 자원 확보와



▲ 합참의장 아랍에미리트 총참모장 접견



▲ 국방차관 한·브라질 국방협력협정 체결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04 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경제협력을 위한 외교와 방산협력 여건 조성을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안보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아직 군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세계 국가 수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사교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국제 평화 활동

PKO :
Peace-Keeping Operations

가.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PKO)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은 2차 대전 이후 국제연합의 탄생과 함께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 정전감시단(UNTSO)을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UNTSO :
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Observers

현재 활동 중인 유엔 평화유지군
('06.11월 현재)
- 112개 UN회원국 참여 중
- 수단, 레비논 등 18개 지역
- 82,000여 명
- 연간 약 50억 달러의 예산운용

1990년대 탈냉전 이후 세계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지역분쟁의 유형이 국가 간의 갈등보다는 국내분쟁과 내전 양상으로 변화함에 따라 최근의 평화유지 활동 또한 분쟁지역에 대한 감시 활동 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평화강제, Peace Enforcement)이나 분쟁해결 이후의 재건활동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참여형태도 군을 포함해 경찰, 민간 분야와 함께하는 복합적인 임무수행을 요구함에 따라, 그 유형도 감시단, 평화유지군, 또는 혼성 PKO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록 8 “유엔 평화유지 활동 현황” 참조

UNOSOM-II :
United Nations Operation in
Somalia II

1) 우리 군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

1991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무력충돌과 가뭄으로 기아에 시달리던 소말리아에 250명 규모의 건설공병단을 파견하여 모범적인 평화유지 활동을 펼쳤다(UNOSOM-II).

1995년 10월부터 1997년 2월까지 160여 명 규모의 야전공병단이 앙골라에서, 그리고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3년 동안 대대 규모의 보병부대가 동티모르에서, 각각 지역재건과 치안회복을 지원하여 인권 보호와 평화정착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2006년 5월 17일 제23진을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군과 임무를 교대하고 철수한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은 1994년 9월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현지 PKO요원 전원에 대한 의료지원임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에 대한 방역지원과 전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우리 군은 1994년에 인도·파키스탄의 유엔정전감시단을 파견한 이래로, 현재 그루지야, 라이베리아, 브룬디, 수단, 아프가니스탄 등에 30명의 영관급 장교를 군 옵서버로 파견하여 해당 지역의 정전감시 및 순찰, 조사, 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수차례의 PKO 참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유엔에서 참여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인정받아 국가 이미지를 고양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도적 구호활동과 지역 재건활동은 현지인들에게 한국인의 혼신적인 태도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을 심어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여,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유엔사무총장, 유엔사무총장특별대표 등 유엔의 고위직에 한국인이 선출되거나 선임될 수 있었던 기반을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가 다양한 국제정치 분야에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2) 평화유지 활동 참여 확대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기본 취지는, 지역분쟁과 이 때문에 발생하는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인류 공영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대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다.

특히 아직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국제 평화유지 활동의 참여를 확대하여 평화애호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확보하는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유엔 등 국제정치무대에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로 삼을 수 있다.

국방부는 국제 평화유지 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인 방안을 「국방개혁 2020」 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임무종료(‘06.5.17)

04 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민·관·군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참여지역을 선별적으로 다양화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유엔상비체제’의 격상, ‘PKO 상비부대 편성’, ‘국가급 PKO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상비체제’(UN Stand-by Arrangements System)는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국의 신속한 전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참여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PKO 참여가 가능한 「부대규모」를 UN에 통보하고, 2단계는 PKO 참여부대의 「세부기획자료」를 UN에 제출하며, 3단계는 UN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상비체제에 참여하더라도 유엔의 파견요청에 자동으로 응하는 것 이 아니라, 참여국이 독자적으로 파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분쟁지역에 대한 신속한 병력투사와 사전 훈련을 통한 즉각적인 대응이야말로 해당 임무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적정규모의 PKO 상비부대를 완비’ 하여 유사 시 적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참여 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PKO에 관한 정책의 연구와 민·관·군을 포괄하는 종합교육을 담당하게 될 ‘국가급 PKO센터의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이 센터의 설립·운용으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인 교육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관련 정책과 PKO 운영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다국적군을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활동

2001년 발생한 9·11테러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국제 테러를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국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테러리즘 등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국제사회의 평화 활동도 과거 유엔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활동하는 평화유지군(PKF) 형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롯한 지역안보기구나 특정국가 주도의 다국적군(MNF)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은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제테러를

PKF :
Peacekeeping Forces

MNF :
Multi - National Forces

세계 평화와 인류 안전에 대한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의 대 테러 연대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한 대 테러 국제 연대에 동참하고 전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신속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거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국군 부대를 파병하였다.

☞부록 9 “우리 군의 파병 현황” 참조

1) 동의 · 다산부대 아프가니스탄 파병

우리 정부는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368호와 제1373호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적 차원의 구호 및 진료 활동과 평화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회 동의(2001년 9월)를 비롯한 국내법 절차를 거쳐 해·공군 수송지원단을, 2002년 2월에 국군의료지원단(동의부대)을, 2003년 2월에 건설공병지원단(다산부대)을 파견하였다.

국군의료지원단은 현재 60여 명(연인원 670여 명)이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동맹군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방역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건설공병지원단은 현재 150여 명(연인원 1,030여 명)이 전후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하여 건설 및 토목공사와 한·미 연합 PRT(지방재건단) 지원, 대민지원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의 · 다산부대는 인도적 차원의 구호 · 진료활동, 재건지원 활동 등 기본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함은 물론 태권도 교실, 한글 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지역주민과의 친화관계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임무수행과 민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동맹군과 지역주민에게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PRT (Provincial/Regional Reconstruction Team) :
이라크의 지방정부 통치와 경제발전 능력 지원을 위해 구성된 美국무부 주도의 다국적 종합민사팀. 軍 주도의 치안유지에서 民 중심의 법치, 지방정부 능력개발, 재건, 경제 분야 발전을 위한 핵심역할 수행

2) 서희 · 제마부대 이라크 파병

2003년 3월 미국 주도의 동맹국이 이라크에 대해 군사행동을 시작한 이래 우리 정부는 이라크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한미 간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같은 해 3월 21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여 한국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회는 1개 대대 600명 이내의 건설공병지원단과 100명 이내의 의료

04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지원단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군부대의 파병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03.4.2.).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명 규모의 건설공병지원단 서희부대와 90명 규모의 의료지원단 제마부대를 편성하여 이라크 나시리아로 파병하였다.(’03.4.30.)

2004년 8월 31일까지 1년여의 기간에 서희·제마부대는 동맹군의 기지운용에 관한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전후 복구 지원 및 동맹군과 현지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서희·제마부대는 병원·학교 신축, 상·하수도 건설 등 46건의 전후 복구공사 지원을 비롯하여 약 1만 5천여 명에 이르는 환자의 진료와 각종 의료기구·약품·휠체어 기증, IT센터 건립과 장학 활동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서희·제마부대의 혼신적인 활동은 이라크의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여 평화 재건사단의 활동 발판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였다.

3) 평화·재건 지원부대 이라크 파병

미국은 2003년 5월 1일 이라크 전쟁의 종전을 선언한 이후, 같은 해 9월 4일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같은 해 10월 18일 추가파병 방침을 발표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12월 17일, 3,000명 이내의 병력으로 일정 지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하여 평화·재건을 지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추가 파병안을 확정하였다.

2004년 2월 13일 제245회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는 이라크 평화·재건 지원부대로 서희·제마부대를 포함한 3,600여 명의 정예 병력으로 자이툰 부대를 편성하였다. 이후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수 차례의 현지조사를 거쳐 이라크의 아르빌을 파병지역으로 선정, 2004년 7월 제1진 총 3,566명이 항공, 해상, 육상으로 이동하여 아르빌 현지 전개를 완료하였다.



▲ 자이툰부대의 사막지역 지상이동

이라크의 자이툰부대는 200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13,800여 명이 파견되어, 온 국민의 관심과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동안 우리 군이 소말리아를 비롯하여 동티모르, 양골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얻은 명성과 찬사를 이어감과 동시에 앞으로 중동 지역에서 국가적인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이라크 파병으로 한층 더 공고해진 한미동맹관계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파발마작전' 전술토의

자이툰부대의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인도적 지원, 친화활동, 치안유지활동 지원, 사회경제 개발토대 구축, 현지 주민 능력 개발 지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인도적 지원과 친화 활동으로는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주택의 개·보수와 신축을 위하여 자재를 지원하고 자립형 공사를 유도하여 현지 주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이툰 병원을 개원(04.11.27.)하여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지원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다기능 민사작전(Green Angel Operations)를 실시하여 주민 공동시설 설치 등 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민심을 조기에 확보하고 친화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밖에 문맹자 교실 개소, 의약품 기증, 태권도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지원과 친화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쿠르드 지방정부(KRG)의 주요 직위자에 대해 방한 초청행사와 정기적인 교류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치안유지활동 지원은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현지 경찰과 제르바니를 대상으로 경찰 장구, 차량, 무선통신 장비, 수사 장비, 시설경비 장비와 지뢰제거 장비 등 수백여 품목의 장비와 물자를 지원하여 현지 치안능력을 보강하였다. 아울러 공항 외곽의 검문소를 비롯하여 100여 동의 검문소 건설 등 치안관련 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지원으로 효율적인 치안유지 여건을 마련하였다.



▲ 화합의 마당 줄다리기

**다기능 민사작전
(Green Angel Operations) :**
이라크 아르빌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친화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이툰부대의 핵심활동.
의무·공병·정비기능 위주로 TF팀을 편성하여 대민지원, 주민홍보, 의료지원, 물품지원 등 마을 숙원사업 위주로 재건활동 실시

KRG :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제르바니(Zerbarani) :
이라크 쿠르드족의 자치 단체 조직으로 치안유지, 시설경비, 요인경호 등의 정규군 역할 수행.
1946년 창설된 전신인 페쉬메르가(Peshmerga)를 2004년 이라크 과도정부 수립 이후 '제르바니'로 명칭 변경

04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또한 현지 주민의 능력개발을 위주로, 자립의지를 고양하고 사회와 경제개발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한 활동은 사이툰 부대 활동의 백미로 꼽힌다. 새마을 운동 시범사업과 사이툰 기술훈련센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우선 새마을 운동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의 자립과 자조 의지를 북돋우고자 하는 사업으로, 쿠르드어로 번역된 새마을 운동 관련 책자 보급, 새마을 연수원 개원('05.3.), 마을회관 신축, 마을 공원 조경공사 등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각 대대급 부대별로 마을 단위 자매 결연과 자조 사업 지원으로 새마을 운동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현지 주민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2005년 2월 26일 개원한 사이툰 기술훈련센터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농기계·가전제품 수리, 제빵 기술, 컴퓨터 교육, 특수차량·중장비 운전 등 2개월 단위의 전문 기술을 교육하고, 쿠르드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수료생에 대해 80% 이상 취업을 보장함으로써, 현지인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

사이툰 부대원 개개인은 투철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과 한국군의 명성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사이툰 부대의 인도적 지원 활동은 동맹군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활동으로 평가되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군에게 ‘민사 작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판을 듣고 있다. 더불어 쿠르드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재건에 앞장섬으로써 현지 주민에게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쿠르드 지방 정부 대통령은 ‘우리에게 山을 제외하고는 친구가 없었는데 이제 한국인이라는 친구가 하나 생겼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



▲ 우리는 친구!

4. 다자안보협력과 국제군축 활동

가. 다자안보협력

오늘날 국제사회에는 영토·민족·종교 등 전통적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테러·마약·환경 등 비전통적·초국가적 문제들이 드러나 다자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자안보협력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지역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안보문제 즉,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수 국가 간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포괄적인 지역 안보 현안들을 다자 간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을 꾀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아직 냉전구도가 남아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안보협력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자안보협력은 초국가적 안보문제에 대해 범 지역적 차원의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적 역할과 함께 의사결정의 지연과 합의 결과 이행의 강제성이 없는 특성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구조적 안보문제 해결에는 현실적인 한계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안보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양자 협력관계를 보완하는 동북아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이를 기초로 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가

04 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아·태지역 국가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역내 다자안보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참여하는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회의체에는 정부 간 회의로 ASEAN Regional Forum(ARF), 비정부 간 회의로 아시아 안보회의(ASC), 동북아 협력 대화(NEACD), 아·태지역 안보협력이사회(CSCAP),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회의(LNWFZ-NEA) 등이 있다.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ARF 내 회의체에는 2003년 상설화된 「국방관리대화(DOD)」가 있으며, 2004년 출범하여 고위 국방관리들이 참석하는 「안보정책회의(SPC)」가 있다.

국방부는 ARF 회의에 매년 대표를 파견하여 한반도와 지역 안보문제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한편, 우리 군의 이라크 평화재건 활동 등 국제안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활동과 노력들을 홍보해 왔다. 또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일관된 정부방침을 회원국에 설명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ARF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난구호, 해양안보, PKO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바, 분야별 논의 동향과 발전 추이에 대해 유관기관과 부서의 각별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

2006년 4월 일본 동경에서는 동북아 지역 비정부 간 대화체로서 가장 오래되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제17차 「동북아협력대화 (NEACD)」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대신하여 6자회담 대표 전원이 참석하여 북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이 회의의 유용성을 확인시킨 바 있다.

국방부는 「국방정보공유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우리 정부의 국방정책과 국방개혁 내용을 소개하고 주변국의 이해를 유도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6년 6월에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에는 윤광웅 전 국방장관이 2005년에 이어 두 번째 참가하여, 「국제 안보를 위한 군사력

'참여'라는 주제로 연설하여 한국군의 국제 평화유지 활동과 '유엔 상비체제' 가입 수준을 현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려는 노력 등을 소개하고, 국제적 규모의 재난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노력이 지역의 안정, 평화, 공동 번영의 증진은 물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데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진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나. 국제군축 활동

오늘날 국제사회는 핵·화학·생물 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등의 확산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들 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UN에 가입하면서부터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 군축과 비확산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왔다. 관련 국제체제의 참여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국제군축과 비확산 체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국제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유사 시 국제사회의 지지와 적극적인 지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구나 조약을 살펴보면 【도표 4-6】과 같다

【도표 4-6】 국제 비확산체제



▲ 제5차 아시아 안보회의 연설 ('06.6월)

UN DC :
UN Disarmament Committee

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PCW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CWC :
Chemical Weapon Convention

BWC :
Biological Weapon Convention

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NSG :
Nuclear Supplier Group

ZC :
Zangger Committee

AG :
Australia Group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WA :
Wassenaar Arrangement

04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활동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여 남북 간 군사적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여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화학 방호 교육

• 개요

- 실시 : '05년 이후 매년
- 대상 : 아시아 각 국 화학 테러 대응 관련자
- 주관 : OPCW와 국군화생방방호 시령부

• 주요 내용

- OPCW의 임무 및 역할
- 화학무기 테러 대비 대응체계 구축
- 탐지·방호·제독 물자 현황 및 사용법

우리 군은 군비통제 관련 교육, 연구, 정보교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관련 전문성을 향상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군사 기술 수준 향상과 방위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OPCW의 요청으로 아시아권의 '국제 화학방호교육'을 성공적으로 주관·실시하여 화학무기 확산 방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2006년에는 16개 국 22명에게 화학 방호체계와 대응시스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분야 아시아 각국의 협조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우리나라 통합 방위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CWC는 2003년 우리의 주도로 채택된 바 있는 보편성 확보 노력으로 현재 181개국이 가입하였으며, 북한 등 14개 미참가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 제11차 총회에서 우리나라라는 집행이사국 재선출로 아시아 지역내에서의 입지를 재확인하였다.

2006년 BWC 제2차 평가회의에서도 우리나라라는 보편성 확보방안의 도입을 제시하여 비회원국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협약이 조기 이행 되도록 노력하는 데 각국의 지지를 유도한 바 있다.



▲ 전략물자 수출통제

2002년부터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부처 협의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정부 내 유관 부처 사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우리나라의 방산물자와 이중용도 품목이 테러리스트들이나 우려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예방 및 차단하고 있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2006년 10월 핵실험에 대응한 대량살상무기 관련물자 및 자금의 대북 이전 통제를 요청하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 후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공조하고 있다.

이처럼 국방부는 적극적인 국제군축과 비확산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크게 높여 국제 군축과 비확산 분야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4절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우리 군은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기조에 따라 한반도에 실질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일련의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첨예한 긴장 상태가 유지되어 온 서해 해상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한편,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 등 군사 지역을 사이에 두고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지원·보장함으로써 이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의 계기로 활용해 왔다.

그 결과 남북 간 대결의 상징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다소 완화 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 군사분계선. 유엔군사령관 통제 하에 있는 지역과 북한군사령관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분할하는 군사적인 경계선. 군사분계선은 임진강 북쪽(한강하구의 동북방 경계선)에서 시작하여 군사분계선 표시번호 0001에서 동해안으로 군사분계선 표시번호 1292까지 계속됨

NLL (Northern Limit Line) :
북방한계선.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할 목적으로 동·서해에 우리의 해·공군의 초기활동을 한정하기 위하여 '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선으로서 동해는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서해는 서북 5개 도서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음.

1. 서해 해상의 군사적 긴장완화

서해 해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은 북한 함정이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한 소위 '서해사태'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남북 해군 간 충돌이 있었던 1999년 6월 15일 '연평 해전'에 이어, 2002년 6월 29일의 '서해 교전'은 「6·15 남북 공동 선언」 이후 조성되어온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서해 해상에서의 긴장완화를



▲ 서해교전에 참전한 참수리 제357호정

04 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04.5월)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2004년 5월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성사시켰으며, 이어 6월에 열린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과 실무대표회담에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이하 “6·4 합의서”)와 동 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서해 해상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남북 쌍방은 「6·4 합의서」에서 ① 국제상선공통망 활용, 교신 ②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 제정, 활용 ③ 제3국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 ④ 서해 통신연락소 설치 등 긴급 연락체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였다.

특히 국제상선공통망과 기류 및 발광신호 등 보조수단을 활용한 상호 교신은 쌍방 함정이 항로 미실, 조난 구조 등으로 인해 서로 대치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우발충돌 발생 가능성을 감소하고 나아가 서해 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서해 해상의 민감한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제3국 어선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남북 쌍방이 견해를 같이 하고, 불법조업선박에 대한 정보를 매일 교환하기로 합의하여, 2004년 6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남북 간 초보적 수준이나마 신뢰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8월 13일부로 서해 통신연락소가 설치되어 남북 해군 당국 간 유·무선 수단으로 직접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었고, 이를 통해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충돌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충돌이 발생한 때에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했음에도 아직 국제상선공통망을 이용한 상호 교신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조치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정부는 서해 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 및 바다목장 조성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대북 협의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6년 3월 2일부터 3일까지 판문점 ‘통일각’에서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우리 측은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면서 북측에 서해 평화정착을 위한 협의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서해 해상의 충돌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로써 쌍방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2개월여 후에 재개된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06.5.16.~18.,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도 북측은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확정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긴장 완화를 위한 논의를 회피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북측이 제기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문제 우선 협의 주장」과 관련하여 「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기존 남북이 관할해온 수역과 그 기준선인 북방한계선(NLL)을 존중·준수한다는 원칙과 ② 남북기본합의서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전제로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북측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6·4 합의서」에 따라 우발충돌방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북측과 서해 평화정착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북측의 NLL 무실화 기도에 대해서는 「NLL은 지난 50여 년간 지켜져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NLL을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MDL)과 같이 확고히 유지 할 것이며, 북측이 침범할 경우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은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다.



▲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06.5월)

2.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완화

가. 남북관리구역 통행의 군사적 보장

우리 군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군사적으로 지원·보장하는 조치를 하고 군사 분야의 긴장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 결실로서 2000년 9월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교류협력의 군사적 지원과 함께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특히 2002년 9월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동·서해지구 남북 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이하 “군사 보장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경의선과 동해선 지역의 비무장지대 일부를 개방하여 남북관리구역이 설정되었다. 또한 이를 연결하기 위한 철도·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되어 2006년 12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남북 간에 연결된 도로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육로관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후 철도·도로 연결 작업과 통행의 군사적 보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군사 당국 간에는 20여 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고,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군상황실에 전화와 FAX 각 1회선을 설치하여 남북 군사실무자 사이에 매일 직접 통화와 각종 문서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의 일부 구역이 개방되어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이를 통해 많은 인원과 차량·물자가 오가도록 조치한 일련의 과정에서 남북대치의 현장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합의 이행

앞에서 언급한 「6·4 합의서」는 서해 우발충돌방지와 관련된 합의와 더불어 군사분계선 일대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도 포함하고 있다. 이 합의서는 ① 2004년 6월 15일부터 선전활동 중지 ② 2004년 8월 15일까지 3단계로 나누어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수단 제거

③ 선전수단 재설치와 선전활동 재개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합의서로 ‘총성 없는 전쟁’으로 비유되어 오던 남북 간 심리전 활동이 중단되고 그 수단들이 제거됨으로써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을 뒷받침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남북 교류 · 협력 사업의 군사적 지원

우리 군은 대부분의 남북교류 · 협력사업이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등 군사 지역을 사이에 두고 육 · 해 · 공로를 거쳐 왕래하고 접촉하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군사적 영향평가로 이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2004년 1월 이후 남북 간 통행량은 【도표 4-8】과 같다. 육로 통행의 경우, 2002년 12월 경의선 · 동해선 임시 도로가 완공된 이후 2003년도에는 600여 회 수준 이던 남북 간 육로통행량(MDL 통과, 편도기준)은 개성공단 건설공사와 맞물려 2004년에 3,200여 회, 2005년도에는 5,000여 회로 급증하게 되고, 기간 중 왕래 인원도 약 200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군은 경의 · 동해선 남북관리구역 통행과 관련하여 유엔사와 북한군과의 협의 및 호송 · 경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로 통행도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전에는 남북한 간 물자수송을 위하여 일일 평균 5척의 선박이 운항하는 정도였으며 선박의 대부분도 중국, 파나마 등 제3국적선이었다. 그러나 2005년 8월 이후 2006년 10월 현재까지 총 150척의 북한 선박이 우리 정부의 운항승인을 받았고 우리 국적선도 해주항 모래운송 등 월 평균 약 530척이 북한 수역을 운항하고



▲ 지뢰제거를 위한 장비 및 병력 투입 장면



▲ 북한 화물선 선적 작업



▲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

04장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계획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운항 중 전탐감시 및 유사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서울 ~ 평양간 서해 임시직항로를 처음으로 운항한 이후 운항 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군은 군사적 영향평가를 통하여 위해요인 등을 분석해서 남북 간 항공기 운항계획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운항 중 공중감시 및 유사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도표 4-8】 남북간 통행량('04.1~'06.10)

구분	육로	해로	공로
횟수	13,000여 회	12,000여 회	320회
인원 수송량	200만여 명	1,800만여 톤	27,000여 명

한편, 우리 군은 남북 철도 · 도로 연결공사를 위해 지뢰 제거와 노반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2006년에도 민통선 이북 개성 공단 송전선로 밑에 부설된 지뢰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남북군사당국간 협의 및 합의와 그 이행과정의 접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북측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 순수 군사문제에 대한 협의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 반면, 교류협력의 군사적 지원에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안보상황과 남북 당국 간 대화 추이를 보아가면서 「철도 · 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를 비롯하여 한강 하구 골재채취사업, 임진강 공동 수방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의 군사적 지원 문제를 협의 · 추진하여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경의선 노반공사 군 지원

제5장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제1절 정예 국방인력의 확보와 관리

제2절 국방자원관리의 선진화

제3절 국방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

제4절 국방정보화 추진

제5절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

제 1 절 정예 국방인력의 확보와 관리

급변하는 안보정세와 첨단무기체계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국방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투력 발휘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국방인력 구조는 문민중심의 국방정책 결정과 집행을 보장하고 군은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본부의 정원을 조정하고 국방민간인력 활용 확대 등 문민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간부들의 전문성 강화와 병사들의 자기계발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의 군복무 의욕고취와 사기증진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증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군인봉급과 수당체계 개선, 병영시설과 주거여건 개선, 의무지원 확대와 군 가족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장병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더불어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군인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직업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1. 선진형 국방인력구조 정착

가. 국방부본부 공무원 전문성 강화

국방부는 국가정책과 국방정책을 합리적으로 연결·조정하고 국방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립적 관점과 균형감각을 갖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장관을 보좌할 수 있도록 참모조직에 문민 우수인재를 배치·활용하여 군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본부의 인적구성을 개선하여 문민중심으로 국방 정책을 결정·집행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국가정책과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군은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문민 중심으로 편성·보직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민간인의 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방정책과 군사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본부에 근무하는 민간 전문관료를 확대하고, 현역은 필수직위 위주로 보직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과 직업군인으로 조화된 인력구조로 전환·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국방부 본부의 공무원 정원은 조직의 안정과 민간 전문인력 확보 등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본부 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라 국장급 직위는 2005년과 2006년 2년 동안 법무관리관, 인사기획관, 군사시설기획관, 국제협력관, 홍보 관리관 등 5개 직위가 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써, 2006년 6월 1일 현재 국장 직위 15개 가운데 군사보좌관, 정책기획관, 동원기획관, 군수관리관의 4개 직위만 군인으로 보직되고 있다.

한편, 팀장급은 68개 직위 가운데 10개 직위가 2007년까지 일반직 공무원 직위로 전환되고, 담당급인 중령·소령은 114개 직위가 2009년 까지 일반직 공무원 직위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국방부본부의 문민직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군인 직위는 필수직위 위주로 최적화 해 나갈 계획인데 국방부본부 공무원 정원조정 추진계획은 아래 【도표 5-1】과 같다.

【도표 5-1】 국방부본부 공무원 정원조정 추진계획

직급별	전체	2006년 6월 1일 현재				2009년 말			
		군인	%	공무원	%	군인	%	공무원	%
합계	709*	271	38	438	62	206	29	503	71
국장급	15	4	27	11	73	4	27	11	73
팀장급	68	23	34	45	66	20	29	48	71
담당급	626	244	39	382	61	182	29	444	71

* 장·차관, 본부장급 이상, 정책보좌관, 위관 이하, 사무원 제외

나. 여성인력 활용 확대

국방부는 정부와 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여성정책을 적극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 국방여성정책팀 업무추진방향 토론('06.5)

구현하기 위해 「국방여성정책팀」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여군으로 한정하여 추진해 온 여성 정책을 국방부내 여성 공무원과 군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다양하고 폭넓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방여성 인력은 여성공무원이 공무원 정원 대비 약 33%이고, 여성군무원은 군무원 정원 대비 약 15%로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6년 국방 여성 인력 현황은 【도표 5-2】와 같다.

【도표 5-2】 2006년 국방여성(공무원/군무원)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4~5급	6~7급	8급 이하
계	4,428	149	1,021	3,258
공무원	280	17	93	170
군무원	4,148	132	928	3,088

또한 여군인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2006년 현재 장교와 부사관 4,000여 명을 2020년까지 11,600여 명으로 증원함으로써 간부 정원대비 장교는 2.7%에서 7%로, 부사관은 1.7%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이며 여군 인력 연도별 확대 계획(안)은 【도표 5-3】과 같다.

【도표 5-3】 여군 인력 연도별 확대 계획(안)

(단위 : 명)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2007년	4,967	3,704	453	810
2010년	6,340	4,459	719	1,162
2015년	8,853	5,983	1,308	1,562
2020년	11,606	7,790	1,938	1,878

※ 근거 : 각 군의 미래 군 구조안

여군인력 확대를 위해 각 군 사관학교 모집정원의 10%를 할당하여 여생도를 모집하고, 육군의 여군사관(간부사관), 그리고 해·공군의 여군 학사 장교(여군사관)를 확대 선발하고 있다. 여군 부사관 역시 점차 인원을 증원할 예정이며, 목표 연도인 2020년에는 여군 인력이 2006년

대비 약 2.8배로 대폭 증원될 예정이다.

여군의 활용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군인은 남녀 불문하고 모든 직위에 배치할 수 있으며, 전·평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있다. 다만, 지상 근접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연대급 이하 부대, 특수작전이나 장거리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직무와 관련된 신체 요구조건이 대다수 여군에게 부적절한 부대·직위의 경우에 한하여 여군 배치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여군은 정책부서 그리고 주요지휘관 및 참모, 전투기·헬기 조종사, 전투함 승조원뿐만 아니라 특수 분야 및 해외 파병 군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도 해외에 파병된 여군은 총 60여 명으로 서부사하라, 아프가니스탄, 자이툰부대 등에서 맡은 바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 군의 전투병과 직위(소대장, 조종사, 특수 부대, 합정근무)와 기술 직위(무기정비, 방공관제) 등 각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한편 『여성 발전 기본법』(2002년 제정)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분석 도구인 「성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으며 각 군에도 이 제도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여군소대장과 함께



▼ 영공수호를 다짐하며



▲ 대양해군을 지향하며

무적해병대 ▶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아울러 국방여성이 군 생활과 가정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강화 및 임신·출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군 특성에 부합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며, 모성보호에 대한 남성의 의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병 양성 평등의식 확산과 능력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국방여성 네트워크 한마당 행사('06.9.6)

국방여성 리더십 향상을 목적으로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과 공동으로 리더십 소집교육을 육·해·공군 여군지휘관과 훈육요원, 여성 공(군)무원을 대상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 실시하였다(2006년 7월). 같은 해 9월에는 국방 여성들의 공감대 형성과 사기증진에 기여하고자 여군 창설 제56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전 국방여성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다. 국방 민간인력 활용 확대

국방 민간인력 활용 확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력감축 기조 아래, 각 군 본부 등 상급부대와 전투근무지원부대의 군인직위 가운데 민간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직위에 대하여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현재 군 병력의 3.9% 수준인 2만 6천여 명의 군무원 정원을 2020년에는 군 병력의 6% 수준인 3만 명으로 확대하고, 병행 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임용제도를 개선하며, 개방직·계약직 활용을 확대하는 등 군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방 분야의 문민기반 확대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변화와 혁신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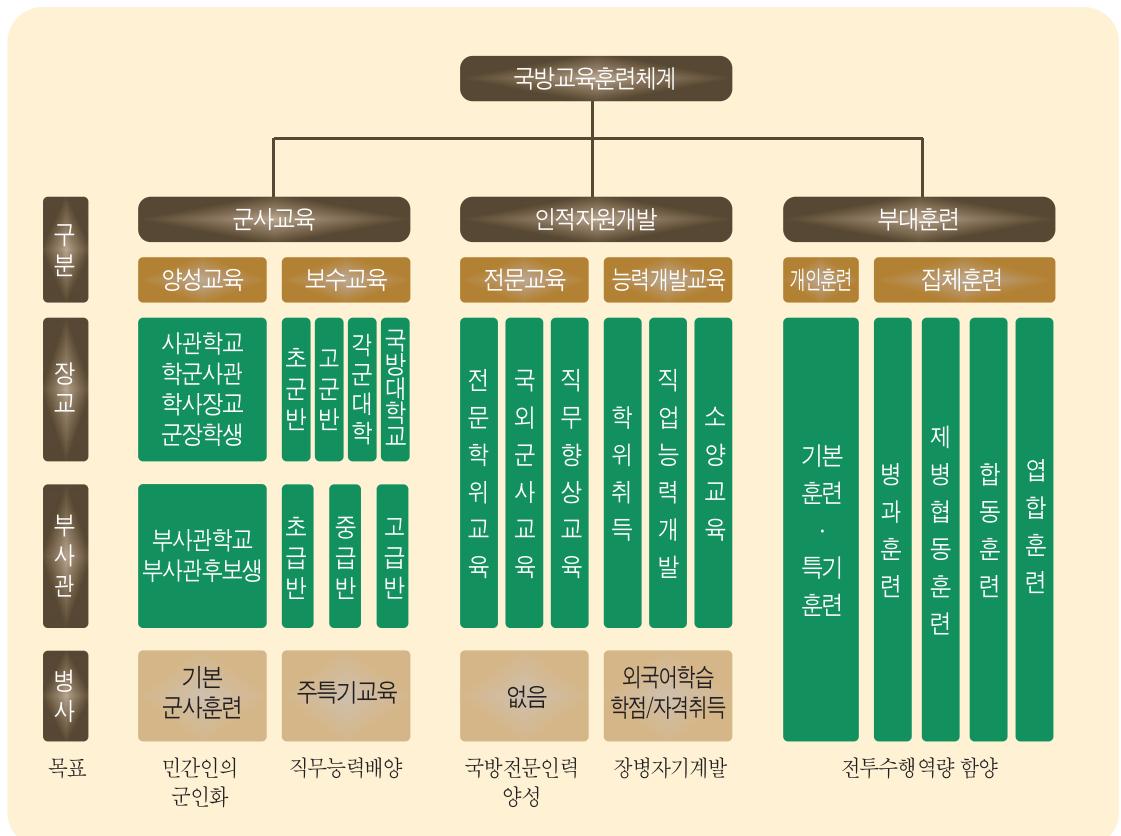
2. 군 인적자원 개발

우리 군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장병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써 오늘날 국방력의 기초를 다져왔다. 특히 무기체계의 정보화·첨단화에 따라 우수인력의 육성과 전 장병의 역량개발이 전투력 발전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 국방교육훈련의 체계 개선

기존의 국방교육훈련체계는 크게 학교교육과 부대훈련으로 구분되었으나, 정예장병 육성과 전 장병의 역량개발을 위해 군사교육과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부대훈련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표 5-4】 국방교육체계 개념도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군사교육은 민간인의 군인화를 위한 양성교육과 군 직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으로 구분되며, 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한다. 인적자원개발은 국방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과 장병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능력개발로 구분되며,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 e-러닝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부대훈련은 장병과 부대의 전투수행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훈련과 집체훈련으로 구분되며, 국방교육체계 개념도는 【도표 5-4】와 같다.

나. 군사교육 발전

우리 군은 그동안 군사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우수한 초임장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 하부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학군장교 양성과 부사관 양성제도를 개선하였는데, 특히 10개 대학에 학군단 편성을 추가로 인가함으로써 지역별 우수대학 출신의 장교들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군사학 학문체계를 발전시키고 군사학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관학교에서는 군사학 학사학위를 복수전공으로 수여하고, 국방대학교는 군사학 석사과정을 운영하며, 국방부본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보정책, 획득, 정보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참모대학 및 각 군 대학, 사관학교 등의 교육내용을 검토하여 합동군사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있으며, 특히 사관학교는 상호 친선교류활동을 통하여 타군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전문인력 육성

국방의 전문화·과학화를 주도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위교육은 정책부서, 학교기관 및 연구부서에서 활용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석사와 박사과정에 해마다 420여 명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있다.

국외군사교육은 선진 군사지식 습득, 국가별 지역전문가 육성, 우방 국가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보 및 방산 관련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연간 약 40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특히 한미 군사교육교류협의회를 구성하여(2006년 3월), 우리 측에 적합한 교육 과정·식별, 실무자 간 의사소통 증진과 양국 군사 교육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교육 교류 국가와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특히 2006년도에는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등과 구체적인 군사교육 교류협력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외국 군인의 국내 군사학교 수탁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육군정보학교에 한국어 과정을 신설하였다.



▲ 한미 군사교육교류협의회

라. 민·군 교육교류 활성화

민·군 교육교류는 교육의 전문성, 개방성,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 교육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대학교, 사관학교 등 학교기관과 각 군을 중심으로 민간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교수 상호지원, 학술정보 교환, 공동연구, 학술회의 개최 등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군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에 따라 군에서 실시한 교육훈련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군 교육훈련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간부들에게 보다 나은 취학여건을 보장해 주고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부대 안에 민간대학(원) 분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마. 군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

우리 군은 병사의 82%가 대학 재학 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한 자원으로 구성되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학력수준을 보유한 군대이다. 따라서 병사들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지식역량을 향상시켜 전투력 증강과 국가·사회의 지식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범정부적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차원에서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 군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통한 e-러닝으로 군 복무 중에 대학 학점을 취득하고 군 교육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2006년에는 모범장병 1,000여 명이 영어마을에 입소하여 체험 기회를 가졌으며, 외국인 강사, 주한미군, 군내 어학 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육군 11개 병과학교가 학점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공군 기술학교와 정보통신학교도 학점 인정을 위한 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병의 경우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 결과가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군에서 대학 학점을 취득하게 하고 장병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사이버 지식정보방과 연계하여 「장병자기계발 e-러닝포탈」을 구축하여 어학, 자격증, 대학강좌, 교양 등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일과 후 자기계발 학습

셋째, 장병들에게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와의 연계성이 높은 군 특기 분야에 대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 제도를 확대하고,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民間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취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군 인적자원개발정책으로 군 복무를 인생의 발전기·도약기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1975~2005)은 【도표 5-5】와 같다.



▲ 장병 영어마을 입소

【도표 5-5】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1975~2005)

(단위 : 명)

구 분	계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75~'79	35,381	2,313	16,747	16,321
'80~'89	77,683	15,724	49,320	12,639
'90~'99	97,100	12,850	84,250	-
'00~'05	48,988	8,028	40,960	-
계	259,152	38,915	191,277	28,960

3. 선진형 군 복지 및 의무지원체계 개선

가. 장병 처우개선

1) 군인 보수체계 개선

군인의 보수체계는 『군인 보수법』을 적용해야 하나 현재까지는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군복무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인만이 겪는 격오지 근무, 잣은 이사, 자녀교육의 어려움, 조기퇴직, 재취업 곤란 등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군인 보수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독자적인 보수체계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직업군인의 봉급은 민간 중견기업 임금수준 이상을 목표로 하고,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적정한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기 위해 『군인 보수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병 봉급은 2006년에 상병 기준으로 65,000원을 지급하여 2005년 대비 40% 인상하였고, 2007년에는 80,000원으로 인상하여 의무 복무기간 중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충당하게 할 예정이다.

2) 군인 수당체계 개선

군인 수당체계는 군 복무환경의 특수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종 수당제도를 도입하고, 군·병과별로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격오지 근무, 자녀 교육환경의 불비, 가족과의 별거생활, 잊은 이사 등 열악한 복무환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가족별거수당,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군의관 특별진료수당, 부사관 장려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지급수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며, 고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근무여건을 고려한 접적지역 특수작전수당, 매복수당, 야외숙영 수당 등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가계보전 성격의 수당(가족수당, 주택수당, 학비보조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군 양성 교육기간을 현재는 50%만 호봉에 산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0%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 급식 개선

3) 장병 급양 향상과 피복류 품질 개선

신세대 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하면서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표 5-6】과 같이 장병 기본 급식비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민간대비 90% 수준으로 향상 시킬 계획이다.

피복류는 사회의 의류발전 추세에 맞추어 군 피복을 연차적으로 경량화하고 열과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는 기능성 피복으로 개선함으로써 장병의 품위유지와 전술

【도표 5-6】 장병 기본급식비

(단위 : 원/1인 1일)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군 (민간대비)	4,805 (82%)	5,000 (83%)	5,240 (85%)	5,507 (87%)	5,782 (88%)	6,070 (90%)
민 간	5,877	6,024	6,175	6,360	6,551	6,747

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피복류의 호수체계를 KS규격과 부합되도록 상용품 체계로 다양화함으로써 장병 개개인의 신체에 적합한 피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복류는 【도표 5-7】과 같이 「피복류 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전투화, 하전투복, 런닝, 팬티 등 주요 품목을 우선 개선하였고, 모양말·전투모·운동복·장갑 등을 시중상품 수준으로 품질을 개선하여 연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도표 5-7】 피복류 개선 5개년 계획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개 선 품 목	방상내피 동내의/모양말 단화/휴지 영내활동모	전투모/운동복 장갑/외출가방 면도기/날	방한피복 장갑 스웨터 손톱깎기	방탄복 런닝/팬티 야전삽 축구화	하계전투화 장구류색상

나. 병영시설 및 주거 여건 개선

국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의 향상 등 사회발전 추세에 맞추어 낡고 좁은 생활관과 군 간부 숙소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병영시설은 병사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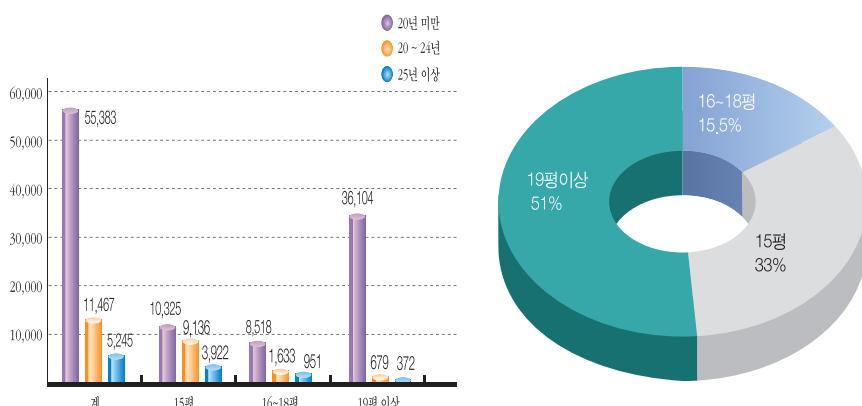
생활관은 신세대 장병들의 성장환경에 맞게 선진국형으로 1인당 전용 면적을 0.7평에서 1.9평으로 확대하여 소대단위 침상형에서 분대 단위 침대형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06년에는 6,981억원을 투자해 육군 통합막사 144개 대대, GOP와 해·강안부대의 생활관 100개 동, 해·공군 생활관 134개 동을 개선하였다. 병영시설 개선사업은 전방지역과 현대화되지 않은 노후막사를 2010년까지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이미 현대화 개수된 침상형으로 설치된 생활관도 2015년까지 침대형으로 교체 할 계획이다.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군 간부 숙소는 2000년부터 총 9,637억 원을 투자하여 15평 이하의 협소한 관사와 25년 이상 된 노후관사 16,540세대를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노후·협소한 관사가 27,487세대나 있어 전체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군 관사 건립연도와 평형별 현황은 【도표 5-8】과 같다.

2011년까지 국민주택 수준인 24~38평형 이상으로 27,487 세대를 개·신축할 계획이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투자방식(BTL)으로 18,000세대를 건축하여 관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도표 5-8】 군 관사 건립연도 및 평형별 현황 (2005년 12월말 기준)



독신간부 숙소는 25년 이상 노후된 숙소가 상당수이고 보유율은 62%이며 1실 당 2~3명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11년까지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1인 1실 기준으로 25년 이상된 노후된 숙소를 개축하거나 부족한 숙소 31,430실을 신축할 예정이다.

다. 군 의무지원체계 개선

군 작전환경 변화에 적합한 의무지원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기 위하여 의무지휘조직체계를 단일화하고, 의무지원을 의무작전과 의무행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며, 군진의학조직체계도 재정립하여 군 특수의학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우수한 군 의료인력의 확보와 양성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복무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가칭 ‘국방 의·치학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며, 군 의무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기본 교육을 실시하여 최상의 진료능력을 항상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군 병원의 운영체계는 환자의 진료접근권을 보장하고, 병원별 특성에 따라 기동지원병원, 거점병원, 중앙병원으로 구분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른 지역중심 치료종결체계로 개선할 예정이다. 야전 의무지원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단급 의무대의 진료과를 추가 개설하고, 야전의무 시설·장비의 모듈화·표준화를 추진하며, 환자 후송을 위하여 항공 의무후송 대대를 창설하고 개선형 구급차를 조기 배치할 예정이다.

국군수도병원은 진료수준을 대학 병원급으로 향상시켜 연구·교육기능을 갖춘 수련 병원으로 육성하고, 앞으로 21세기 유비쿼터스 형의 ‘국군 중앙의료원(가칭)’이 건립되면 임무를 전환할 예정이다.



▲ 최첨단 수술 장면

기동지원병원 :
전시 지원부대에 대한 기동 의무지원 실시, 최소한의 수술기능을 부여하는 병원으로 전방은 벽제, 일동, 춘천, 강릉이며, 후방은 부산병원이 여기에 해당됨.

거점병원 :
민간 종합병원급 진료를 실시하여 전 군 수술환자 및 지역환자에 대한 의무지원을 실시하는 병원으로 대전, 양주, 원주, 대구, 광주병원이 여기에 해당됨.

중앙병원 :
전 군환자에 대한 대학병원급 진료를 실시하며 현재 수도병원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국군중앙의료원이 건립되면 임무를 전환할 예정임.

라. 군인가족 생활여건 개선

1) 군 자녀 교육지원

직업군인은 군 복무환경의 특성상 격오지 근무와 잦은 이사, 가족과의 별거생활 등으로 자녀교육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이의 해결방법으로 군 자녀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기숙사 시설 확충과 대학특례입학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숙사 시설은 전국 10개 도시에 12개 소를 운영(약 2,000여 명 수용)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서울 지역에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군인자녀의 대학특례입학은 2006년 현재 62개 대학으로 확대시행 하고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있으며, 2007년에는 75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특례입학 대상 대학을 질 위주로, 취업전망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자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순회 입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명회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저출산 현상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저출산 현상을 장차 경제활동 인구감소 등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다자녀 가정에 군 숙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넓은 평수의 관사를 배정하며, 전세자금 우선지급, 복지시설 이용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방부 출산 인센티브 부여 지침」을 시행하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출산 친화 직장 문화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부부군인 인사관리 방침 개정 등을 추진하고,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 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군인 연금법』을 개정하였다.

3) 휴양시설

현재 군은 9개소의 중앙휴양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한편, 민간 콘도 회원권 2,324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구좌 이상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 군 휴양시설 서귀포 콘도

직업군인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현재 29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육군의 계룡대 지역과 항공학교, 공군의 서산 비행장 등에 3개소를 증설하고 있으며, 추가로 해군은 해남에, 공군은 오산지역, 사천비행장 등에 3개소를 추가로 증·신설할 예정이다.

앞으로 휴양시설은 벨트개념으로 한 지역에서 휴식과 레저활동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국내 주요관광지역을 권역별로 패키지화(복지회관, 휴양소, 콘도, 체력단련장 등)하여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마. 전역예정간부 취업지원 강화

1) 취업지원 추진실태 및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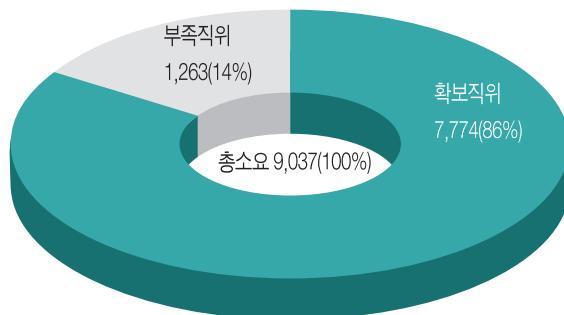
제대군인의 전역 후 모습은 ‘현역 군인의 미래상’ 이므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현역장병의 사기진작과 직결되어 국방력 강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국방부와 각 군에 제대군인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군차원의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취업지원정책 방향은 첫째, 20년 이상 장기 복무자에게 군내·외 취업 직위를 확대하여 취업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둘째, 10년 이상 장기 복무자는 직업보도교육을 통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 관련 및 민간 분야 직위에 제한된 취업을 지원하며, 셋째, 10년 미만 복무자는 구인·취업정보 안내 등을 통하여 취업 여건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업지원정책 방향을 근간으로 전문 지식과 군 경험의 풍부한 제대 군인들은 군 교육 기관의 전임교수로, 훈련경험이 풍부한 예비역은 과학화 훈련교관으로 채용을 확대하고, 그 외에도 군 복지시설 관리요원, 예비군 지휘관, 산하기관 등의 취업 직위를 확대·개발하고 있다. 취업 직위 확보현황은 【도표 5-9】와 같다.

【도표 5-9】 취업직위 확보현황 ('0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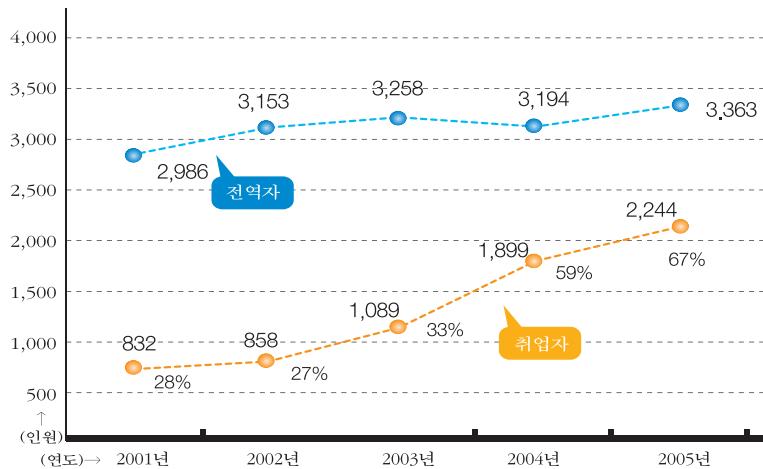


▲ 전역예정 간부 정보통신교육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취업률은 【도표 5-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도표 5-10】 취업실적 ('01~'05년)



* 전역자 : 해당연도 전역자 * 취업자 : 5년 이내 전역자 중 해당연도 취업자
※ 최근 5년 이내 전역자 평균 취업률 43%

2) 직업보도교육 강화

전역예정 간부의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취업과 연계한 맞춤식 직업보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취업능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있다.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맞춤식 교육으로 주택관리사·인성교육 지도사·항만물류관리사·중소기업 현장관리자·행정사·한자지도사 과정 등을 개설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취업에 간접적으로 연계된 각종 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설학원교육 등을 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에는 군·산·학 협약체결 등을 통하여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식 현장교육 활성화로 취업률 제고와 직업능력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격오지부대 근무 장병의 취업지원 정보제공 편의를 위해 2006년부터 전방부대 순회교육 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전역(예정)장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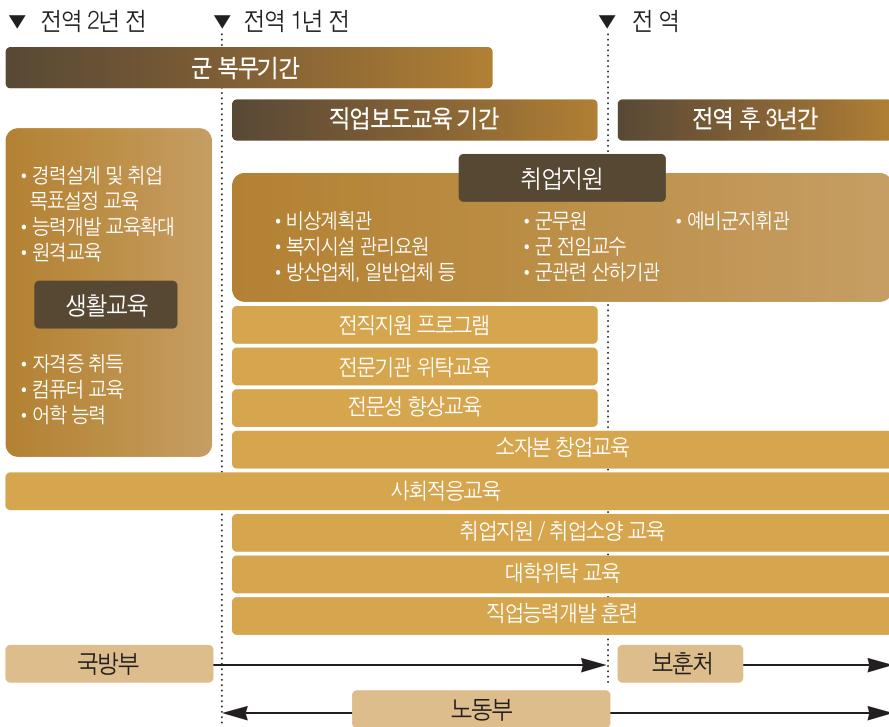


위한 취업·창업 박람회(매년 5월, 10월)를 개최하고 구인·구직의 날을 활성화하여 현장 취업상담과 채용을 유도하는 한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국방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국방취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과 취·창업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희망자와 상담,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교류, CEO e-mail 등을 통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군 버스 이용 광고, 국군 위성 TV 정례 홍보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방 직업 보도체계는 【도표 5-11】과 같다.



【도표 5-11】 국방 직업보도체계



바. 군인연금제도의 개선

1) 군인연금제도의 특성

군인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1960년 1월 1일 제정)에 포함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군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963년 1월 2일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되었다.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으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 때문에 퇴직·사망한 경우와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과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회 보험적’이고 ‘생계보장적’ 성격 이외에도 ‘국가보상적’ 성격이 강한 연금 제도이다.

국가보상적 성격이 강한 이유는 군인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시 목숨을 바쳐서라도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시에는 상시근무태세 유지와 훈련, 잊은 이사 등으로 사생활이 제한되며, 진급을 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생애 최대 지출기(45~56세)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전역을 하게 되고, 전역 후에는 복무 중 취득한 지식이 군인의 직업적 특성상 일반 민간사회 활용업무와 부합되지 않아 취업이 제한되는 등 군 직무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2)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는 197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국가에서 부족분을 보전받고 있는 실정이다. 적자 이유는 시행초기부터 적정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연금수급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즉, 1970년 이전 전역자에 대해서는 『군인 연금법』이 제정되기 전인 1959년 이전 기간에 대하여 기여금을 면제하고 연금을 지급하였고, 6·25전쟁, 월남전 등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없이 그 기간을 3배로 계산하였으며, 군 직무의 특성에 따른 조기전역으로 다른 연금 수급자에 비해 연금수혜기간이 장기인 사람이 많다. 이에 따라 군인 연금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인 연금법』을 개정하여 왔다.

2000년에도 『군인 연금법』을 개정하여 【도표 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과 국가부담률을 각각 7.5%에서 8.5%로 인상하였으며, 연금인상방식은 재직자 보수인상률에서 소비자 물가변동률로, 연금산정 기준은 최종 보수월액에서 3년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하였다.

【도표 5-12】 개인과 국가부담률 인상

구 분	'63년	'70년	'96년	'99년	'01년 시행
부담률(%)	3.5	5.5	6.5	7.5	8.5

또한, 연금지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자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책임준비금도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편, 군인연금 수급권자들에게 각종 연금 관련 사항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군인연금 정보체계를 개발·완료하여 2006년 5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퇴역 또는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이외에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의 1/2 범위 내에서 연금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를 2006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재정 안정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연금수급자 현황은 【도표 5-13】과 같다.

【도표 5-13】 연도별 연금수급자 현황



제2절 국방 자원관리의 선진화

무기체계의 고도정밀화, 다양화에 따라 운영 유지비의 증가 등 국방 자원관리를 위한 환경의 변화는 국방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수 분야에 발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수지원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자·임무 중심의 군수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특혜 시비와 품질저하 요인을 불식하기 위해 가능한 한 경쟁조달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유사시 동맹국의 지원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군수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합 군수지원체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제3국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등 국제 군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자원관리 분야에서 단순근무지원 업무 및 민간 비교 우위 분야는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을 군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이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1. 국방자원의 효율적 활용

최근 군수자원관리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첫째, 미래전 양상에 따른 선진화된 군수자원관리의 요구와, 둘째, 최신의 정보화 기술을 적용한 군수자원 분야 통합정보체계 구축, 셋째, 군수지원 성과에 대한 계량화된 객관적 평가 등이다.

우리 군은 이와 같은 환경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수자산을 가시화하고 효과적인 작전지원이 가능하도록 군수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며, 특혜 시비와 품질저하의 요인이 되는 국방 조달 방법을 혁신하는 한편, 사용자 중심의 성과지표개발과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국방 자원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국방부는 전군의 군수자원을 가시화하고 군수지원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하는 사용자·임무 중심의 점증적·진화적 정보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도표 5-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로 2008년까지 장비정비·수송 등의 정보체계를 개발하고 노후화된 탄약·물자 정보체계의 성능을 개선하여 기능별 정보체계를 완성하고, 2단계로 2014년까지 물자·탄약·장비 정비를 통합하여 단일의 군수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군수 내·외부 체계 간 연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실시간으로 군수물류와 자산의 가시화를 위해 RFID 등의 유비쿼터스 기술을 시범적으로 탄약관리에 적용하고, 한미 간 연합군수지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RFID기반의 G-ITV(Global In Transit Visibility) 시범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도표 5-14】 단계별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개념도

구분	1단계('05~'08)	2단계('11~'14)	3단계('06~'22)
핵심 개념	기능체계개발 / 성능개선	Web 기반 One-Family System	U-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개념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정비정보체계 개발 • 수송정보체계 개발 • 탄약/물자 정보체계 성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군 물자+탄약+장비 정비 정보 체계 통합 → 단일 군수체계 구축 • 타 체계 연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IT 신기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FID, 텔레메틱스 등 • U-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나. 국방조달의 경쟁 확대

국방부는 수의계약에 따른 고가구매,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품목’과 ‘기타 수의계약품목’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경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품목’은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경쟁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2006년에는 시범품목(피복, 식품류)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체 간 경쟁계약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타 수의계약품목은 국방부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단체나 업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20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 군수지원 성과관리체계 구축

현행 군수지원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가저장품목 점유율, 보급 조치율, 재고 고갈률 등은 사용자(전투부대)보다는 공급자(군수지원부대) 위주의 군수활동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군수활동의 포괄적 결과인 군수준비태세 향상에 대한 계량적 측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는 사용자 중심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사용자를 위한 공급자의 제반 군수활동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사용자 중심의 군수성과지표 현황은 【도표 5-15】와 같다.

【도표 5-15】 사용자 중심의 군수성과지표 현황

기능	성과지표
CWT (Customer Waiting Time) : 사용자가 필요 물품을 청구 후 실제로 수령하기까지 시간	공통 사용자 대기시간(CWT), 장비 가동률, 자산 가시화율
RCT (Repair Cycle Time) : 사용자가 정비의뢰 후 정비완료 정비를 수령하기까지 시간	소요 수요 예측 정확도
	조달 조달 소요 기간
	청구 대기 시간
보급	재고 수준
	급식 만족도
	피복 만족도
정비	정비 소요 시간(RCT)

군수지원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면 군수준비태세와 사용자의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군수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는 먼저 각 군별 특성을 반영하여 2005~2006년 간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2007~2008년 간에는 각 군에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지표를 시험적용하며, 2009년 이후에는 전 군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2. 국제 군수협력 강화

유사시 동맹국의 안보지원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군수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제 군수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한미 간 안보환경변화에 따라 연합 군수지원체제를 포괄적·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제3국과의 상호 군수지원 협정체결, 군수품 이양 등 실질적인 군수교류 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 국제 방산무기 전시회 'Defense Asia 2006' 한 장면

가. 대미 군수협력

우리 군은 긴급소요부족품목록(CRDL) 폐지(2004년 말)와 동맹국을 위한 전쟁비축물자(WRSA) 프로그램 종결에 대비하여 연합 군수준비태세를 공고히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WRSA 이양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사시 한반도에서 미 증원군이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여 전시지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있다.

CRDL :
Critical Requirement Deficiency List

WRSA :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또한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폐기 대상 탄약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탄약 비군사화시설 중 소각로를 2006년 6월 충북 영동군에 착공하였다.

TKP :
Trans Korea Pipeline
포항에서 의정부에 이르는 한국중단
송유관 장거리 송유관을 말하며 주한
미 육군에서 설치하여 관할 운영하고
있음.

한편, 2005년 4월에는 주한미군의 유류수송을 위해 기존 한국중단송유관(TKP)의 대부분을 남북송유관(SNP)으로 전환함으로써 유류 누출, 사유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를 크게 해소하였다.

SNP :
South-North Pipeline
TKP 건설 이후 (주)유공,
(주)대한송유관공사 등에 의해
건설되어 을산-대구간, 서산-천안간,
경인송유관, 남북송유관,
호서송유관이 운영되고 있음.

나. 제3국과의 군수협력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어 제3국과의 다변화된 군수협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태국, 호주와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였고, 터키, 필리핀, 뉴질랜드 등과는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필리핀,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등에 함정과 항공기 등 군수품을 이양하였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방산협력 차원에서 군수품 이양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3. 자원관리 분야의 민간위탁 확대

가. 민간위탁의 점진적 확대

현재 우리 군은 시설물관리 · 청소 · 조경 등 일부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원관리 분야에서 단순 근무지원 업무와 민간의 비교우위 분야는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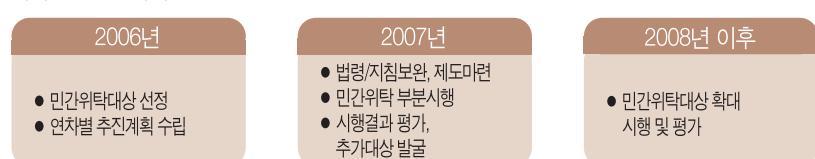
이에 따라 차량정비, 제대별 복지회관 · 간부식당, 시설 · 설비, 청소 · 조경 · 세탁 · 이발 · 군화 수리 · 환경미화 등 전투 및 작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민간위탁이 쉬운 분야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2007년부터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위탁 대상 및 민간위탁 연도별 추진계획은 【도표 5-16】과 같다.

【도표 5-16】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대상



● 민간위탁 연도별 계획



나. 민간위탁업체 선정과 관리의 공정성

민간위탁업체는 대상 기능에 대한 운영실적,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에 대한 의지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하여 선정하고, 민간위탁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민간 위탁 업무 내용, 비용의 정산 방법과 지불조건, 계약기간의 개시 및 종료 시기,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유지할 예정이다. 즉 해지의 사전통지 의무조항이나 가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업체 선정의 타당성, 공정성이 유지되고, 유사시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다. 전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임무수행과 보안유지

유사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업체와 전·평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비상대비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평가를 실시하며, 민간위탁업체의 파업 등 서비스가 단절될 수 있는 우려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 정비와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보안유지와 관련해서는 군사정보의 외부 유출방지를 위해 계약서에 비밀유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보안 점검과 보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4. 군 책임운영기관의 선정·운영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개 채용한 기관장에게 인사·조직·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한 후 지속적으로 성과평가를 하여 효율적이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군 책임운영기관은 단순히 현역 부대장으로 보직하던 부대장 직위를 공개 채용하여 조직 내·외부의 전문가로 바꾼다는 의미를 넘어서 부대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부대관리를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할 것이며, 유연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변모할 것이다.

가.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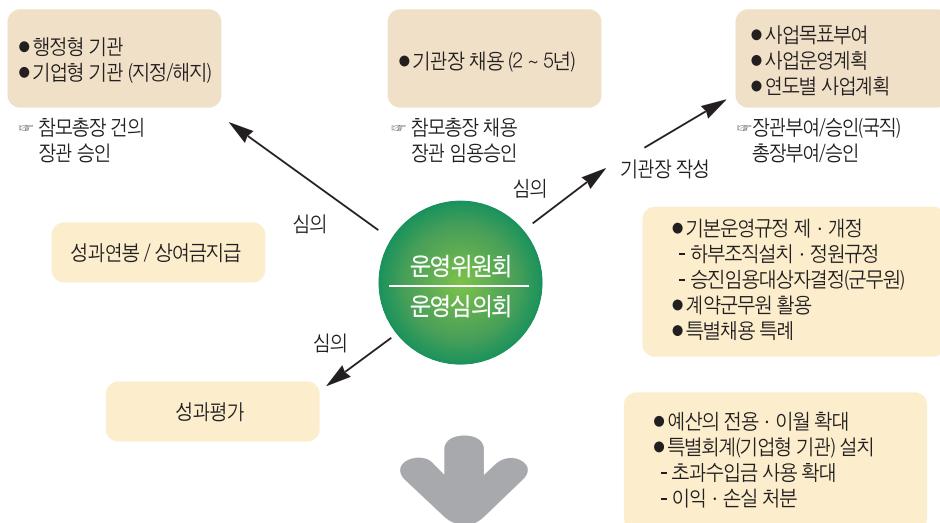
운영체계도를 포함한 군 책임운영기관 추진계획은 【도표 5-17】과 같으며, 정비창·보급창·전산소·인쇄창·시설분야·복지단 등과 같이 성과측정이 가능하고 집행적·사업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위해, 대상부대를 현지 확인하고 관련분야 종합 토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현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도를 완비하고, 대상부대 선정기준을 정립하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하게 대상부대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표 5-17】 군 책임운영기관 추진계획

2006년	2007년	2008년 이후
● 대상부대 김포 ● 근거법령 제정	● 3개 부대 선정·운영 ● 성과평가 실시	● 대상부대 단계적 확대 ● 연도별 성과평가 실시

①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체계도



국방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 『군 책임운영기관법』 제정 추진

2006년 7월,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 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군 책임운영 기관 법안』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기관장 채용, 기관장의 인사·조직·재정상 자율권의 범위, 성과계약서 체결과 성과평가방법, 책임운영 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모든 절차, 운영심의회·위원회의 설치 등이 규정될 것이다.

다. 군 책임운영기관 시범도입과 운영

2007년에 3개 부대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시범 운영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대상 부대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평가지표를 계량화하여 성과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대장의 성과를 평가할 것이다. 아울러 연도별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향상 사례 워크숍을 실시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이 기본적으로 전·평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면서도 현재보다 빠르고, 높은 수준의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제3절 국방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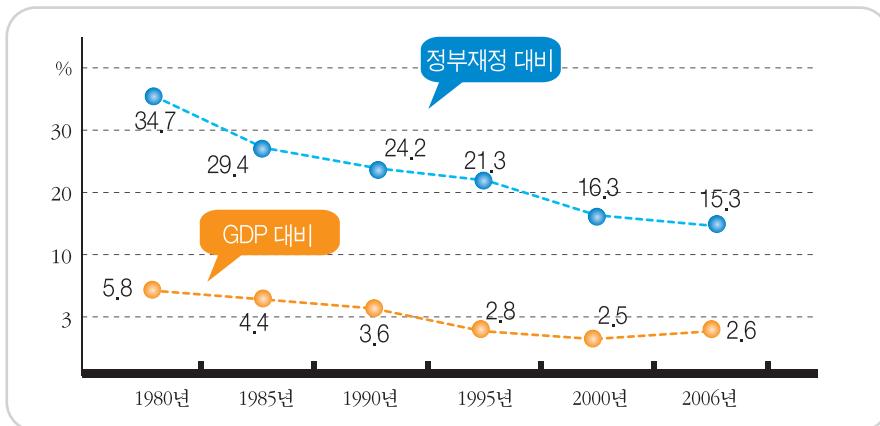
국방비의 적정규모는 안보위협에 상응하는 군사력 소요와 국가의 재정적 부담능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기획관리제도' (기획-계획-예산-집행-평가 시스템)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에서, 위협 분석에 따라 결정된 군사력 소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하는 동시에, 가용한 국방비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

가. 국방비 배분 추이

국방비는 안보와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내총생산과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변화하였다. 【도표 5-18】에서 나타나듯이 1980년대 초반까지는 자주국방을 지향한 전력증강계획으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율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GDP 대비 5%, 정부 재정 대비 30% 수준을 점유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1997~1998년 IMF 금융위기 등에 따라 2000년대 초반까지 국방비의 하향배분 현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에 따라 국방비 배분은 상향추세로 반전되어 2006년 현재 GDP대비 2.6%, 정부재정대비 15%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

【도표 5-18】 GDP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추이



* 新 GDP 개념 적용

新 GDP 개념 :
GDP 기준연도를 1995년도에서
2000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산업연관표기준지, 각종 지수가
획대되고, 회계기준을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93 SNA'로 전환함에 따라
신규사업과 사회간접자본 등이 추가
반영됨.
(통상 기존 GDP대비 10~15% 증가)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
국가경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 결과 및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 부채 상황을
정리한 회계기준과 체계

나. 안보여건에 상응하는 국방비 지출

국방비의 적정규모는 안보위협에 상응한 군사적 소요와 국가의 재정적 부담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국방은 국가의 생존보장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국방비 결정과정에서는 ‘안보위협 상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이나 이스라엘 등과 같이 항상 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거나 안보상황이 절박한 분쟁 당사국에서는 ‘안보위협의 정도’에 비례하여 국방비 부담률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안보위협의 정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데도 아래 【도표 5-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전히 다른 분쟁·대치국에 비해 국방비가 낮은 비중으로 배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록 10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참조)

【도표 5-19】 분쟁·대치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2004년 기준)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	쿠바	미국	중국	파키 스탄	터키	인도	그리스	한국
8.3	8.2	7.4	4.6	4.0	3.9	3.7	3.5	3.4	3.0	2.9	2.4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05~2006(런던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5.10., 한국은 정부통계 기준)

2. 2006년 국방예산

가. 일반회계 예산

2006년도 일반회계 국방예산 규모 및 기능별 배분 현황은 【도표 5-20】 및 【도표 5-21】과 같다.

【도표 5-20】 2006년도 국방예산 규모

(단위 : 억원)

방위력개선비 :
그간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비는
과목구조개편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전력증강비’, ‘전력투자비’,
‘방위력개선비’ 등 다양한 용어로
바뀌며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06년 현재는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을
‘방위력개선비’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하 본문에서는
‘방위력개선비’로 통칭

구 분	2005년 예산	구성비	2006년 예산	구성비	증 · 감	%
계	21조 1,026	100.0	22조 5,129	100.0	1조 4,103	6.7
방위력개선비	7조 2,987	34.6	7조 4,994	*33.3	2,007	2.7
경상운영비	13조 8,039	65.4	15조 135	*66.7	1조 2,096	8.8
· 인 건 비	8조 5,948	40.7	9조 1,967	40.9	6,019	7.0
· 사 업 비	5조 2,091	24.7	5조 8,168	25.8	6,077	11.7

* 방위사업청 이제 후 비율변경(경상운영비 : 66.7→74.2%, 방위력개선비 : 33.3→25.8%)

* 국방부 소관(경상운영비) : 15.0→16.7조원, 방위사업청 소관(방위력개선비) : 7.5→5.8조원

* 기존 과목구조에서 전력증강과 관련이 적은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기지이전, 수리부속 등은
국방부 소관 경상운영비로 분류하고,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 운영비는 방위력개선비로 분류

☞부록 11 “연차별
정부재정과 국방비” 참조)

2006년도 국방예산은 「국방개혁 2020」 추진에 따라 자위적 방위 역량 확충과 장병 사기 · 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2005년도 21조 1,026억 원(추가경정예산 2,800억 원 포함) 보다 6.7%가 증가한 22조 5,129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정부 재정의 15.3%,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이다.

방위력개선비는 2005년도에 비해 2.7% 증액된 7조 4,994억 원으로, 자위적 방위역량 확충과 핵심전력 확보를 위해 K1A1 전차, 신형 155밀리자주포, 7,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1,800톤급 잠수함, F-15K 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의 소요를 반영하였다.

현존 전력발휘 극대화를 위해 K-9용 탄약운반 장갑차 등 Package 소요, F-5E/F 등 현존장비 성능개량, 휴대용 대공유도탄 등 노후전력 대체 소요, 전쟁지속능력 향상과 가동률 제고를 위한 전투 예비탄약과 장비유지비 등을 반영하였고, 한국형 헬기와 차기전차 등 핵심 무기 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상운영비는 2005년도보다 8.8% 증액된 15조 135억 원으로,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도표 5-22】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 예산	2006 예산	증 · 감	%
군인연금 특별회계	1조 6,608	1조 7,747	1,139	6.9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6,792	3,114	△3,678	△54.2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97	261	△36	△12.1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	6,264	-	-

군인연금 특별회계는 제대군인의 연금 지급을 위한 회계로서 2006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처우개선율 반영, 연금지급 대상 인원 증가 등으로 2005년도에 비해 6.9% 증가된 1조 7,747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다.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시설을 교외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과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로서 2006년도에는 34개의 군용시설 이전 사업과 민원부지 매입을 위해 3,114억 원을 편성하였다.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국방전문 홍보기관인 국방홍보원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서 2006년에는 신문, 방송, 영화, 위성TV 제작비로 261억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특별회계는 주한미군 기지를 통합하여 평택 등으로 이전하기 위해 신설된 회계로, 2006년에는 토지매입비와 시설공사비 등 6,264억 원을 편성하였다.

3. 2007~2011 국방중기계획

가. 중기계획 중점 및 사업 규모

「2007~2011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20」의 1단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주적 전쟁억제력 확보, 국방운영 선진화 등을 위한 소요반영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으며, 기간 중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9.9% 수준

으로 유지하여 총 150조 7,499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은 2006년 현재 전체 국방예산의 25.8% (방위 사업청 이체 후 기준)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2011년까지는 35.9% 수준이 되도록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나. 분야별 사업계획

1) 방위력개선 분야

방위력개선 분야는 '자주적 전쟁억제능력 확충과 방위충분성 전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독자적 감시·정찰능력 확보, 전투력 통합운영을 위한 전장관리체계 구축,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전력 확보, 현존 기반 전력 보강, 기술의 자주화를 위한 연구개발,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개발비는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연계하여 개방형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2) 경상운영 분야

경상운영 분야는 '선진 국방운영 기반구축'과 '새로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하여 장병 사기복지 증진, 국방운영의 정보화·과학화 추진, 우수인력의 양성, 현존전력의 운영유지 제고, 환경보전과 국민권익 보호 사업의 추진 등에 중점을 두었다.([도표 5-23] 참조)

장병 사기·복지 증진을 위해 병 봉급은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에 미달하는 부족분을 현실화하여 인상하고, 기간 중 병영생활관 260개 대대와 군 숙소 14,000여 세대의 개선과 군병원 3개소 등의 현대화 소요를 반영하였다.

인력양성과 현존전력 운영유지 제고를 위해 국내·외 위탁교육의 확대, 광역 및 근거리 전산망 확장과 예비군 훈련보상금 지급 등을 반영하였다.

환경보전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오·폐수 처리시설, 토양오염방지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시설 등의 환경보전시설 설치, 탄약고 주변 안전지대 확보 소요, 특수 임무 수행자 등에 대한 특별법 보상소요를 반영하였다.

【도표 5-23】 2007~2011 국방중기재원

(단위 : 조원 %)

구 분	2006년	대 상 기 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평균)
국 방 비 (GDP 대비) (증가율)	22.5 (2.57) (6.7)	24.7 (2.62) (9.9)	27.2 (2.69) (9.9)	29.9 (2.75) (9.9)	32.8 (2.82) (9.9)	36.1 (2.89) (9.9)	150.7 (2.76) (9.9)
경상운영비 (배분율) (증가율)	16.7 (74.2) (6.2)	17.7 (71.7) (6.2)	18.8 (69.2) (6.0)	20.0 (67.0) (6.5)	21.8 (66.5) (9.1)	23.1 (64.1) (6.0)	101.5 (67.3) (6.8)
*방위력개선비 (배분율) (증가율)	*5.8 (25.8) (6.2)	7.0 (29.3) (20.6)	8.4 (30.8) (19.8)	9.9 (33.0) (17.5)	11.0 (33.5) (11.6)	13.0 (35.9) (17.7)	49.2 (32.7) (17.4)

* 방위사업청 소관예산 기준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방기획관리제도' 체계에서 결정된 군사력 소요를 국방중기 계획에 반영하고, 국방중기계획의 재원을 정부 차원의 중기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
'07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법적 구속력이 발생(07.1.1일부
'국가재정법' 발효)하여, 향후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아울러,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국방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안보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무기체계 확보 우선순위와 전력화 시기를 조정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절감하여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제4절 국방정보화 추진

국방정보화는 지휘통제체계와 전장관리의 자동화로 군사력의 질적 변환을 도모하고, 국방자원 관리의 디지털화와 전자거래를 기반으로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와 운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화 기반체계를 확충하고, 국가정책과 연계된 국방정보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1. 전장관리 정보화

전장관리 정보화는 미래전장 개념에 기초한 군사력 건설 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보기술 능력을 전력요소에 부가하여 감시정찰체계, 지휘통제체계, 정밀타격체계와 같은 전장의 모든 전력요소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전장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지휘통제체계, 군사정보체계, 모델링 & 시뮬레이션체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가. 지휘통제체계

전장관리 정보화 개념도는 【도표 5-24】와 같으며, 합참은 합참본부와 각 군의 주요 전력과 작전부대의 지휘소 기능을 자동화하고, 예하 전술부대와의 전문을 송·수신할 수 있는 지휘소자동화체계(CPAS)를 운용하고 있다. 2004년부터 기존 CPAS 성능을 개량한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각 군 전술C4I체계와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도록 발전시켜 200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CPAS :
Command Post Automation System

KJCCS :
Korea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ATCIS :
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KNCCS :
Korean Naval Command Control System

육군 지상전술C4I체계는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로 명명하고, 군단급 이하 전술제대의 전장기능을 자동화한 것으로 2009년까지 전력화 대상부대를 확대하고 성능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해군 전술C4I체계는 해군지휘통제체계(KNCCS)로 명명하고 현재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KNTDS :
Korean Naval Tactical Data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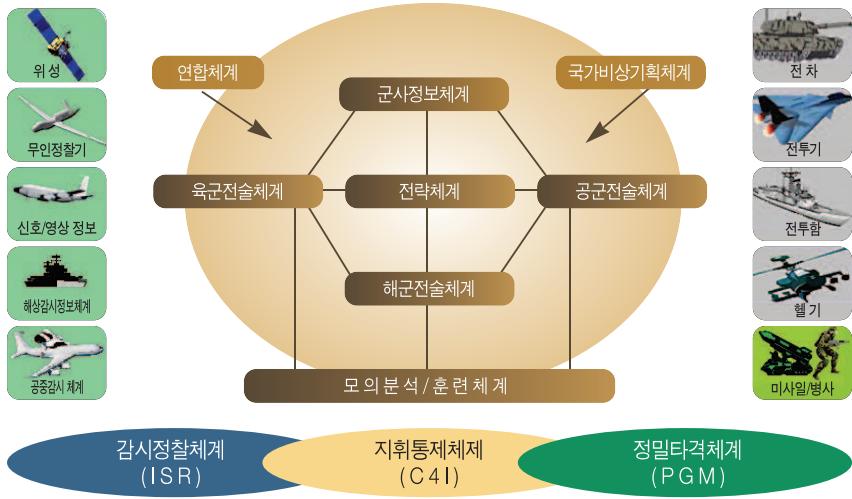
TACC :
Theater Air Control Center

MCRC :
Master Control & Reporting Center

운용하고 있는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를 기반으로 하여 통합적으로 해상작전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작전사를 중심으로 2007년까지 구축하며, 2010년까지는 전 부대를 대상으로 확대·구축할 예정이다.

공군 전술C4I체계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전구항공통제본부(TACC)와 중앙방공관제소(MCRC)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하고, 작전제대별 지휘관과 작전요원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등 항공작전 임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07년까지 개발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표 5-24】 전장관리 정보화 개념도



나. 군사정보체계

MIMS :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는 현재 각 군별, 제대별로 운용되고 있는 정보기능을 통합처리체계로 대체하여 실시간에 전군이 정보를 유통·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사정보자동화체계이다. 군사정보를 입력, 저장, 검색, 전파할 수 있는 응용체계 개발은 2008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기반 통신망 구축 등 하드웨어 구축은 2010년 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다. 모델링 & 시뮬레이션 체계

국방부는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군사교리, 전장운영개념, 부대구조와

작전계획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체계와 이를 이용하여 무기 체계 획득 단계별 분석평가업무를 지원하는 의사결정 및 연구개발 시뮬레이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합참은 3군 합동훈련 모델인 ‘태극 JOS’를, 육군은 사단 및 군단급 훈련모델 ‘창조 21’ 등 제대별 모델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고, 해군은 ‘청해’, 공군은 ‘창공’을 개발 중이며, 추가로 합참, 각 군별, 제대별, 전장기능별 훈련 시뮬레이션체계의 확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부대훈련은 대대급 과학화훈련장(KCTC)을 2005년에 이미 구축하여 전장의 실상을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훈련장을 전장화함으로써 간접 경험을 통한 전장 적응능력과 전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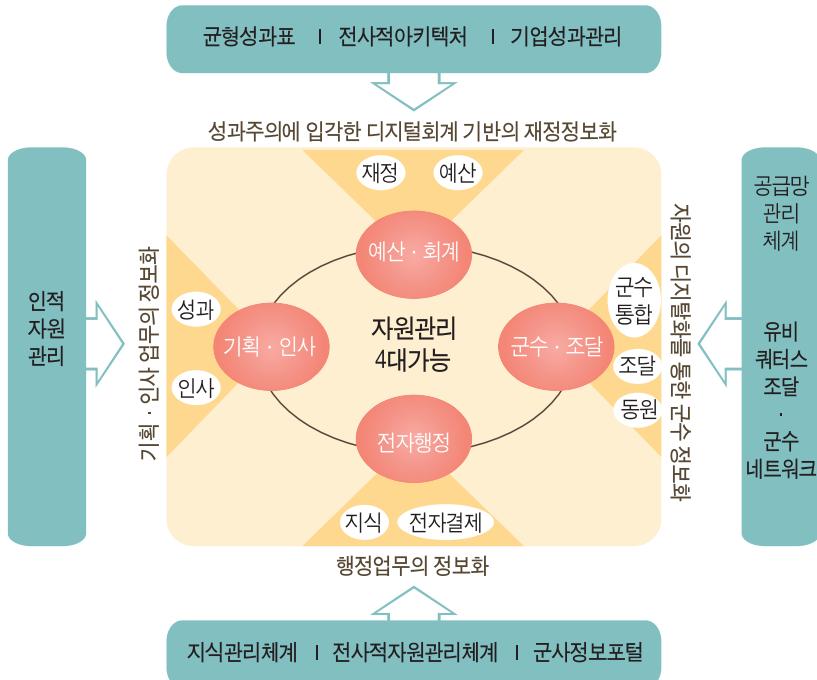
KCTC :
Korean Army Advanced
Combat Training Center

2. 자원관리 정보화

자원관리체계 정보화 기능과 구성은 【도표 5-25】와 같다.

자원관리 정보화는 예산 · 회계, 기획 · 인사, 군수 · 조달, 전자행정 등

【도표5-25】 자원관리체계 정보화 기능과 구성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EA :
Enterprise Architecture

4대 기능분야로 구분하고, 전사적 아키텍처(EA)를 기반으로 성과중심의 정보화 투자 및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국가 재정정보와 국방 재정정보를 연계한 국방통합재정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유비쿼터스 기반기술을 이용한 자원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 국방정보기술의 청사진 설계

국방부는 전군 차원의 전사적 아키텍처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보화 소요의 불명확성 해소, 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정보체계를 통합하는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사적 아키텍처 개발은 2006년 국방부에 대한 설계를 시작으로 2009년 전군 차원의 전사적 아키텍처를 완성할 예정이며, 2004년부터 이미 시범적으로 시작된 전장관리체계에 대한 전사적 아키텍처 개발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방정보기술의 청사진이 될 전사적 아키텍처는 법정부 아키텍처와 연계가 가능하고, 각 군과 관련 조직의 아키텍처 기반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보화사업의 소요는 해당 조직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제기하고, 아키텍처에 따라 통제하고 평가하는 체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나. 자원의 디지털화를 통한 정보화 지원

국방부는 전체 자원을 다양한 수단으로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디지털화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행정업무와 연계한 국방통합행정혁신체계, 국가 재정정보업무와 연계한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정보자원관리체계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통합행정혁신체계는 현재의 전자결재체계, 국방포탈체계에 성과 관리체계, 업무관리체계, 지식관리체계 등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2006년에 핵심체계를 전력화하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성능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는 정부회계제도 개편에 따라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개념으로, 이를 통해 디지털 회계예산시스템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방통합재정정보 체계는 2006년 전반기에 BPR(업무절차개선)/ ISP(정보화전략계획)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핵심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정보자원관리체계는 2008년에 핵심기능을 개발하여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 전력화하고,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자원이 있는 모든 부대로 확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자원의 디지털화 수단으로 PC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에이전트소프트웨어, 무선주파수식별(RFID)과 같은 유비쿼터스 기반기술을 국방정보화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기술을 사용한 군수자원의 디지털화로 군수와 조달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군수자원을 이용하여 해당 군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탄약·물자정보체계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까지 각 군의 장비정비정보체계를 개발하여 군수 관련 체계와 연동·통합할 예정이다.

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3. 정보화 환경 조성

가. 정보화 기반체계 확충

정보화 기반체계는 정보통신망, 컴퓨터체계, 정보보호체계로 구성된다.

정보통신망은 민간자본유치(BTL) 방식으로 2008년까지 야전부대의 노후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교체하고, 국방광대역통신망(WAN)을 증속하여, 독립중대급 부대까지 구축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음성통신(VoIP) 등의 신기술을 도입하고, 인터넷망을 통합 구축할 예정이다.

BTL (Build-Transfer-Lease) :
민간이 지금을 먼저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나 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방식

컴퓨터체계는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과 연계하여 주전산기와 개인용 컴퓨터(PC) 등의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방통합정보 관리소는 각 군별 1개소의 시험센터를 구축하였고, 전군에 분산된 전산실과 주전산기를 61개소로 통합하는 한편, 응용체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VoIP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2012년까지 전군 통합 차원에서 국방통합정보관리소 2~4개소를 구축하여 통합·운용할 계획이다. PC는 실무자 1인 1대 보급을 목표로 2006년 10월 현재 PC 보급률은 95% 수준이며, 2008년까지 100% 보급할 예정이다.

정보보호체계는 사이버 안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발간하여 사이버 위기 수준별 대응절차를 마련하였고, 군단급까지 설치된 컴퓨터침해 사고대응반(CERT)은 앞으로 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 등에 따라 편성하고 임무를 확대할 계획이며, 통합보안관제체계, 바이러스 방역체계, 국방인증체계 등을 구축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체계를 완료하였다. 앞으로 네트워크중심전(NCW)에 대비하여 정보보호체계의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CERT :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NCW :
Network Centric Warfare

나. 국가정보화 정책과 연계된 국방정보화 추진

국방부는 국가정보기술기반과 기술정책에 부합하는 국방정보화 정책을 발전시킨다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정보통신부와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IT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국방정보화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국가 IT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국방부와 정보통신부 사이에 정보화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u-IT839’ 신기술 도입의 일환으로 RFID 기반의 국방탄약관리시스템과 F-15K 자산관리체계 시범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수행하였다. 2006년에는 RFID를 활용한 u-탄약관리 확산사업, 국방학술정보시스템과 국방기록물관리체계 등 지식DB 구축사업, 공개 SW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육·해·공군에 리눅스체계 전용 교육장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방부와 정보통신부가 함께 정보화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년 5월) IT 신기술 국방 분야 적용 등 6개 분야 24개 협력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24개 과제는 국방부 주관으로 2006년 후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다.

다. 정보화 교육

국방부는 군 고위관리자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방



▶ 2006년 국방정보화 고위관리자과정 워크숍

정보화 분야 팀장급 이상 고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국방정보화 고위 관리자(CIO)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CIO :
Chief Information Officer

정보화 실무자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2001년부터 정보화 사업 관리자과정과 감리과정을 개설하였으며, 2006년에는 국방

아키텍처 프레임워크(AF), 국방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론(CBD)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AF :
Architecture Framework

또한 국방정보화기술 분야에 대한 민·관·군 기술교류와 민간의 첨단 정보기술을 국방정보화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정보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군 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국방 정보화기술 심포지움을 2000년부터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CBD :
Component Based Development

한편, 장병들이 군 복무기간에 정보화 사회와의 단절을 막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며, 학점 이수 및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사회에 진출할 때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유치(BTO)방식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BTO (Build-Transfer-Operate) :
민간이 지금을 먼저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자사업방식

사이버 지식정보방은 부대 환경에 따라 유선과 위성 인터넷을 혼용하여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 사이버지식정보방 전경

제5절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진 병영문화의 패러다임은 꿈과 목표가 있고, 인간을 존중하며, 인간다운 삶과 충실한 복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화합과 단결이 잘 이루어진 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선진 병영문화 추진은 군이 평화와 번영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강력한 전투력을 구축함과 동시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립될 것이다.

1. 선진 병영문화 비전

신세대 장병들은 정보통신의 발달, 개인주의 성향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장병들은 집단적·권위주의적 병영생활에서 문화적 고리감과 좌절감을 쉽게 느끼며 군 복무를 의미가 없는 ‘잃어버린 시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권위주의적 지휘통솔,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의식 부조화, 낙후된 병영환경 등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와 병영 간에는 문화적 고리감이 일부 잔존하고 있다. 민과 군 간의 의식적·문화적 단절은 견실한 국방태세의 유지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따라서 병영문화개선은 국방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하여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중요과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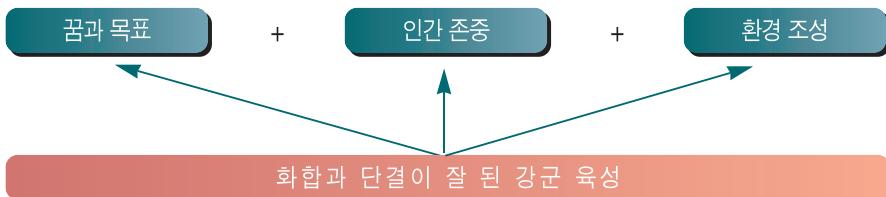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병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병영문화의 틀을 획기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는 ‘선진 병영문화’를 ‘인권 존중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병영생활의 총체’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병영문화의 개선’ 방향은 국방개혁의 목표와 국가 발전방향에 부합되도록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인간존중의 신바람 나는 군대’ 그리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군대’ 등 3대 목표로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진 병영문화의 패러다임은 【도표 5-26】과 같이 꿈과 목표가 있고, 인간을 존중하며, 인간다운 삶과 충실한 복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화합과 단결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도표 5-26】 선진 병영문화의 패러다임



이러한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선진 병영문화의 추진 목표는 간부의식 전환, 자기발전 여건조성, 사회의 다양한 문화수용, 인권존중, 환경개선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로 만드는 것이 선진 병영문화 비전이다.

국방부는 이를 ‘21세기 강군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핵심과업으로 설정하여 「국방개혁 2020」에 반영하였고,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병사들의 부모를 포함하여 ‘병영문화개선위원회’를 구성·발족하여(2006년 6월) 자문기구로 운용하고 있다.

2. 병영문화의 획기적 개선

가.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1) 장병가치관 확립

장병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부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층별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장병들이 체험학습으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정신교육 및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가치관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중대장의 신병 체험

간부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영관급 이상의 지휘관 직무교육 시간에는 의식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대대급 이하 간부를 대상으로는 상담능력을 배양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존중과 배려의 문화’에 익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동체 생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병영생활과 연계된 체험학습을 생활화 함으로써 장병들이 민주의식을 갖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문화행사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대급 부대에 부대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강사를 선정하여 초빙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대정신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군관계를 원활히 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다.

장병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병영생활에 관한 전문연구 센터를 설립하여 군의 특성, 간부와 병사들 간의 가치관 고리 현상, 신세대 병사의 심리변화, 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가치에 대한 검증 등 지휘관들에게 모든 행동과학적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건전한 군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함양하여 ‘참군인’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2) 자기계발 여건 조성

국방부는 전 장병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대단위로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설치하여 군복무 간 정보화 단절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어학공부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정부의 「청소년 실업 해소 특별법」과 연계하여 군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5만여 대의 인터넷 PC를 설치하여 활용하게 할 예정이며 중·대대장과 주임원사에게 사이버 상담용 인터넷 PC를 동시에 보급하여 인터넷에서 병사들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자격증 과정 이수 등을 위한 군 e-러닝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도표 5-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하여 “군 e-러닝 학습 콘텐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 지식 정보방 구축과 연계하여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어학, 취업, 전공, 대학진학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아 자기계발과 전역전 사회적응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다.



▲ 사이버 지식정보방 운용

【도표 5-27】 e-러닝 시스템 구축



또한 군 자격제도 개선, 군 특기직무와 교육훈련 내용 중 신설 가능 자격 종목을 발굴하기 위하여 「군 자격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운용하여(2005년 10월 19일부)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 제도 확대와 군 특수(전문) 자격 경력의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국가공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국방자격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구로 「국방자격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는 등 장병들에게 목표가 있는 군 생활을 제시하여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개인 자율시간을 보람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되는 대대급 생활관에는 병영시설 현대화 공사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다. 격오지 중대급 생활관을 대상으로 2006년 6월말까지 책장과 양서(良書)를 400권씩 일괄적으로 보급하며, 2007년 이후에는 매년 100권씩 보급함으로써 독서 여건을 개선하여 장병 문화욕구를 충족해 주고 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나. 인간존중의 '신바람 나는 군대'

1)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군인 복무 기본법』을 제정하여,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기본적 권리(통신의 비밀, 종교의 자유, 고충처리 건의권 등)를 보장하고, 전투원으로서의 의무(충성의 의무, 명령복종과 실행의 의무 등)와 기본권리의 제한(집단행위 금지, 정치적 행위 제한, 영리행위와 겸직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군 인권정책 및 장병 인권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인권팀'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2006년 1월 2일부), 각 군에 인권담당관 직위를 신설하여 예하부대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감독하고 인권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장병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민간이 참여하게 하여 민·군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 고충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산하에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부와 예하부대 및 소속기관에서 제기하는 모든 고충(의료, 구타, 가혹행위 등)을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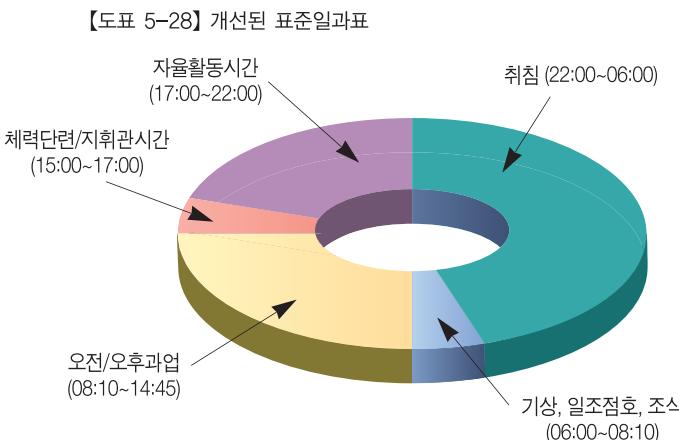
2) 자율적 생활보장

인터넷을 활용하는 화상면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족이나 친구들과 교류기회를 확대하고, 병영생활에 관한 On-line 게임을 개발하여 입대

전에 병영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병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병사의 외출·외박제도를 개선하여 외부와의 교류감을 없애며, 규정과 방침에 대한 상세한 오리엔테이션으로 부대에 조기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사 병영생활을 【도표 5-28】과 같이 개인생활 보장이 가능한 자율형 일과표로 개선하여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일과 후 취침시간에도 24시까지 자율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자기계발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였다.

일과 후 생활관으로 ‘퇴근’ 하는 개념을 적용하여 부대활동과 개인 시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군기와 규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도하고, 자율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개인별 훈련수준 미달자는 자율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여 자율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3) 선진형 리더십 개발

선진형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자질이 있는 간부를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기관에서 계층별 특성에 맞는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여 간부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선발 방법은 직책별·계급별 핵심역량을 식별하고 과학적, 객관적 선발기준을 설정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발하여 2007년까지 시험적용 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2007년부터 각 군에서는 초급 간부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구체화하여, 양성교육 과정에서 초급 간부의 덕목과 리더십을 교육하고, 보수교육 기간에는 제대별·계충별 특성에 맞는 리더십을 정규교과에 반영하여 교육하며, 군 간부의 체계적인 리더십 교육을 위해 리더십 체득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군의 특성상 지휘관의 의지와 부대운영 철학이 중요하므로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지휘관의 리더십 진단, 평가, 조언체계를 신설하고 연대장급 이하 지휘관을 대상으로 재임 중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간 존중의 리더십을 함양할 방침이다.

이에 더하여 분대장들의 실질적인 권위 신장과 지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분대원 인원수를 고려하여 지휘활동비를 현실화하는 등 지휘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다.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군대’

1) 복무부적합자 관리제도 개선

병무청 징병검사 단계부터 인성검사를 강화하여 민간병원에 위탁검사를 실시하거나 임상심리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고, 징병검사 전담의사를 일부 민간의사로 대체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전문적인 방법으로 분류하여 현역복무에서 제외하도록 신검 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역 복무부적합자 선별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 신체검사 장면

2007년부터 첨단 정밀신체검사 장비(CT, 핵의학 검사기 등)를 도입하고 징병대상의 과거 병력(病歷)을 활용하는 등 입체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치성(간질 등) 및 정신질환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며,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의 정도를 객관화, 세분화하여 활용하는 등 징병검사체계를 계속 보완함으로써 복무부적합자 때문에 생기는 지휘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입대 5일 이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식별하고 처리해야 하는 협행법의 절차가 비현실적이므로 기간을 신병교육 수료 전까지 확대하는 한편, 교육기간 동안 지휘관(자)이 관찰하여 발견한 현역복무 부적합자는 5주간의 관찰과 의무심사위원회, 동료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신병교육대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하여 재분류하고, 공익근무 요원으로 역종을 변경하여 자대에서의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자대 배치 후 발견된 현역복무 부적합자는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 권한을 장성급 부대로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 사고관리시스템 구축

각 군의 사고사례 분석 전파와 사고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학적 분석에 따른 체계적인 예방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사고관련 자료의 축적과 공유를 통한 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각급 부대에서 사고분석 자료를 손쉽게 활용하고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군 간편 인성검사’를 개발하여 야전부대에서 적시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앞으로 각 군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성검사체계를 개발·적용함으로써 각개 병사의 적성, 복무부적응 병사를 식별하고 전문기법(육군의 Vision Camp)을 이용한 병원관리로 복무적응을 유도하는 등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다.

병영 내 군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담학, 심리학 등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별한 장병 기본권 전문 상담관을 연대급 1명 기준으로 운용함으로써 지휘관에게 사고예방 활동에 관하여 조언하고 심리치료를 실시할 것이다.

2006년 8월부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사고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의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전문조사반을 구성·운용함으로써 과학적 수사와 신속 정확한 공보 그리고 적극적인 후속조치로 사고처리의 전문성·일관성·투명성을 유지하여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비전캠프 (Vision Camp) :
부대에서 식별된 현역복무
부적응자를 대상으로 소그룹
단위의 심리치료를 통해 왜곡된
인식체계의 전환과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시켜
자기치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복무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군내
자체 심리교정 과정임. 현재
사단급 부대에서 20명 단위로
격월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군종장교, 군의관, 해당 지역의
상담사(무료 봉사)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5일간 사단내
일정공간에 수용하여 상담과
심리치료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소 시 통상 부대의
부적응자와 그 후견인(兵)을
함께 입소시켜 소외감을 해소케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Post-Vision
Camp(번기 1회)를 운영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05 장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3) 병영시설 개선



병영시설 개선은 우선 생활관을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바꾸고, 개인에게 비교적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신세대 장병의 성장환경을 고려하여 생활환경을 기준의 ‘수용’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설개선 사업은 군 구조 개편 계획과 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하되, 기준 단가와 시설유지비를 현실화하며 격오지 부대와 열악한 시설 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사업목표와 기간은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1단계 사업은 기존 계획에서 1년을 단축하여 2009년까지 병영시설의 50% 이상을 개선할 계획이다.

1단계 기간에는 GP와 격오지 부대 등 군 구조 개편 후에도 위치변동이 없는 부대부터 우선 개선하고, 2단계에서는 기존 현대화된 부대와 1단계에서 제외된 부대를 개선하며, 건물구조는 가능한 한 재활용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상황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병영시설 패키지화’는 GP 건물에서부터 냉난방 공조시스템과 기반 시설 보완까지 전체 개선 소요를 반영하였고, 격오지 부대와 대대급 통합 생활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건물과 비품까지만 우선 마련하고, 2007년부터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3. 향후 과제

국방부는 국민에게서 신뢰를 얻고 민·군 간 화합을 굳건히 하기 위해 병영문화 개선과제를 국방혁신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반 국민과 장병,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다. 특히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병영문화 개선 관련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인터넷, 언론 등 각종 여론 창구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나갈 것이다.

제6장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제1절 국민편의 증진

제2절 병무행정 개선

제3절 국군포로 송환 노력

제4절 환경 친화적인 군 운영

제5절 국방홍보의 활성화

제 1 절 국민편의 증진

우리 군은 평상시 기본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항상 국민과 함께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사시설의 효율적 조정, 국방재난관리정책의 적극적 발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추진,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군의 가용인력 · 장비 · 기술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민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1. 군사시설 관리

우리 군은 군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안보 및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군사작전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생활의 편익을 최대한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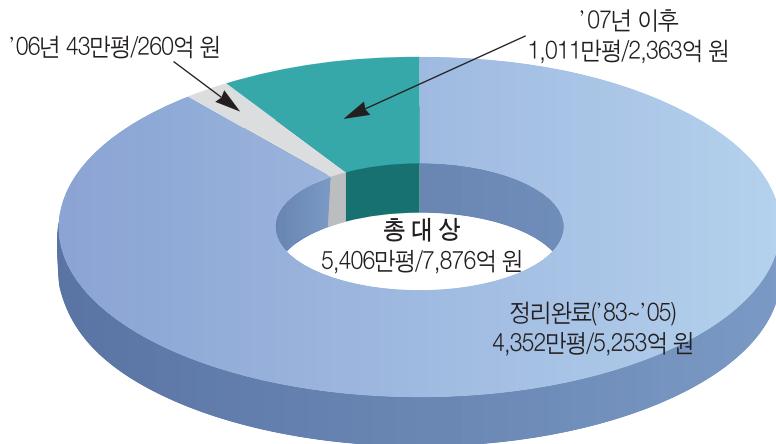
가. 군 사용 사유지 정리

군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과 정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입을 통해 보상하는 반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지는 반환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1995년부터 「사유지 정리용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적극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군이 사용해 오던 사유지 정리 현황은 【도표 6-1】과 같다.

【도표 6-1】 군 사용 사유지 정리 현황



아울러 군사목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토지 소유자에게서 사용 동의를 받거나 토지를 매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군용시설 이전 추진

군용시설의 이전은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국토이용, 도시의 균형발전과 군 시설 현대화를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66년 이후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오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부대의 이전요구가 증가된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매각 차질 등으로 이전비용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음에도, 【도표 6-2】와 같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1조 5,790억 원을 투자하여 74개 부대를 이전하였다. 2007년에는 2,690억 원을 투자하여 30개 부대를 대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군용시설의 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표 6-2】 군용시설 이전 실적(1998년~2006년)

지역	계	서울	강원	경기	충청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이 전 부대수	74	10	14	11	6	10	17	5	1

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개선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군사시설 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으로 입법예고하였고, 2007년 말에 발효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개선 국방부 브리핑 장면 ('06.9월)

이 법안은 군 관련 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 구역’으로 조정하였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행정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군사보호구역의 조정내용은 【도표 6-3】과 같다.

새로운 법에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매도를 원하면 가용한 예산범위 안에서 이를 매수하도록 하는 토지매수 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금지되었던 것이, 주택의 신축은 금지하되 그 밖의 구조물의 신축이나 증축은 협의대상으로 하여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도표 6-3】 군사보호구역 조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정(2007년 말 시행 예정)
전방지역 통제보호구역	군사분계선 이남 15km 이내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
후방지역 통제보호구역	부대 외곽경계선에서 500m 이내	부대 외곽경계선에서 300m 이내
후방지역 제한보호구역	부대 외곽경계선에서 1km 이내	부대 외곽경계선에서 500m 이내

보호구역과 관련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군사작전 수행을 이유로 각종 시설물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도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보완하였다.

한편,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관할부대장은 5년마다 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헬기 예비작전기지를 군용 항공작전기지의 예비기지로 분류하고 비행안전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행정기관의 신고대상 건축물도 군 관련 보호구역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보완하였다.

라.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로금지 해역의 범위와 어로금지 시간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해안철조망도 긴요 작전지역은 계속 관리·유지하되 기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체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일부는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물 설치와 관련한 규제 가운데 골프장 같은 개활지는 코스관리 차량 등을 활용하여 필요할 때 이동식 장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보장하였다.

이 외에도 지역에 재해재난이 발생할 때 현장지휘와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서장을 통합방위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새롭게 제기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 관광형으로 개선된 동해안 해안철책

2. 재난관리 지원체계 강화

가. 재난관리 지원업무 추진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태풍·홍수·폭설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 더욱 증가하고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각종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재난관리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2005. 8. 22.),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대를 사전에 지정하는 등 관·군 협력체계를 제도화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연계하여 국방부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였고(2005. 11. 29.) 이를 국방 인트라넷에 게재하였으며, 재난대책 업무처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다(2005. 11. 21.).



▲ 재난관련 전문가 초빙강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군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06 장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 탐색구조 헬기 수상구조 훈련

재난관리와 대민지원을 위해 각급 지휘관·장병들과 재난 관계관을 대상으로 국방부, 계룡대 지역 등에서 전문가 초빙강연을 실시하였다. 국방대학교 등 군내 각급 학교에 재난관리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한편,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등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군내 피해복구 절차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가재난 대응훈련 참여 등 재난관리 교육훈련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각 군 본부에 재난관리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 예산과목 신설, 민·관·군 재난관리 발전 세미나 개최, 국방 재난관리정보시스템 보완, 국가기반 체계 보호 자원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관리 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 재난복구 지원업무 추진



▲ 호남지역 폭설 시 피해 복구

우리 군은 전국에 탐색·재난 구조 부대와 210여 개의 재난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상시 재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 태풍 '메기' 및 남아시아 지진 해일, 2005년 영동 지역 산불, 호남지역 폭설, 2006년 인도네시아 지진, 태풍 '에워니아' 등 국내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구조와 피해 복구에 헌신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 5년 동안의 재난복구 지원실적은 【도표 6-4】와 같다.

【도표 6-4】 최근 5년 동안의 재난복구 지원실적

(2006. 10. 31 현재)

구 分	지 원		복 구 실 적					
	병력 (만 명)	장비 (대)	인명 구조 (명)	가옥 정리 (동)	농경지 (ha)	도로/ 제방 (km)	방역 (ha)	기 타
2002	98	22,872	111	11,822	1,927	567	454	· 적조방제 : 3,600톤
2003	55	16,818	69	9,712	3,947	187	6,751	· 가축 매몰 : 83천두
2004	23	5,054	2	569	323	148	1	· 가금류 매몰 : 449천수
2005	20	5,604	10	1,182	3,940	2,192	25	· 하우스 복구 : 9,737동
2006	38	14,553	128	3,363	471	481	147	· 소나무 훈증 : 3,792본
계	234	64,901	320	26,648	10,608	3,575	7,378	

다. 재난관리 지원업무 발전방향

재난관리 지원업무는 전문화된 재난관리 교육과 민·관·군 합동 재난대응훈련 등 실질적 훈련으로 대응 및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차원에서도 발전되도록 할 것이다.

먼저 전 장병을 대상으로 군내 각급학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재실무자·긴급구조요원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위탁교육과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야전제대 순회강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군내 재난관리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대급 이상 부대별로 재난대비 자체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을 포함한 민·관·군 합동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훈련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서비스가 중단되어도 국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기반 체계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긴급구호 조치가 있는 경우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군의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각 군 연대급 이상 부대에서는 19개의 유형별 재난 대응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정 협력부대가 세부이행각서를 체결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 영동지역 산불진화 지원

하며, 각 군 재난관리 전담조직과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특수 재난 및 도서지역 담당 재난구조부대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 남아시아 지진해일 구호물자·장비 수송지원

3. 민원업무 혁신

가. 정보 공개 혁신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요청에 응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정보공개제도에 부응하여 『국방행정정보 공개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에서 국방부 주요 사업계획, 자체 감사결과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구체화하여 정보 공개를 최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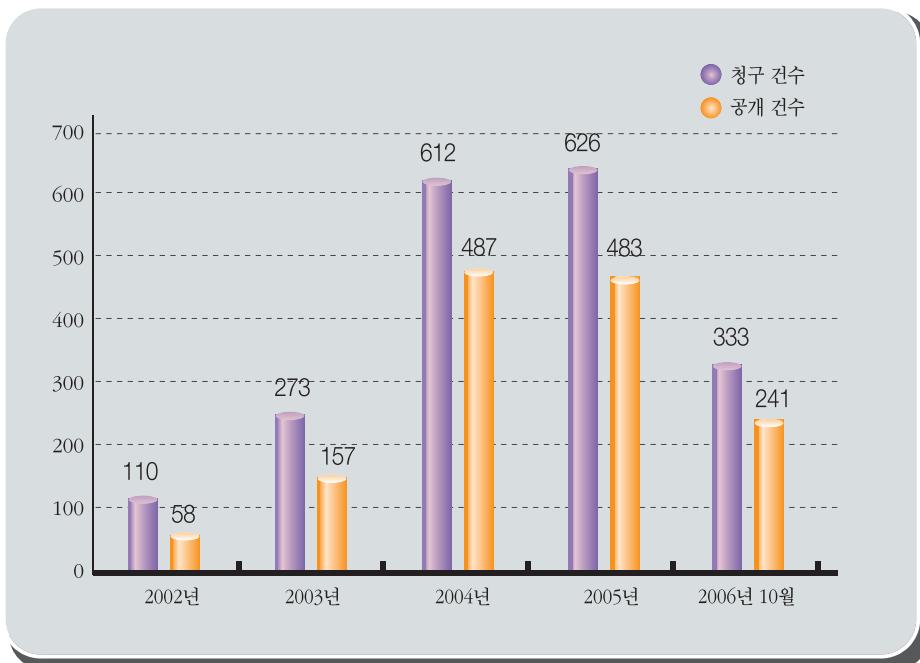
청구인(모든 국민, 법인·단체, 국내 거주 외국인)이 국방부의 특정 정보를 획득하고자 할 경우는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는 물론 인터넷 통합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에서 온라인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

정보의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결정하며, 국방부는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는 청구인의 요청대로 사본·출력물·복제 파일 등의 형태로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다. 【도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110건에서 626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고, 공개 건수는 58건에서 483건으로 약 8.3배 정도 증가하였다.

정보공개 원칙 :
 청구된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
 계 등에 관한 사항,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등을
 비공개할 수 있다.

【도표 6-5】 정보공개 현황



국방부는 국민이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www.mnd.go.kr)에 「행정정보공개방」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정보공개방」에는 국방부 주요사업계획 등의 사전공표 대상정보 523건과 주요 생산문서 7,420건, 정보목록 17,127건 등을 공개하고 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2006년 7월에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여 정보목록 외에 공개문서의 원문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이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비밀사항 이외에는 가급적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 행정을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나. 국방 민원업무 혁신

국방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더욱 성숙된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권리의식에 부합되는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방민원 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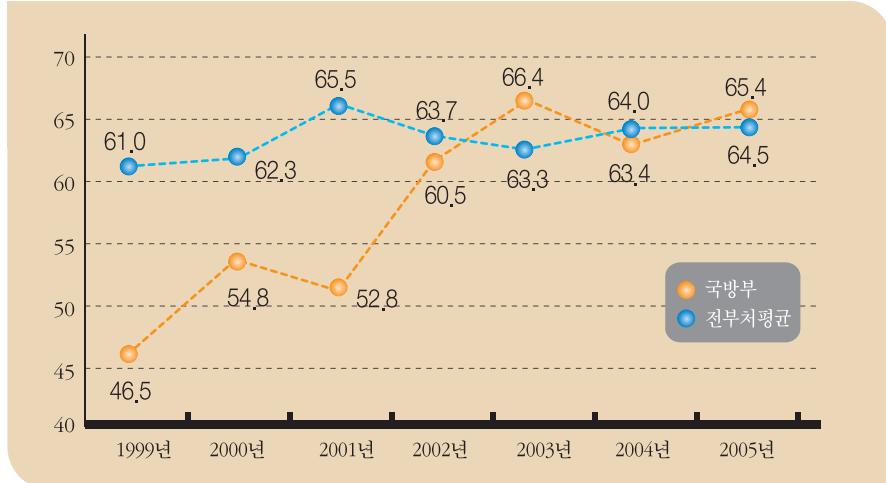
국방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국방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이 불편해 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5년에는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5 국방민원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하였고, 국방민원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 군·기관의 전자민원 창구를 표준화하는 등 민원행정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이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2005년 정부 부처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국방부는 43개 부처 중 9위를 차지하였다(【도표 6-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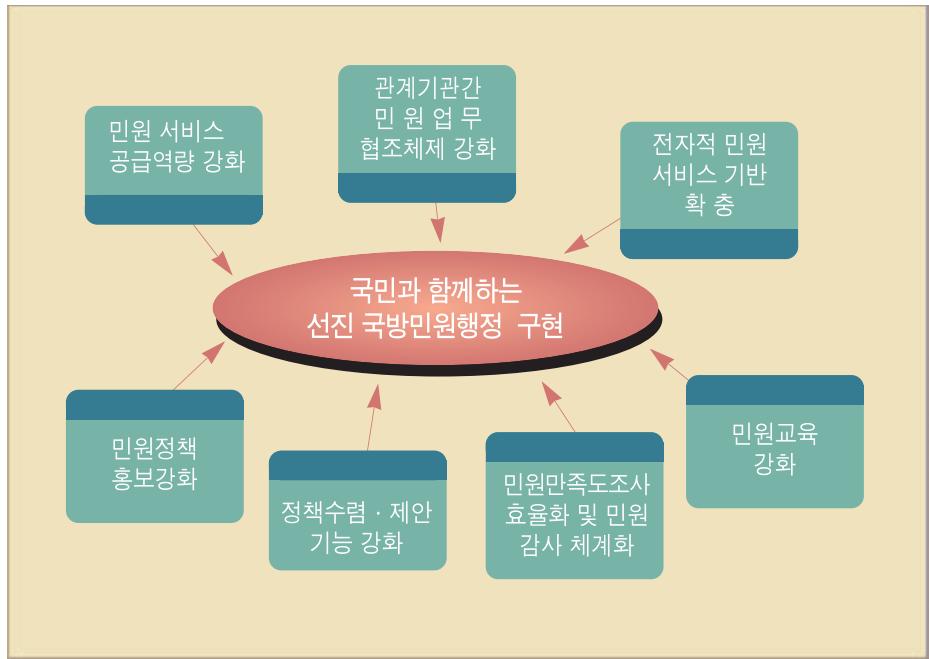
2006년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국방 민원행정 구현’이라는 비전과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지속적인 국방민원행정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도표 6-6】 국방부 민원서비스 만족도 추이 (국무조정실 조사)



특히 국방민원업무의 발전을 위해 【도표 6-7】과 같이 7개 분야로 나누어 총 21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도표 6-7】 국방 민원업무 발전과제



06 장 >>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한편, 국방부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도 적극 동참하여 국민들이 국방과 관련된 민원을 어디서나 쉽게 제기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Call-Center)」 구축과 연계하여 「국방민원 Call-Center」 구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방부 종합민원실도 국민이 쾌적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4. 대민 지원



▲ 모내기 지원활동

평상시 군은 기본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난상황뿐만 아니라 군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는 군의 가용 인력, 장비와 기술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민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농철과 농번기에 일손 부족으로 적기 파종이나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기반 취약지역 농가에 정기적으로 모내기, 벼베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농촌 일손돕기 지원현황은 【도표 6-8】과 같다.

【도표 6-8】 최근 5년 동안 농촌 일손돕기 지원현황

(2006.10.31 현재)

구분	지원인원 (명)	지원장비 (대)	주요 지원내용			
			영농지원 (정보)	농기계수리 (대)	농수로보수 (km)	의료진료 (명)
2002	1,342,837	17,757	57,387	17,646	232	60,078
2003	575,141	7,672	28,193	7,659	450	12,201
2004	357,557	6,547	9,062	6,413	153	4,149
2005	155,466	2,556	2,484	2,365	76	8,083
2006	121,178	2,434	2,323	6,940	110	4,624
계	2,552,179	36,966	99,449	41,023	1,021	89,135

농촌의 구조변화에 맞추어 단순한 인력지원보다는 농수로 정비, 하천 개보수 등 영농 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농기계 순회정비팀」을 군 자체나 농협과 협동 편성하여 농기계 서비스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경운기, 이앙기 등의 농기계를 수리하는 등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농촌사랑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1사 1촌 자매결연」 체결에 참여하여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의료 취약지역에 무료진료와 방역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제2절 병무행정 개선

국방부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형평성 있게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병역법』 등 관계 법령의 보완과 지속적인 업무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공정한 병무행정 수행으로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고 서비스혁신을 통한 고객감동을 실현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병역의무 부과의 공정성 제고

국방부는 국민이 병역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처분의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06년 1월에는 징병검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신장 145cm 이하 면제 등 일반 부위(신장 및 체중)의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질병과 심신장애 기준을 객관화하고 세분화하였다.

또한 인성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병원 위탁검사를 도입하였고, 임상심리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정한 사람들의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해 2006년 2월부터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체검사의 주요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면탈우려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실시간 경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2006년 한 해 동안 9,600여 명의 정밀검사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불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병역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병역관련 불건전 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해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병무행정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병무행정발전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징병검사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으로 징병 검사 수검자의 이의신청과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여 해소해 나가고 있다.

한편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청년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병역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군 복무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병무행정발전 시민참여위원회 간담회

2. 관계법령 개정

국방부는 올바른 병역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계법령들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병적증명서 첨부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병역사항 변동신고의 폐지와 변동내용 공개 주기를 단축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법시행령』은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신체등위 7급자의 질병이 완치된 경우 조기 재신체검사 실시, 공익근무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복무관리 절차 개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권익 증진과 효율적 복무관리 개선 및 공익수의사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등의 내용을 개정하였다.

『병역법시행규칙』 개정에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근무요원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이유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요청할 경우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 대체복무제도 연구 발전

전환복무제도 :
현역병을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등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하여 군인신분을
전환하는 제도

대체복무제도란 현역을 충원하고 남은 임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현역복무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체복무로 「전환복무제도」,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제도」, 「공중보건의사 · 공익법무관 제도」, 「기타 공익근무요원 · 국제협력의사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도입 여부를 비롯하여 체육, 예술계 등 각계의 병역특례확대 요구에 따라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검토와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06년 4월 5일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2007년 6월말까지 한시적 운영).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는 외국의 사례와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 여부를 비롯하여 대체복무 지원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을 건의할 계획이다.

분야별 연구중점은 【도표 6-9】와 같다.

【도표 6-9】 분야별 연구중점

분야	세부과제	관련기관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사례 연구(독일 · 대만 · 이스라엘 · 미국 등) • 군 장병과의 상관관계(사기문제, 파급효과) •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여부 • 기준 대체복무제도와의 상관관계 등 	국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일반 특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 예술 · 체육 · 산업계의 대체복무(특례) 현황 파악 • 병역의무와 국가인력 활용 측면의 조화 방안 • 특례 확대/축소의 필요성 • 특례의 기준, 원칙 정비 방안 등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여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국민의식조사(전문조사기관 용역의뢰) 	여론조사 전문기관
종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 분석/판단 및 정책 대안 도출, 정책 반영 건의 	-

4. 병역이행자 편의 확대

국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국방부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병역의무 본인선택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징병 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징병 검사의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병역의무자는 관할 지방 병무청의 징병검사를 희망하는 날 5일 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공석 범위 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결정 방식이 월별 선택방식에서 분기별로 바뀌었고, 거주지 외에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군·구 소재 복무기관 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소집기일 연기중인 사람도 소집 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본인 선택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다.

입영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생이 전역 후 복학가능 시기에 제대할 수 있도록 입영 인원을 확대하였는데, 2005년에는 52,000여 명이, 2006년에는 59,000여 명이 복학가능 시기인 1, 2, 7, 8월에 입영하였다. 그러나 군 인력운영과 조화를 위하여 이러한 편의를 계속 확대하기에는 일부 제약이 있다.

아울러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및 귀국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인터넷 국외 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자가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게 하였다.



▲ 입영자 환영행사

제3절 국군포로 송환 노력

정부는 '국가의 본분과 도리'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군포로의 송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회담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국군포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재북(在北) 국군포로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점 등 많은 제한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군포로 문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하여 서신교환과 상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 미송환 국군포로 현황

한국전 당시,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간에 전쟁포로의 상호교환이 이루어졌다. 당시 유엔군 사령부는 국군 실종자의 수를 82,000여 명으로 집계하였으나, 공산군 측에서 유엔군 측으로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중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엔사는 1960년대 초반까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이들 국군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강제 억류중인 국군포로는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이 문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4년 10월, 국군포로 조창호 소위가 귀환함으로써 국군포로 문제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국방부는 미송환 국군포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행방 불명자 유가족의 신고와 병적부 확인 등을 거쳐 1997년 10월, 19,409명의 「6.25참전 행불자(실종자)명부」를 공개하였는데,



이 명부에는 재북(在北) 억류 국군포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 귀순자와 65명의 귀환 국군포로들의 증언을 토대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6년 10월 현재 545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정부의 해결노력

정부는 ‘국가의 본분과 도리’ 차원에서 모든 경로를 통해 국군포로의 송환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 하에 그동안 국제기구를 통해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북협상 기회를 이용하여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등 가능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군포로문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하여 서신교환과 상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1명의 국군포로와 그 가족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재회하였으며, 앞으로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봉면회소가 완공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등 상황이 호전되면 더 많은 국군포로들의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최근 제3국에 체류하는 국군포로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조속한 국내송환과 이들의 안정적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포로 관련 법률과 훈령을 제정하고 국군포로업무 추진 기구를 정비하는 등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2004년 이후 제3국 체류 국군포로와 가족들의 국내 송환이 크게 증가하였고, 귀환 국군포로들에 대해서는 1999년 1월 29일 공포된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정의 보수와 연금, 그리고 주거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등 이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 국군포로 퇴역식 장면

06 장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국방부는 매년 귀환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을 초청하여 안보현장 견학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7년 1월 1일부로 현행 법률을 폐지하고 무상 의료지원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제정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3국 체류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송환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측에 국군포로 송환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며, 귀환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제4절 환경 친화적인 군 운영

자연환경은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보전 활동은 국민의 삶터인 국토환경 보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주둔지의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기초 시설을 확보하고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한편, 주기적인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군 운용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1. 군 환경영무수행체제 발전

효율적으로 환경영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은 환경관리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전문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 군 및 예하부대의 특성에 맞게 환경조직과 편제기준을 설정하고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환경전담인력의 확보는 【도표 6-10】에서 보는 것과 같으며,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하여 신분별 보직관리와 교육훈련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도표 6-10】 환경전담인력 확충실적

(단위 : 명)

총 소요	확보		2007년 이후
		%	
1,609	1,496	93	113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91개의 환경관련법과 국방관련 법규와 훈령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군의 훈령,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999년부터 각 군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환경 시범부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별 부대특성에 맞는 환경관리 모델개발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군의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

2. 환경오염방지사업 확대

군은 2005년말까지 오·폐수 처리시설 2,367개소를 확보하는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오수를 처리하며, 일일 처리용량 200톤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외부에 위탁관리하는 등 오·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차량 매연가스 측정(반기 1회)

【도표 6-11】환경기초시설 확보 추진현황

구 분		총 소요	2005년까지	%	2006년	2007년 이후
환경시설	개 소	7,420	4,747	64	458	2,215
	억 원	6,683	3,815	57	510	2,358

이와 더불어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가능한 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위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군 소각시설에서 소각하고 있다. 한편, 주둔지 내에 매몰된 폐기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종합 처리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폐유, 폐산, 폐알카리 등 지정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2006년 말 현재 2만 5천여 개의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2005년도 군 폐기물 처리 현황은 【도표 6-12】와 같다.

【도표 6-12】 2005년 군 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 톤)

구 분	발생량	처 리			
		위탁처리	재활용	자체처리	기타
계	147,918	99,992	38,318	3,218	6,327
생활쓰레기	79,923	64,394	12,944	2,484	101
음식물쓰레기	26,826	1,449	24,580	797	-
지정폐기물	9,812	7,053	756	-	2,003
건설폐기물	31,357	27,096	38	-	4,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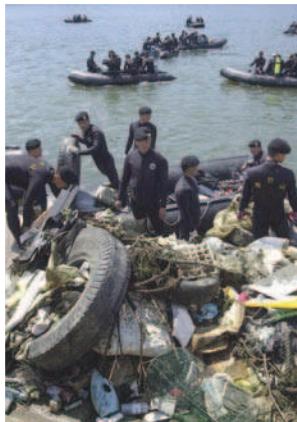
3.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

우리 군은 군사훈련이나 작전임무를 수행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주둔부대별 지역환경 정화활동 지원사업은 관·군 지역환경협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매년 연인원 200여 만명의 장병이 부대와 훈련장 인근의 산야, 하천, 해안, 공원지역 등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1.6만여 톤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 발행한 생태·자연도를 활용하여 주둔지와 군 관할지역의 생태계 보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생태계 특별보호지역 등에 대한 군의 보전활동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 대한 국내외 환경 관련 학술연구와 조사 등 연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인원의 출입조치 등 적극 협조하고 있다.

아울러 야생동물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겨울철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284톤), 올무·덫 등 밀렵도구 수거(3,267점), 감시초소 운영(731개소) 등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 한강 수중정화



▲ 공군 15비행단 청계산 올무제거 활동

제5절 국방홍보의 활성화

국방부는 주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요 국방정책 추진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열린 국방’ 구현을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홍보는 군의 참된 모습을 대중에게 알려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동시에,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천명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방정책을 주변국에 알려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정책 품질향상과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 정책홍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방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계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1. 국방홍보 활성화 및 제도마련

가. 국방홍보 활성화

국방부는 주요 정책에 대한 정례브리핑과 수시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방일보, 국군방송, 국방저널, 국방포커스 등 군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국방현안과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각종 홍보 자료를 대내외에 제공하고 있다.

2005년 12월 1일 개국한 국군방송 TV는 위성방송과 지역케이블 방송을 통해 장병과 국민들에게 군의 소식을 직접 전달하는 ‘국방전문 TV채널’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국방홍보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온라인 홍보 활동 또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국방부 홈페이지를 네티즌 중심의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하여 국방정책 홍보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터넷 신문인 「국방부 뉴스」를 운영하여 실시간대에 홍보자료를 게시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싸이월드」에 미니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 네티즌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쌍방향 대화를 통해 친근한 국방상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고객관리 개념을 도입한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통해, 국방관련 이해 당사자나 국민들을 관심분야별로 구분하여, 원하는 정책 자료를 전자우편(e-mail)으로 발송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맞춤형 쌍방향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수 정책고객, 언론계, 학계, 예술계, 시민단체, 예비역 등 각계의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국방정책 설명회와 안보현장 견학 등 기획홍보행사를 실시하여 안보 공감대를 확산해 가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각종 병영체험, 민간영화와 TV 영상물 제작, 지역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과 안보관광지 출입절차 개선 등 국민을 위한 국방홍보 서비스를 증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PCRM: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국방장관과 네티즌과의 대화 ('05.9.29)

나. 「국방 정책홍보 평가시스템」 구축

21세기 국가정책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으므로 국방정책 품질향상과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별 정책담당자는 정책수립에서 홍보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까지의 국방 정책홍보는 정책과 홍보가 분리되어 추진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정책과 홍보는 별개라는 조직 내 뿐만 아니라 인식과 관습을 일대 전환하여, 새로운 정책홍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책홍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방 정책홍보 평가시스템」은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결정단계, 집행단계별로 소관업무추진 전 과정에 대해 정책홍보 실시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적용, 조직의 팀장과 팀원의 평가 점수로 반영하고 있다.

2. 국방정책 발전에 민간전문가 참여

가. 국방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국방부는 1981년부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국방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으며, 국방정책에 대한 민·군 간 상호이해와 공감대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국방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분야별 11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연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분기 1회 이상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개최하여 국방 현안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긴급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이들에게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방정책자문회의는 공식회의 이외에도 자문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문·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별 자문위원 구성 현황은 【도표 6-13】과 같다.

【도표 6-13】 국방정책자문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정책홍보(10)			혁신기획(7)		인사복지(8)		지원관리(9)			합참	계
정책	국제	정훈 홍보	기획 예산	법무	인사 복지	동원	군수	시설	정보화 기획		
4	3	3	4	3	6	2	4	2	3	14	48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2006년 현재 여성전문가 10명의 자문위원들을 분야별로 편성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수의 지방인사와 시민단체 소속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부에서 추진해온 업무에 대해 내부평가에만 의존해 왔으나, 시대의 요구에 따라 과감하게 국방의 모든 분야를 개방하여 외부평가를 통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부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주요정책,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 등 5개 분과 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국방부 자체평가계획 심의,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실적 종합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필요할 때 정책점검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갖춘 교수, 민간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 현황은 【도표 6-14】와 같다.

【도표 6-14】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 현황

(단위 : 명)

분과	주요 정책	재정 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	계
인원	7	6	5	5	7	30

06 장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이렇듯 우리 군은 군의 기본임무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국민편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부 록

1.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2. 남북 경제지표 비교
3. 북한 연도별 군사비
4. 북한 핵문제 관련 경과일지
5.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과/제원
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7. 제38차 SCM 공동성명
8. 유엔 평화유지 활동 현황
9. 우리 군의 파병 현황
10. 세계 주요국가의 국방비 비교
11. 연차별 정부재정과 국방비
12. 남북 군사력 비교
13.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현황
14. 남북군사회담 경과일지
15. 제37차 SCM 공동성명
16. 주요 국제군비통제협약/기구
17. 국방기구도
18.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 총괄

구 分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일 본
총 병 력	1,473,960	1,037,000	2,255,000	240,812

● 육군

구 分	미 국	러시아	중 국	일 본
병 력	502,000	395,000	1,600,000	149,571
사 단 (예비)	10(8)	36(15)	59	10 * 4개 여단과 1개 혼성단 별도
전 차	7,620	22,950	8,580	950
경 전 차	6,719	150	1,000	–
정찰전차	96	2,000	–	90
장갑 차	14,900	24,990	4,500	950
견인포	1,547	12,765	14,000	480
자주포	2,087	6,010	1,200	290
다련장포	830	4,350	2,400	110
박격포	2,066	6,100	100	2,000
대전차 유도무기	드래곤 19,000 채블린 950	AT계열의 다양한 형태 보유 보유수는 불분명	7,200	650
지대공미사일	1,281	2,460	284	800
헬 기	4,597	1,700	364	485
항 공 기	298	–	4+	15

● 해군

구 分	미 국	러시아	중 국	일 본
병 력	376,750	142,000	255,000	44,928
잠수함(전략)	80(16)	54(13)	69(1)	16
항공모함	12	1	-	-
순양함	27	6	-	-
구축함	49	15	21	45
프리기트	30	19	42	9
해안초계함	21	88	331	7
소해함	26	60	39	31
상륙함	40	21	56	8
상륙정	200	80	50	-
지원함	35	436	163	27
수송함	26	-	?	8
예비수송함	127	-	?	-
전투기	752	266	200	-
헬기	608	120	51	107(P-3C 96)
해병사단	3	1	2(여단)	-

● 공군

구 分	미 국	러시아	중 국	일 본
병 력	379,500	170,000	400,000	46,313
장거리 폭격기	205	116	폭격기 222	-
정찰기	261	160	54	27
지휘기	30	20	-	-
전투기	3,200	1,500	1,200	360
수송기	1,025	354	296	42
급유기	659	20	10	-
훈련기	1,516	980	493	170
헬기	198	848	80	-
민간 예비	927	1,500	?	-

※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05-2006*(런던국제문제연구소, 2005.10)/일본은 2006년 일본 방위백서(동경 : 일본 방위청, 2006. 8.)

※ 미국 총병력은 해병대 175,350명, 해안경비대 40,360명을 포함한 병력임.

※ 러시아 총병력은 전략군 8만 명, 지원부대 25만 명을 포함한 병력임.

[부록 2]

남북 경제지표 비교

구 분	한 국		북 한		한국의 북한 대비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GNI(억\$)	6,086	6,810	184	208	33.1배	32.8배
1인당 GNI(억\$)	12,720	14,162	818	914	15.6배	15.5배
경제성장률(%) ※ GNI 기준	3.1	4.6	1.8	2.2	-	-
무역총액(억\$)	3,726.4	4,783.1	23.9	28.6	155.9배	167.2배
총인구(만명)	4,785	4,808	2,252	2,271	2.1배	2.1배

※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1993년부터 UN, IMF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 GNP를 GNI로 대체 사용하고 있음(GNI=GNP)

[부록 3]

북한 연도별 군사비(1991~2006)

() 내는 북한 공식발표 군사비, (단위 : 억\$)

연 도	G N I (한국은행)	총 예산 (북한발표)	군 사 비	GNI 대 군사비 비율(%)	총 예산 대 군사비 비율(%)	환 율 (미1 \$: 북한 원)
1991	229	171.7	51.3(20.8)	22.4	29.9(12.1)	2.15
1992	211	184.5	55.4(21.0)	26.3	30.0(11.4)	1.13
1993	205	187.2	56.2(21.5)	27.2	30(11.4)	2.15
1994	212	191.9	57.6(21.9)	27.2	30(11.5)	2.16
1995	223	208.2	62.4	28	30	2.05
1996	214	?	57.8	27	?	2.14
1997	177	91.0	47.8	27	52	2.16
1998	126	91.0	47.8(13.3)	37.9	52(14.6)	2.20
1999	158	92.3	47.8(13.5)	30	51(14.6)	2.17
2000	168	95.7	50(13.7)	29.8	52(14.3)	2.19
2001	157	98.1	50(14.1)	31.8	51(14.4)	2.21
2002	170	100.1	50(14.9)	29.4	50(14.9)	2.21
2003	184	112.5	50(17.7)	27.4	44.4(15.6)	2.21
2004		25.1	(3.9)		(15.6)	139.0
2005		29.0	(4.6)		(15.9)	140.0
2006		29.4	(4.7)		(15.9)	143.0

※ 1995~1997년도 군사비 규모는 GNI의 평균 27%를 적용한 추정치임.

※ 2003년도는 '02.7.1 경제 개선 조치 이전 환율(\$1=2,21원) 적용.

※ 2004년 이후는 북한 환율 급등으로 군사비 추정 제한, 북한 발표 규모만 제시.

북한 핵문제 관련 경과 일지 (2005.1 ~ 2006.11)

일자	주요 내용
2005. 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어떠한 사전조건도 없이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음.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북한의 회담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 - 본인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직접 핵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6자회담 무기한 참가 중단 및 핵 보유 성명 발표
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중국 중앙위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 접견 시, 주요 언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반도의 비핵화 견지, 대화 통한 평화적 해결 입장 강조 - 6자회담 반대한 적 없으며, 회담 성공 위한 노력을 다짐 - 유관국 등의 공동 노력으로 6자회담 조건 성숙 시 회담 참여 예정
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국무부,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이고 잔인한 정권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례를 나열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중국을 방문중인 ‘박봉주’ 총리와의 회견에서 북핵 3원칙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3원칙은 ① 한반도 비핵화 견지 ②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 해결 ③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
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루치 천 미 국무부 차관보, 핵물질 유출이 대북 군사공격 시기임을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외부로 핵물질을 유출할 경우 미국의 대북 군사적 공격 검토시기가 될 것임
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 외무성, 북핵문제의 UN안보리 상정은 대북 선전포고라고 비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미국이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간다면 이를 곧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모든 것에 대비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음 - 우리가 그토록 커다란 곤란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품을 들여 핵 억제력을 마련해 놓았고, 미국의 강경에는 끝까지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임
4.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은 매우 위험한 인물로 북한 주민들을 짖기고 거대한 강제 수용소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김정일과 같은 폭군을 다루기 위해 중국 등 여타국도 컨소시엄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좋은 접근방식이라 생각함
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스 미 국무 CNN과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주권국가이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음 - 6자회담은 북한을 위한 최선의 틀이고, 미국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과 협상을 해 왔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계속 말해왔음 -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경우 북한에게 유리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 바,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에 다자적 안전보장 및 에너지를 공급할 것임
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 외무성 대변인, 폐연료봉 인출 작업 완료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우리 해당부분에서는 5MWe 시험 원자력발전소에서 8천개의 폐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을 최단기간 내 성과적으로 끝냈음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정상회담, 북 핵포기 시 미 · 북간 관계개선 추진 합의

일자	주요 내용
6. 17	•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동영 특사 만나 '미국과 수교하면 6자회담 복귀' 시사
7. 12	• 정동영 통일부장관, '대북 중대제안' 발표 -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제공하기로 했음
7. 26	• 제4차 6자회담 개막
8. 7	• 제4차 6자회담 휴회
8. 9	• 북 노동신문, "평화체제 수립하면 비핵화 실현 가능" 주장 -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시, 핵문제의 발생근원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없어지고 자연히 비핵화 실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
8. 29	• 북 외무성 대변인, 9.12일경 6자회담 재개 제안 - 우리는 전쟁연습 먼지가 좀 가라앉았다고 볼 수 있는 9.12일이 시작되는 주에 가서 6자회담 2단계 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이며 이것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아량임
9. 15	• 미 재무성, BDASO 북한계좌 동결
9. 13 ~ 19	•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개최, 공동성명 채택
9. 20	•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조중방) - 우리와 미국 사이에 가장 심각하게 대치되어 온 문제는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에 관한 문제, 구체적으로는 우리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였음 - 우리는 공동성명에 천명된대로 미국이 우리에게 신뢰조성에 기초가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에 복귀하며 IAEA와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임
10. 24	• 북한 외무성 대변인, 11월 초순 6자회담 참가 발표 - 우리는 6자가 공약한대로 11월 초순 합의되는 날짜에 제5차 6자회담에 나갈 것이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10. 27	• 한성렬 북 UN 차석대사, 한미연구소(ICAS)연설 -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북한의 핵 억지력은 방어적인 것으로, 미국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를 포기할 수 없음
11. 9 ~ 11	• 제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개최
11. 15	• WFP대변인, 대북지원 중단 발표 - 북한 내 19개 식품기동공장에 대한 음식재료와 기술적 지원이 오늘 모두 중단됐으며 WFP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공급은 없을 것임
12. 3	• 북 외무성 대변인, 금융제재 해제 위한 쌍무회담 개최 촉구 - 금융제재 해제는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서 근본문제이며, 6자회담 진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임
2006. 1. 18	• 김계관 - 힐 회동 - 6자회담 조기재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각국의 기준입장 고수
3. 7	• 미 · 북 뉴욕접촉 - 위폐문제에 대한 돌파구 마련 없이는 6자회담 불참 재확인
4. 13	• 김계관, "마카오 BDA 자금 내손에 쥐는 순간에 회담장에 나간다"
4. 20	• 부시 - 후진타오 통화, -부시, 중국에 대북 영향력 행사 촉구 -후진타오, 6자회담 당사국들에 유연성 촉구

일 자	주요 내용
4.27 ~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탕자쉬엔 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일 국방위원장, 6자회담 선 복귀 거부의사 전달
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통신,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준비 움직임 포착' 보도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 외무성, 힐 차관보 초청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이 진실로 공동성명을 이행할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면 그에 대해 6자회담 미국측 단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다시금 초청함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백악관대변인, 북한 힐 차관보 초청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도 6자회담을 통해서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할 것
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이스 미 국무장관, 북 미사일 발사준비에 대한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9.19공동성명의 일부인 모라토리엄 의무를 철회한 것이며,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할 것
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 외무성, 미사일 발사는 자주권에 관한 문제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년)일·북 평양선언과 지난해 9월 6자회담 공동성명 등 어떠한 성명에도 구속되지 않음. 국가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로 어디에서도 비방할 권리가 없음
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성렬 UN주재 차석대사, "미사일 발사유예, 대화중단 땐 적용 안 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모라토리엄 선언 위반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임. 지난, 99년 당시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일시 중지한다고 했던 것임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음.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해을 경우, 핵무기로 보복"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대포동 수준의 미사일 포함 총 7발 발사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중 경제기술협조협정 조인(평양)
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안보리 대북결의안 1695호 만장일치로 통과
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상원, 북한 비확산법 만장일치 가결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비 미 재무부 차관, 대북 금융제재 목표는 북한 변화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북제재가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목표는 북한의 변화를 보는 것
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북핵 비확산법 만장일치 가결
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정상회담, 포괄적 접근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노력 합의
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핵보유 거듭 선언 및 미 제재 계속하는 한 6자회담 복귀 불가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이 북한 은행계좌 동결과 북한을 돋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경고 등 잇단 대북 제재조치들을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무조건 회담장에 복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 북조선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억지력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이스 장관, 북에 최후통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의 시한이 거의 소진되어 감 최수현 북한 외무부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무런 근거도 없는 미국의 제재 아래서 스스로 핵포기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

일자	주요 내용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 전 대통령, 미·북 대화 촉구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오콘이 한반도 문제를 좌지우지 - 그들은 북을 악당으로 만들어, 그 악당을 핑계로 MD문제도 풀고, 일본 재무장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음. 북한이 핵무기 1~2개 만든 것을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할 수 있음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핵실험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됨 -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 이전을 불허할 것임"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해 한편으로 북한이 핵실험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을 강구하고 또 한편으로 실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초래될 상황에 대해 북한이 좀 더 분명히 알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 '북한 핵실험 시 심각한 결과' 공개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아주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 - 나쁜 행동을 하는 국가들은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을 것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중앙통신, "김위원장이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 500여 명을 만났다"고 보도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안보리, 북한 핵실험 포기 촉구 의장성명 발표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신문, 선군정치 관련 김정일 역대 발언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억천만번 죽더라도 모든 고난과 시련을 뚫고 사회주의를 지켜나갈 것임" -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중방, '핵실험 성공적 실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음 -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임
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추가 핵실험' 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 때문에 핵무기 보유를 실물로 증명했음 - 핵시험은 9.19 공동성명과 모순되지 않음 -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 연이은 물리적인 대응 조치들을 취해 나가게 될 것임
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안보리 대북결의안 제1718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탄도미사일 등 WMD 관련 물자·기술 제공 금지, 사치품 수출 금지, 핵이나 WMD 관련 자금 이전 차단, 관련자의 입국금지, 핵·WMD 이전 방지를 위한 화물 검색
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안보리결의안을) 선전포고로 전면 배격" 주장
10.18 ~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탕자쉬엔 방북, 추가핵실험 관련 언급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가핵실험 계획이 없으나 미국이 압박해오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음
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외교부, "중·미·북 북경 3자 비공식회동을 갖고 6자회담 재개 합의" 발표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금융제제 문제를 논의, 해결한다는 전제하 6자회담에 복귀키로 했다"고 표명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과/제원

●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과

연 도	개발/생산활동
70년대 초	• 중국의 미사일 개발계획 참여 미사일 기술획득(추정)
1976~81	• 소련제 SCUD-B 미사일 및 발사대를 이집트로부터 도입 역설계/개발
1984. 4	• SCUD-B 미사일 최초 시험발사
1986. 5	• SCUD-C 미사일 시험발사
1988	• SCUD-B/C 작전 배치
1990. 5	• 노동미사일 최초 시험발사
1991. 6	• SCUD-C 미사일 발사
1993. 5	• 노동미사일 시험발사
1994. 1	• 대포동 1호 미사일 최초 식별
1998	• 노동미사일 작전 배치
1998. 8	•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북한측 : 위성발사 주장)
2006. 7	•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및 노동, SCUD 미사일 발사

● 북한의 미사일 제원

구 분	SCUD-B	SCUD-C	노 동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사거리(km)	300	500	1,300	2,500	6,700≥
탄두중량(kg)	800	600	500	500	650~1,000 (추정)
비 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발사	개발 중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 체제, 군 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문민기반의 확대
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해군·공군의 균형 있는 발전
3. 군 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4.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5.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개혁”이라 함은 정보·과학 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경제성·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국방운영체제”라 함은 군을 비롯하여 국방에 관련된 모든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3. “군 구조”라 함은 국방 및 군사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조직 및 구성관계로서 육군·해군·공군이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말한다.
4. “문민기반의 확대”라 함은 국방부가 효율적으로 군을 관리·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국방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고,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력체계”라 함은 전쟁을 수행할 목적과 기능을 갖는 무력 또는 군사력으로서 국방인력, 군사무기체계, 장비, 전술교리, 군사훈련체계 및 기반시설 등이 통합된 전체 구조를 말한다.
6. “합동성”이라 함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종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부의 기본의무) ① 정부는 국방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최적화 수준을 유지하도록 충원·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국방개혁의 추진

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 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개혁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개혁의 목표
2. 국방개혁의 분야별·과제별 추진계획
3.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국방운영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되,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방개혁위원회)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때에는 국방·안보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국방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법정부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 국방운영체제의 인력운영구조는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인력과 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상호 보완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군인이 아닌 공무원을 연도별·직급별로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① 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관련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 국군의 부대와 기관에서 분야별·직급별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국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며, 병역자원의 양적·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제15조(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문분야 또는 특수한 기술 분야의 복무능력을 보유하거나,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지원병 모집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급지원병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급지원병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① 국방부장관은 여성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여군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 각 군별·연도별 여군 인력의 비율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장교의 진급) ① 장교의 진급에 대한 임용권자의 권한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장교의 진급인원을 선발할 때에는 개인의 자질과 능력 및 군 기여도에 따라 선발하되, 장교 양성과정별 인력운영의 사정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진급기회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장교수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합동부대에서 근무하는 장교의 직위에는 합동성 및 전문성 등 그 직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장교가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합동부대의 장교 직위 중 합동성·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요청을 받아 합동직위로 지정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합동직위에 근무할 수 있는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천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제21조(중장 이상 장교의 보직관리) 중장 이상 장관급 장교는 정원의 한도 안에서 보직되어야 하고, 정원으로 정한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보직 기간이 종료된 후 동일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역에서 전역된다.

제4장 군 구조 · 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

제22조(발전방향) 국가는 병력 규모 위주의 양적 · 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독자적인 정보 수집 · 관리, 첨단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위주의 질적 · 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하여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제23조(군 구조의 개선) ①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 해군 · 공군본부 등 군 상부 조직은 문민기반 위에서 통합전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개선 · 발전시켜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의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합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보강 · 발전시켜야 한다.

③합동참모의장은 합동작전능력 및 이와 관련된 합동군사 교육체계 등을 개발 · 발전시키고,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있어서 각 군 참모총장과 원활한 협의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육군 · 해군 · 공군의 기능 및 합동성에 관하여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④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을 유지 · 발전시키되 합동성의 강화를 위하여 그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하고, 중간 지휘체대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축소 · 조정하여 단위부대의 전투능력과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제24조(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략개념 및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②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비병력은 각 군별로 최고의 전력체계를 유지하고, 육군 · 해군 · 공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구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군 구조 개편에 따라 전역하게 되는 장교 ·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시행하고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의 규모, 각 군별 구성비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①국군의 장교 · 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한 군별·연도별 추진 목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 국가는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무기·장비 및 전투 예비물자를 현대화하여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② 예비전력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 연동하여 개편·조정하여야 한다.

③ 연도별 예비전력의 규모 및 예비전력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①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항만·공항·국가시설 및 특정경비지역 등의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계임무의 전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① 합동참모본부의 각 군 인력은 균형편성 및 순환보직을 통하여 합동성 및 통합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1인은 육군소속 군인으로 보한다.

③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장관급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필수직위 및 공통직위의 지정과 공통직위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①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순환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병영문화의 개선·발전

제31조(발전방향) 국방부장관은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복무와 관련된 문화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제32조(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 ①국방부장관은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인의 복무에 관련된 제반 환경을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장병이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향유하며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는 제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장병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 체계를 발전시키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장 이상 보직관리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중장 이상 보직관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장 이상으로 진급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8차 SCM 공동성명

2006. 10. 20, 워싱턴 D.C.

1.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2006년 10월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장관과 윤광웅 한국 국방부장관이 양측 수석대표가 되어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6년 10월 18일 미국 합참의장 피터 페이스 대장과 한국 합참의장 이상희 대장은 제28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2.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군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국가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이 국가들의 재건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군과 미군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범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양 장관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위협임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였으며, 북한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 윤광웅 장관은 북한의 비타협적 행위에 대처하는 데 있어 미국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에 공감함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재개 및 진전을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을 상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 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 한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4. 또한 양 장관은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의 위험성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 이익에도 긴요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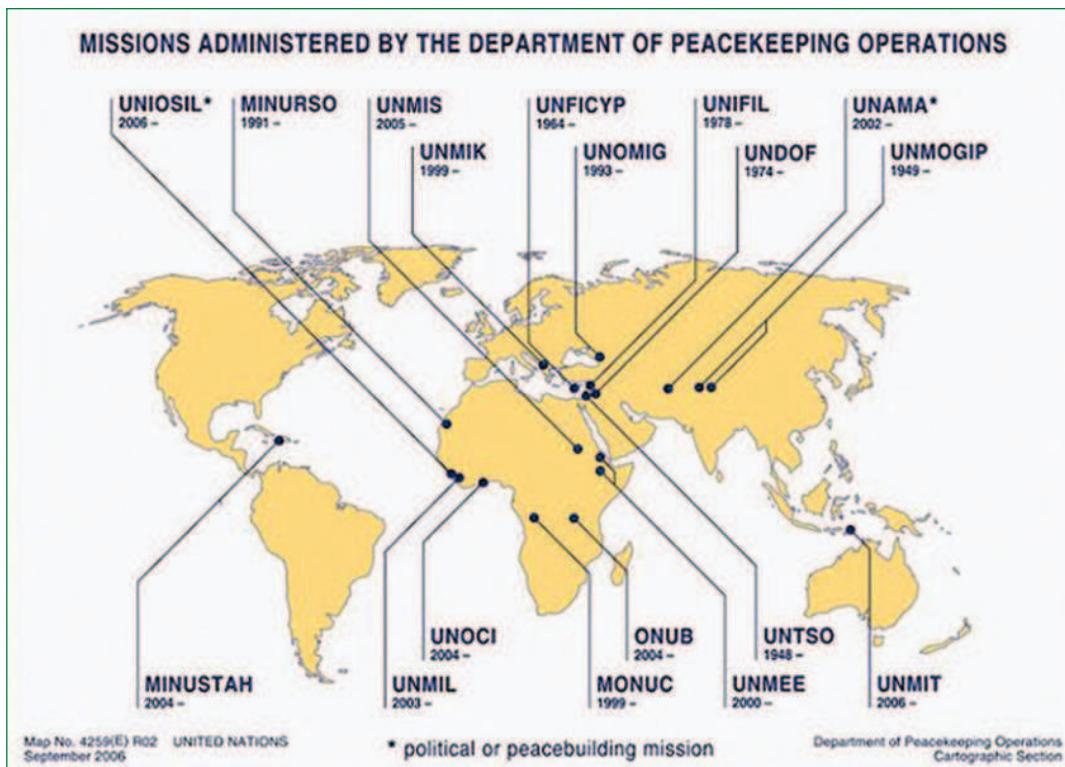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안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윤광웅 장관도 평화 및 안보를 보존하려는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7. 양 장관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주한미군 재조정 관련 현안과 미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들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도 SPI 협의를 지속하고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8. 양 장관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통해 한미동맹비전연구에 합의하게 된 점에 대해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동 연구결과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동 연구결과가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미래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9. 양 장관은 제37차 SCM 합의에 따라 추진되어 온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포함한 한·미 지휘 관계 연구 결과를 점검하였다. 양측은 지휘관계 로드맵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군사위원회(MC)는 동 계획의 진전 상황을 매년 SCM에 보고한다. 양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2007년 전반기 중에 구체적인 공동 이행계획이 작성되도록 즉시着手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목표연도 설정에 대해 럼스펠드 장관은 새로운 지휘구조로의 전환은 한반도 전쟁 억제 및 한·미 연합방위 능력이 유지·강화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임을 보장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이 충분한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은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 제공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럼스펠드 장관은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의 고유역량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합의된 목표과제와 추진일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굳은 공약을 확약하였다.
10. 양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과 여타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기지이전 및 반환 사업들이 일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전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명하고,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 공군의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직도 공지사격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럼스펠드 장관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 노력을 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윤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연합준비 태세를 위한 핵심적인 중요사안임을 인정하였다. 양 장관은 직도사격장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한·미 연합전력의 훈련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군사임무전환과 연합 군사능력발전계획이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1월 한·미 외교장관간의 전략대화에서 발표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3. 양 장관은 SCM 분과위원회【안보협력위(SCC), 방산기술협력위(DTICO), 군수협력위(LCC)】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방산기술협력위의 공동위원장은 양국 차관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위상이 제고된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이 발전되어 나감에 따라 SCM 분과위원회의 구조가 현재의 필요성에 부합되도록 검토·조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SPI가 제39차 SCM에서 검토할 건의사항을 작성해 나간다는데 동의하였다.
14. 양 장관은 제38차 SCM과 제28차 MCM이 동맹조정 관련 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와 한미 동맹 발전 관련 연구과제들에 대한 합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으로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제39차 SCM을 2007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끝.

유엔 평화유지활동 현황

● 현재 진행 중인 평화유지활동 임무단 : 18개(아프리카 8/중동 3/유럽 3/아시아 3/중남미 1)

(2006. 10. 31, 현재)



※ 1948년 이후 설치된 평화유지활동 임무단 : 총 60개

● 활동인원 : 92,311명

- 총 병력수(경찰포함)/공여국 : 76,726명/110개국
- 국제공무원(International civilian personnel) : 4,491명
- 지역고용원(Local civilian personnel) : 9,268명
- 유엔 봉사자(UN volunteers)/기타 : 1,826명

※ 1948년 이후 PKO활동간 사망자 : 2,302명

● 세계 PKO 임무단 운용현황

(2006. 10. 31, 현재)

순번	명칭	설치시기	배치지역 및 주요임무	파견인원				사망자
				군	경찰	민간인	계	
1	UNTSO	1948.5	팔레스타인 지역 정전감시	151		106	257	48
2	UNMOGIP	1949.1	캐시미르 지역 정전감시	44		22	66	11
3	UNFYCIP	1964.3	사이프러스 정전감시	851	65	38	954	176
4	UNDOF	1974.6	시리아/골란 고원 정전감시	1,047		36	1,083	42
5	UNIFIL	1978.3	남부레바논 정전감시	5,147		100	5,247	258
6	MINURSO	1991.4	서부사하라 정전감시, 선거지원	218	4	103	325	14
7	UNOMIG	1993.8	그루지야 정전감시	121	12	100	233	11
8	UNMIK	1999.6	코소보 평화와 안정지원	37	1,870	509	2,416	45
9	MONUC	1999.11	콩고민주공화국 정전감시, 평화정착	17,390	1,107	959	19,456	98
10	UNMEE	2000.7	에디오피아, 에리토리아 정전감시	2,269		135	2,404	16
11	UNMIL	2003.9	라이베리아 정전감시	14,770	1,076	516	16,362	83
12	UNOCI	2004.4	코트디브아르 평화정착	8,037	949	366	9,352	25
13	MINUSTAH	2004.6	아이티 평화정착, 재건지원	6,642	1,700	417	8,759	18
14	ONUB	2004.6	브룬디 평화재건 지원	2,440	14	262	2,716	23
15	UNMIS	2005.3	수단 정전감시, 안정지원	9,619	665	742	11,026	11
16	UNMIT	2006.7	동티모르 평화건설 지원	18	463	80	561	
17	*UNAMAI	2002.3	아프간 평화건설 지원	12	8	199	219	
18	*UNIOSIL	2006.7	시에라리온 평화건설 지원	10	18	28	56	
계				68,823	7,951	4,718	81,492	1,105

* 유엔 DPKO에서 평화재건을 위한 지원사무소 성격을 지님

우리 군의 파병 현황

(2006.11.4, 현재)

구 분		현인원	지 역	최초 파병일	교대주기	연인원	
총 계		2,577	13개 지역			18,323	
이라크 (3개국)	계	2,333	4개 지역			16,175	
	자이툰 사단	소 계	2,140				
		사령부, 여단, 직할대	2,098	아르빌	'04.4월	15,365	
		MNC-I 연락반	9	바그다드	'04.8월		
		대사관 경비대	17	바그다드	'03.12월		
	MNF-I	후방지원대	16	쿠웨이트, 카타르	'04.9월	737	
		58 항공수송단	175		'04.10월		
아프간 (1개국)	MNF-I	협조반	4	바그다드	'03.2월	24	
		참 모	14		'03.7월	49	
	소 계		208	2개 지역		1,933	
	다산부대	본 부	139	바그람	'03.2월	1,180	
		RRT(파르완)	8	바그람	'03.8월		
	924 의료지원단		58	(마나스) 바그람	('02.2월) '02.10월	729	
	CJTF-76	협조반	2	바그람	'02.7월	6개월	13
	CFC-A	참 모	1	카불	'02.7월	6개월	11
미 중부사령부 (플로리다 탐파)	협조단		4	플로리다	'02.11월	1년	21
	참 모		1				3
CJTF-HOA(1개국)	참 모		1	지부티	'03.2월	6개월	8
UN 활동 (7개국)	소 계		30	6개 지역			187
	인 · 파 정전감시단		10	라왈핀디	'94.10월	1년	102
	그루지아 정전감시단		8	수쿠미	'94.11월		64
	라이베리아 지원단		2	몬로비아	'03.10월		6
	아프간 지원단		1	카불	'03.7월		3
	부룬디 지원단		2	부줌부라	'04.9월		4
	수단 지원단		7	수단	'05.11월		8

세계 주요국가의 국방비 비교

국 가	GDP (억\$)	국방비 (억\$)	GDP대비 국방비(%)	병력 (천명)	병력 1인당 국방비(\$)
한 국	6,495	157	2.4	683	23,113
미 국	117,000	4,393	3.9	1,474	308,692
일 본	46,600	431	1.0	240	187,995
중 국	16,800	351	3.7	2,255	27,716
러 시 아	14,000	222	4.4	1,037	59,691
영 국	21,300	496	2.3	206	240,905
프 랑 스	20,000	516	2.6	255	202,436
독 일	26,700	377	1.4	285	132,513
이 스 라 엘	1,170	97	8.3	168	57,516
이 집 트	762	35	4.6	469	7,535
사 우 디	2,360	193	8.2	200	96,742
호 주	5,980	143	2.4	53	270,465
터 키	2,970	101	3.4	515	19,617
말레이시아	1,170	23	1.9	110	20,455
대 만	3,040	75	2.5	290	25,897
태 국	1,610	19	1.2	307	6,295
싱 가 포 르	1,050	50	4.8	73	69,517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05~2006*(런던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5.10.), 한국은 정부통계 기준
(환율은 1,200원/달러 적용)

연차별 정부재정과 국방비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정 부 재 정 (증가율) <small>주1)참조</small>	99조 1,801 (11.8)	109조 6,298 (10.5)	118조 1,323 (7.8)	120조 1,394 (1.7)	135조 2,156 (12.5)	146조 9,625 (8.7)
○ 국 방 비 (증가율)	15조 3,884 (6.3)	16조 3,640 (6.3)	17조 5,148 (7.0)	18조 9,412 (8.1)	21조 1,026 (11.4)	22조 5,129 (6.7)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구성비)	5조 2,141 (2.4) (33.9)	5조 4,756 (5.0) (33.5)	5조 7,379 (4.8) (32.8)	6조 2,930 (9.7) (33.2)	7조 2,987 (16.0) (34.6)	7조 4,994 (2.7) (33.3) <small>주2)참조</small>
• 경상운영비 (증가율) (구성비)	10조 1,743 (11.4) (66.1)	10조 8,884 (7.0) (66.5)	11조 7,769 (8.2) (67.2)	12조 6,482 (7.4) (66.8)	13조 8,039 (9.1) (65.4)	15조 135 (8.8) (66.7) <small>주2)참조</small>
- 인 건 비 (증가율) (구성비)	6조 4,822 (16.8) (42.1)	7조 104 (8.1)	7조 5,788 (8.1)	7조 9,881 (5.4)	8조 5,948 (7.6)	9조 1,967 (7.0) (40.9)
- 사 업 비 (증가율) (구성비)	3조 6,921 (3.1) (24.0)	3조 8,780 (5.0) (23.7)	4조 1,981 (8.3) (23.9)	4조 6,601 (11.0) (24.6)	5조 2,091 (11.8) (24.7)	5조 8,168 (11.7) (25.8)
○ 국방비 비율 • 대 GDP (%) • 대 재정 (%)						
	2.47	2.39	2.42	2.43	2.62	2.60
	15.5	14.9	14.8	15.8	15.6	15.3

주1) 정부재정 : 일반회계 기준

주2) 방위사업청 이체 후 비율변경(경상운영비 : 66.7 → 74.2%, 방위력개선비 : 33.3 → 25.8%)

● 국방부 소관(경상운영비) : 15.0 → 16.7조원, 방위사업청 소관(방위력개선비) : 7.5 → 5.8조원

● 기존 과목 구조에서 전력증강과 관련이 적은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기지 이전, 수리부속 등은 국방부 소관 경상운영비로 분류하고,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 운영비는 방위력개선비로 분류

● 2006년도 사항별 국방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05 예산	2006 예산	증 감	%
합 계	21조 1,026	22조 5,129	1조 4,103	6.7
방위력개선비	7조 2,987	*7조 4,994	2,007	2.7
경상운영비	13조 8,039	15조 135	1조 2,096	8.8
○ 인 건 비	8조 5,948	9조 1,967	6,019	7.0
○ 사 업 비	5조 2,091	5조 8,168	6,077	11.7
• 급 식	1조 1,186	1조 1,583	397	3.6
• 피 복	2,580	2,498	△82	△3.2
• 부대활동지원	6,176	7,444	1,268	20.5
• 교육훈련	1,733	1,815	81	4.7
• 장비운영	5,122	7,738	2,616	51.1
• 물자획득	1,051	1,104	53	5.1
• 시설건설	9,868	1조 1,488	1,620	16.4
• 시설유지	3,424	3,832	408	11.9
• 예비전력	787	737	△50	△6.4
• 연구/보조기관	1,748	1,932	184	10.5
• 주둔군지원	3,317	2,932	△385	△11.6
• 기본사업비	4,843	4,860	17	0.4
• 책임운영기관	256	205	△51	△19.9

* 방위사업청 이체 후 5조 8,077억원(25.8%)

● 국방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증 감	
			금 액	%
□ 국 방 비	211,026	225,129	14,103	6.7
□ 연구개발비 국방비 대비 (%)	9,087 4.3	10,595 4.7	1,508 0.4	16.6
○ 국과연 연구개발	5,312	6,094	782	14.7
○ 업체주관 연구개발	1,672	2,000	328	19.6
○ 국책 연구개발	901	1,189	288	32.0
○ ADD 운영비	1,202	1,312	110	9.2

(단위 : 억원)

구 분	중기 재원 편성					
	계	'07	'08	'09	'10	'11
□ 국 방 비	1,507,049	246,967	271,911	298,830	328,414	360,927
□ 연구개발비 국방비 대비 (%)	94,838 6.3	12,902 5.2	16,210 6.0	19,675 6.6	21,970 6.7	24,081 6.7
○ 국과연 연구개발	56,940	6,905	8,342	10,661	13,650	17,382
○ 업체주관 연구개발	21,320	2,632	3,693	5,332	5,364	4,299
○ 국책 연구개발	8,417	2,024	2,634	2,036	1,199	524
○ ADD 운영비	8,161	1,341	1,541	1,646	1,757	1,876

* '07예산 : 정부안 기준

남·북 군사력 비교

(2006.12. 현재)

구 분		한 국	북 한		
병력 (평시)	계	67만 4천여 명	117만여 명		
	육 군	54만 1천여 명	100만여 명		
	해 군	6만 8천여 명	6만여 명		
	공 군	6만 5천여 명	11만여 명		
주 요 전 력	육 군	부 대	군 단(급)	12(특전사 포함)	19(포병군단,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 포함)
		사 단	50	75	
		기동여단	19	69(교도 10여 개 미포함)	
	장 비	전 차	2,300여 대	3,700여 대	
		장갑차	2,500여 대	2,100여 대	
		야 포	5,100여 문	8,500여 문	
		다련장/방사포	200여 문	4,8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20여 기(발사대)	80여 기(발사대)	
	해 군	수 상 함 정	전투함정	120여 척	42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60여 척
			기뢰전 함정	10여 척	3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3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60여 척
	공 군		전투기	500여 대	820여 대
			특수기	80여 대(해군 항공기 포함)	30여 대
			지원기	190여 대	510여 대
		헬 기	680여 대 (육·해·공군 헬기 통합)	310여 대	
예비전력(병력)		304만여 명	770만여 명 (교도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포함)		

※ 한국의 군사력에 제시된 해군병력은 해병대 25,000여 명을 포함한 수치이며,

지상군 부대(사단, 여단) 및 장비는 해병대 전력을 합산한 수치임.

※ 북한군 야포문수는 보병연대급 화포인 76.2mm를 제외한 수치임.

※ 질적 평가 표현은 제한되므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양적인 비교만 한 것임.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현황

● 한·미 연합연습

연습명	형태	목적	훈련 내용
을지포커스렌즈 (UFL) 연습	종합지휘소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방위를 위한 충무 계획 및 작계 5027 수행 절차 숙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위기관리 절차 연습 • 전시전환 절차 연습 • 미 증원군 전개 절차 연습 • 작계시행 절차 연습
연합전시증원 (RSOI)/ 독수리(FE) 연습	지휘소 및 야외기동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정상전개 보장 및 한국군 전쟁지속능력 유지 • 연합/합동 후방지역작전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합동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 절차 숙달 • 전투력 창출 및 한국군 전투력 복원 능력 배양 • 전시지원(WHNS) 절차 연습 • 연특사 작계시행 절차 숙달 • 양륙공항·항만, 중요시설방호, 요충지 방어훈련 • 해양 기동전투단, 연합상륙, 전구 유도탄 방어훈련

● 한국군 합동 연습·훈련

연습/훈련명	형태	목적	훈련 내용
태극연습	지휘소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의 독자적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 전시임무 및 기능 수행절차 숙달 • 전시체제 전환 절차 연습 • 공세적 대화력전 및 적극적인 중심 작전 수행절차 연습 • 지휘소 자동화 체계 운용 활성화
호국훈련	지휘소 및 야외기동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단급 합동작전 및 통합 전투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작계시행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계시행능력 향상 • 공·지·해 합동작전체계 검증 • 대화력전/제대별 통합전투수행 능력 증대
군단급 FTX	야외기동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단급 제대의 통합전투 수행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단장의 작전 주도권 장악/ 결정적 전투 수행 • 합동성·통합성·동시성 달성 • 군단급 대화력전 수행 • 공·지 합동/제병협동 작전 • 지휘/통신, 전투근무지원 절차 숙달

● 기타 주요 연합 훈련

훈련명	시 기	참가국	훈련 내용
연합대테러 훈련	연 1회	한국, 미국,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력단련, 장애물 극복 레펠/등반훈련 대테러 특공사격 내부소탕훈련 (건물, 열차, 항공기 등) 사제폭발물 처리 종합모의훈련
환태평양 훈련 (RIMPAC)	격년제 (짝수년 6~8월)	한국, 미국, 호주, 칠레, 영국, 일본, 캐나다,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상공방전 해상교통을 보호 해상차단 및 항공강습 함포사격훈련 유도탄 및 어뢰발사훈련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	격년제 (홀수년도)	한국,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전술훈련 조난 항공기, 선박 수색 및 구조훈련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전 훈련 (PacificReach)	격년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수함 승조원 탈출 및 구조전
연합상륙전훈련	연 1회 (독수리연습시)	한국,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탑재/선건부대 작전 입체적 상륙돌격 해상기동, 해상 화력지원훈련 육상작전(해안두보 확보/방어) 통합화력운용
연합 공격편대군 훈련(CLFE)	분기 1회	한국,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격편대군 전력 중고도 침투훈련 침투간 생존 및 임무수행 능력 향상 유사목표를 임의 설정, 평시 공격 절차 숙달
태평양 공군 연합전술훈련 (CCT)	격년제 (연 4회)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호주, 영국, 프랑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고도 침투 및 화물투하 임무 비포장 활주로 전술 강습 이·착륙 훈련 조종사 및 승무원의 실질적인 공중침투 능력 향상

남북군사회담 경과 일지('00. 9 ~'06. 10)

구 분	일 자	장 소	주요 협의/합의 내용
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2000.9.24 ~ 9.26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5개항)」 채택
1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0.11.28	통일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협의내용 : 「남북 군사보장 합의서(안)」 -남북관리구역 설정시기, 설정 범위, 도로노선 위치, 관리구역 내 시설물 건설 -비무장지대 공사를 위한 안전보장 문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 동시착공 문제
2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0.12.5	평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협의내용 : 「남북 군사보장 합의서(안)」 -도로노선 확정 -남북관리구역 설정 및 운용, 공동규칙 관련 협의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공사 간 안전문제 관련 합의서 서명 · 발효 합의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 동시착공 의견 접근
3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0.12.21	통일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측 합의서(안) 설명 및 전달 후 차후 회담에서 논의키로 하고 1시간 만에 회담종료 ※북측의 주적개념 관련 문제 제기로 우리 측 대응위주 진행
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1.1.31	평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협의내용 : 「남북 군사보장 합의서(안)」 -남북관리구역 설정 및 운용 -비무장지대 내 지뢰제거 및 철도 · 도로 연결공사 방법, 공사현장 군사책임자간 접촉 및 연락방법 -공사 인원 · 장비에 대한 경계 및 안전보장 문제
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1.2.8	통일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이후 「군사보장합의서」) 타결 ※ 「주적개념」 관련 이유로 서명 · 발효 지연
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2.9.14	평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보장합의서」 채택(5차 실무회담 합의 기초, 동해선 포함) → 두 차례 추가회담(9.16, 9.17)을 통해 합의서 서명 · 교환 및 발효키로 합의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2002.9.16	통일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보장합의서」 문서내용 확인, 1차 교환 및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진행절차 협의
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2.9.17	평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보장합의서」 교환 · 발효
1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2002.10.3	통일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관련 북측입장 확인 ·철도 · 도로 연결작업을 위한 쌍방 일정별 공사계획 및 노선도 교환 협의 ·통신 관련 장비지원 문제
2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2002.10.11	평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관련 쌍방 합의문(안) 철도 · 도로 연결 관련 비무장지대 균형공사 및 지뢰 제거장비 지원 문제 협의

구 분	일 자	장 소	주요 협의/합의 내용
3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2002.10.16	통일각	•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관련 쌍방 합의문(안) 철도·도로 연결 관련 비무장지대 균형공사 및 지뢰 제거장비 지원 문제 협의
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2002.10.25	평화의 집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관련 쌍방 공동보도문안 및 11월 개최에 원칙적 합의 • 철도·도로 연결 관련 균형공사 검증문제, 공동측량문제, 동해선 통신선 연결 문제 협의
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2002.11.13	통일각	• 철도·도로연결 관련 균형공사 검증문제, 공동측량문제, 동해선 통신선 연결 문제 협의 ※ 북측은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관련, “행정상 이유로 어렵다”고 언급 회피
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2002.12.23	평화의 집	• 경의선 및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합의서(안) 및 동해선 통신선 연결 문제
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2003.1.27	통일각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채택·발효
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2003.6.4	평화의 집	• 남북 상호 현장 확인방문 합의 (방문일 : 6.11 / 인원 : 동·서해 각각 10명씩)
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3.9.17	통일각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합의서」 채택·발효 • 경비초소 규모 합의, 동해선 통신선연결 관련 온정리까지 지원 가능성 문의
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2003.11.14	평화의 집	•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안)」 관련 쌍방 입장 교환 • 동해선 통신선 연결 관련 통신실무자 접촉 일정 협의
10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2003.11.28	통일각	• 「초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 관련 많은 부분 의견 접근 (초소규모, 형태, 근무인원 등) • 일부 이견 조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채택 후, 본 회담을 통해 서명·발효키로 합의
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3.12.23	평화의 집	•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차단)초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교환 후 발효
1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2004.5.26	금강산	•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관련 협의
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2004.6.3 ~6.4	설악산	•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채택·발효

※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00.9.24~9.26)

우리측 : 조성태 국방장관 외 4명 / 북측 :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외 4명

※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00.11.28) ~ 제3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02.10.16)

우리측 : 군비통제처장 김경덕준장 외 4명 / 북측 : 유영철 대좌 외 4명

※ 제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02.10.25) 이후

우리측 : 대북정책과장 문성록 대령 외 4명 / 북측 : 유영철 대좌 외 4명

※ 제1·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04.5.26 / '04.6.3~4)

우리측 : 합참 박정희 해군준장 외 4명 / 북측 : 안익산 소장 외 4명

구 분	일 자	장 소	주요 협의/합의 내용
남북장성급군사회담 1차 실무대표회담	2004.6.10 ~6.12	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채택·발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2차 실무대표회담	2004.6.29 ~6.30	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쌍방 1단계 선전수단 제거대상 목록 교환 및 상호 확인 평가, 일부 이견사항은 추후 협의키로 합의 우리측, 서해 우발충돌방지 개선방안 제의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2004.7.5	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이견 조정, 2단계 시행 합의 우리측, 서해 우발 충돌방지 개선방안 협의 촉구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	2005.7.20	평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단계 선전수단 제거대상 관련 이견사항 협의 3단계 선전수단 제거 착수 협의(7.25~8.13) 서해통신연락소 설치·운영 합의(8.13일부) 우리측 서해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관련 보충합의서(안) 제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4차 실무대표회담	2005.8.12	통일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단계 선전수단 제거대상 관련 이견사항 협의 3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일정 협의시도 <p>※ 북측, UFL연습중단을 주장하면서 일정 협의 거부</p>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2005.11.3	평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장성급회담 의제 및 절차, 일정 협의 <p>※ 북측은 회담일정을 6자회담과 연계하면서 우리측이 민족공조에 동참할 것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문제 협의하기로 합의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2006.2.3	통일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합의(장소는 북측이 '백두산'에서 '통일각'으로 수정 제의)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안)」 북측에 전달
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2006.3.2 ~3.3	통일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측,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문제 제의 북측, 서해해상군사분계선 우선 협의 주장
4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2006.5.16 ~5.18	판문점 평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측,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제의, 북측은 장성급회담 의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우리측은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문제 관련, 다음 2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용의를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북방한계선 존중·준수 ② 기본합의서상의 군사분야 합의사항 전면적 이행 북측은 근본문제인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2006.10.2	판문점 통일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측은 대북 전단 살포문제, 동·서해지구 통행 질서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방지 요청 우리측은 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신뢰구축 확대 문제 등 제기

※ 제3·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06.3.2~3 / '06.5.16~18)

우리측 : 국방부 한민구 육군소장 외 4명 / 북측 : 김영철 중장 외 4명

※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및 수석대표접촉

우리측 : 국방부 문성묵 대령 외 4명 / 북측 : 유영철 대좌 외 4명

*'06.2.3 / '06.10.2 접촉에서 북측은 박기용 상좌가 단장 대리로 참석

제37차 SCM 공동성명

2005.10.21, 서울

1.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2005년 10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윤광웅 한국 국방부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장관을 양측의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5년 10월 20일 한국 합참의장 이상희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을 대리하는 주한미군선임장교 리언 라포트 대장은 제27차 한·미 군사 위원회회의를 주재하였다.
2.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의 한국군 파병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고, 한국군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국가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이 국가들의 재건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11월 18~19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빈틈없는 대테러 경계태세를 갖추기 위해 긴밀한 정보교환체제를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3. 윤광웅 장관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및 리타로 인해 미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한국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였다. 윤장관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정상화되도록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원하면서, 완전한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한국정부의 뜻을 표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 정부 및 한국민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4. 양 장관은 6자회담 진전과 남북간 화해·협력 노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이러한 무기와 기술의 확산 위험성이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의 대상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북한이 지난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 할 것을 공약한 점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경 공동성명이 검증가능한 북한 핵폐기를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이 포괄적·역동적 관계로 발전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이 양국의 이익에 긴요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7. 양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유지에 있어서 유엔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윤광웅 장관도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과 여타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완수가 미래 한·미 동맹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기지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진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9. 럼스펠드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군사임무전환과 연합 군사능력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이 자국 방위에 있어 더욱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지휘관계와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으며,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동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런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점과 한·미 동맹 비전에 관한 공동연구가 동맹의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에도 SPI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양 장관은 '05~'06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방위비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함을 평가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 기여함을 인정하였다.
12. 윤광웅 장관은 한국군 [국방개혁 2020(안)]의 배경과 과정 및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측 국방개혁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미국의 지원 의사를 전달하였다. 또한, 윤장관은 국방개혁안이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군을 기술지향적이고 '질' 위주의 전력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국방개혁안이 앞으로 동맹의 발전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3. 양 장관은 제37차 SCM과 제27차 MCM이 현재 및 미래의 안보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함으로써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데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차기 SCM을 2006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끝.

주요 국제 군비통제 협약/기구

❶ 핵확산 금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의 평화적 이용 증진 핵무기 관련 기술, 핵물질의 획득 · 이양 · 원조 금지 핵확산 방지를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NPT가입 시, IAEA와의 안전 조치협정 체결 의무화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일랜드가 유엔 총회에 핵무기 확산의 위험성에 관한 가결의안 제출(1958년) 유엔은 18개국 군축회의(ENDC)로 하여금 조약원칙을 제정하도록 결의(1966년) 미 · 소 · 영 등 주도로 발효(1970년)
가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9개국(2006년 10월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미가입국 :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1975년 한국 가입, 1985년 북한 가입(1993.3. 탈퇴 선언, 1993.6. 탈퇴 유보, 2003.1. 탈퇴 선언)
최근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5년 5월 NPT 평가회의 시, NPT 무기한 연장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T평가회의 5년마다 개최 2005년 5월, NPT 제7차 평가회의 시, 핵보유국/비보유국, 서방/비동맹 간 입장 차이로 회의 결과문서 도출 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비확산체제의 근간으로서 NPT의 유용성과 필요성 재확인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 지지 및 북한의 NPT 복귀 촉구 핵의 평화적 이용은 제한받지 않도록 국제적 기술협력 증진 추진 핵비보유국들의 핵보유국에 대한 실질적인 핵군축 요구 증대

● 국제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기술지원과 협력 제공 당사국과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을 통해 NPT에 규정된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여부에 대한 검증 수행 안전조치협정에 관한 불이행(분쟁) 발생 시, 유엔 총회 및 안보리에 보고 총회(매년), 이사회(매분기), 사무국(사무총장 예하에 6개 부서)으로 구성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제8차 유엔총회에서 'Atoms for Peace' 제창(1953년) 제11차 유엔총회에서 IAEA 헌장 초안 채택(1956년) 미·영·불·소 등 26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IAEA 헌장 발효(195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문 23개조와 부속서로 구성(IAEA의 목적, 기능, 조직, 사업수행 등을 규정) 「전면안전조치협정」 채택(197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무기 비보유국인 NPT 당사국의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해 안전조치 적용 이라크 및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따라 기존의 안전조치 제도 강화 결정(1993년) 안전조치강화체제 이행을 위한 추가의정서 채택(1997년)
가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0개국(2006년 10월, 현재) 1957년 한국 가입, 북한은 1974년 가입 후 1994년 IAEA 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이유로 탈퇴
최근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IAEA는 원자력의 안전을 제고시키기 위한 각종 국제 규범의 제정을 주도 「사용 후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협약(1997)」 및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보증기금협약(1997)」 채택 1999년 이후 IAEA 총회 / 이사회와 UN 총회에서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협정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 2003년 제47차 IAEA 정기총회에서 IAEA 안전조치 강화 필요성 및 핵 테러 대처를 위한 IAEA 역할의 중요성 강조,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입장을 재천명하는 대북결의안 채택 2005년 제49차 IAEA 정기총회에서 한국 내 핵물질 실험에 대한 IAEA 사찰이 결정되었고, 이후 사찰 과정에서 국제 핵비확산체제 강화와 핵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물질 통제를 위하여 국제협력 강화 핵의 평화적 이용은 제한 받지 않도록 국제적 기술협력 증진 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의 미 서명, 미 비준 국가에 대한 조속한 서명, 비준 촉구 북한에 대해 핵 안전조치 조속 이행 촉구

●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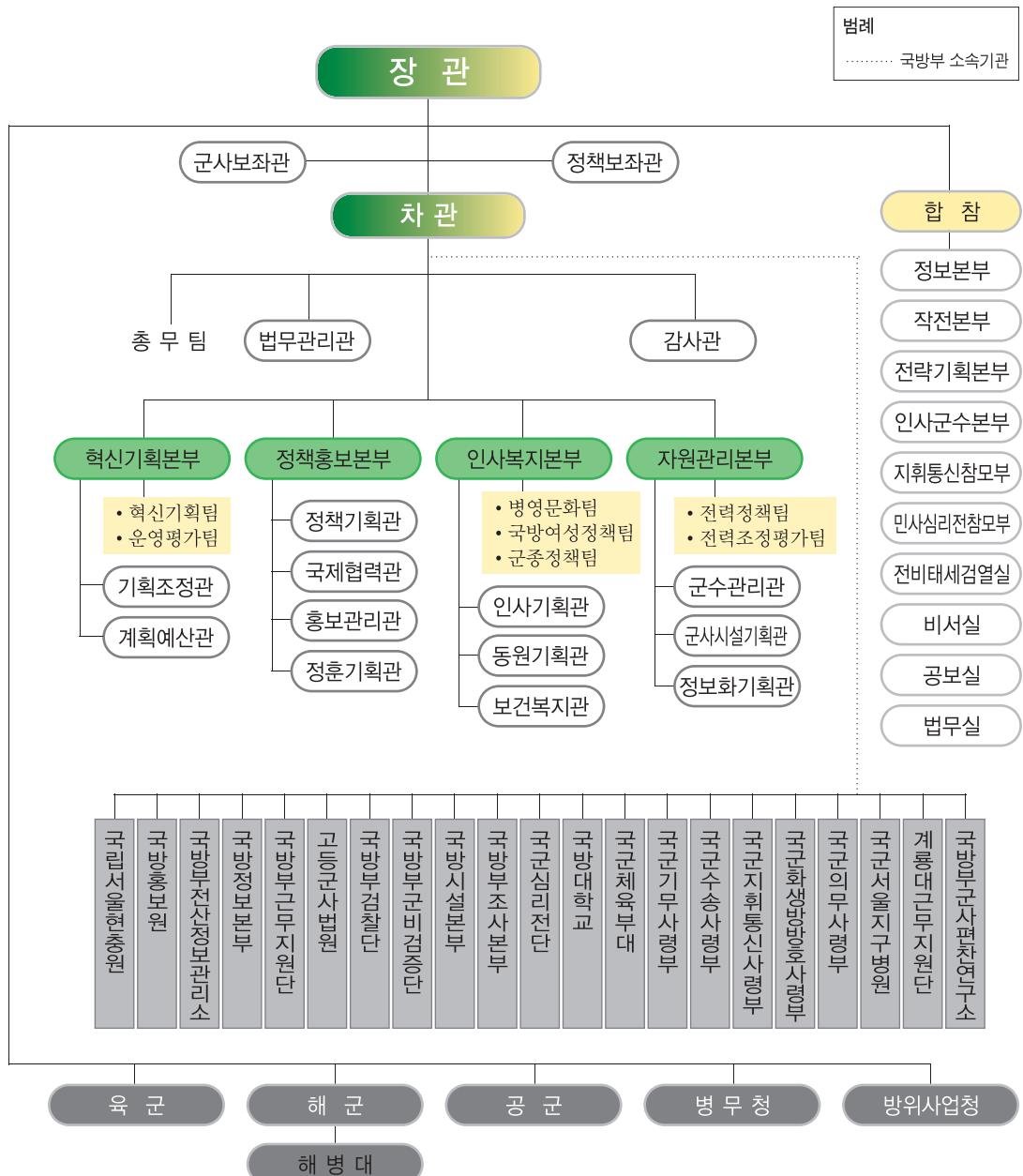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무인비행체, 그리고 관련 장비 · 기술의 수출/이전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국제 체제 • 통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거리 300km 이상, 탑재중량 500kg 이상의 로켓/UAV의 완제품/생산 시설 및 주요 하부체계의 수출 및 기술이전 통제(Category I) - 로켓체계 :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과학관측로켓 등 - 무인비행체 : 순항미사일, 무인표적기, 무인정찰기 등 - 주요 하부체계 : 로켓단(stage), 재진입체, 추진장치, 유도/조종장치 등 - Cat. I용 부품 · 기술 및 사거리 300km 이상, 탑재중량 500kg 미만의 로켓 /UAV 체계의 수출 및 기술이전 통제(Category II) - 추진체(propellant), 복합소재, 항법장치, 유도 · 조종장치, 항공전자장비, 발사지원 장비 시설, 시험장비 및 기술 • 지침서는 7조의 본문과 20개 항목으로 구분된 기술 및 장비부속서로 구성되어 세부 항목별 규제범위를 명시 • Category I : 2개 분야 • Category II : 18개 분야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대전 이후 범세계적인 미사일 확산에 대한 우려 증가 • 레이건 대통령의 「국가안보 결정 지시각서(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제70호」 발효 • 탄도 미사일 확산방지 방안강구 지시 • 미국 주도하에 G-7 회원국을 중심으로 MTCR 설립(1987년 4월)
가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개국 가입(2006년 11월,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스페인을 필두로 하여 호주, 러시아, 브라질 등이 가입하였으며, 12개국 가입 신청 중, 중국 가입이 최대 논점으로 러시아가 지지하였으나 미국, 일본, 영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함(가입 승인은 만장일치제) • 한국 가입(2001년 3월 26일), 북한 미 가입
최근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회원국의 미사일확산 움직임을 규제하기 위한 헤이그행동규약(HCOC)을 제정, 비회원국을 포함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 중 • 과학기술의 진보와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통제품목의 세부항목에 대한 용어 재정의 및 관련 규격범위 조정 작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제사회는 미사일관련 기술의 확산을 중요한 안보이슈로 인식, MTCR이 미사일 비확산의 제도적 중심으로서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세계적 미사일 확산을 규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제 기구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 지속 예상 • MTCR 회원국으로서 미사일 비확산 분야에 대한 국제적 발언권 제고 및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 집중 필요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와 MTCR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교적 노력 강화 필요

● 바세나르 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이전에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 및 국제안보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수출통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식 무기 : 「UN재래식무기 등록제도」에 따른 품목(탱크, 대포 등) 및 자발적 통보 특정 무기류(암호장비, 레이더 등) -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 정밀공작기계, 슈퍼컴퓨터 등 • 통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회원국이 국내법을 제정하여 통제, 품목 선정 · 수출허용 여부를 독자 결정 - 수출관련 정보교환 의무화, 회원국간 협력 및 수출통제 일관성 도모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 11. 미 영 불 등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 1949년 창설) 17개 회원국은 기존의 COCOM을 해체하고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설립 합의 • 러시아, 헝가리 등 구 공산권 국가들의 체제 참여(1995년 9월) • 33개국 대표가 모여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체제 출범(1996년 12월)
가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개국 가입(2006년 4월, 현재) • 한국 가입(1996년 11월), 북한 미 가입
최근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용대공무기체계(MANPADS) 규제, 무기증개지침, 무기거래정보교환 확대, 재래식무기수출 거부 통보, 무허가 해외생산 규제, WA 참여국 확대 등 합의 • 무형기술이전(ITT) 통제, 최종 용도 안전조치 및 신기술 통제 목록 등 논의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단체나 우려 국가에 WA 통제 품목 이전 방지를 위해 각국 수출통제체제 강화 • 중국 등 비회원국에 대한 활동 강화

국방기구도

(2006.6.30,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위 원 장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학력 및 경력	전화/사무실
2급 손종덕	1급 권태하	 김성곤(1952) 전남 여수(갑) : 2선 의원 고려대 사학과 미 텁풀대 철학박사, 육군일병 한국산업정책연구소 이사장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 원장	의사당 : 421호 전화 : 784-1364 788-2721 FAX : 788-3685

위 원 장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학력 및 경력	전화/사무실	
열린우리당	안영근(1958)	인천 남구(을) : 2선 인하대 행정학과, 병역면제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 책임연구원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당 환경특별위원장	의원회관 : 819호 전화 : 784-5270 788-2808 FAX : 788-3819	
	김명자(1944)	비례대표 : 초선 서울대 화학과 미 버지니아대 이학박사 숙명여대 교수 KBS 객원해설위원, 환경부장관	의원회관 : 528호 전화 : 784-5270 788-2808 FAX : 788-3819	
	김진표(1947)	수원시 영통구 : 초선 서울대 법학과, 공군 일병 미 워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사 13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의원회관 : 311호 전화 : 784-5364 788-2894 FAX : 788-3311	
	박찬석(1940)	비례대표 : 초선 경북대 지리학과, 미 하와이대학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 공군중위, 영남일보 기자, 경북대학교 총장 지방대학육성대책 위원장	의원회관 : 218호 전화 : 784-6184 788-2590 FAX : 788-3218	
	원혜영(1951)	부천시 오정구 : 2선 서울대 역사교육과, 육군병장 (주)풀무원식품 창업, 2·3대 부천시장, 지방분권위 위원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의원회관 : 722호 전화 : 784-4139 788-2538 FAX : 788-3722	
	유재건(1937)	서울 성북구(갑) : 3선의원 연세대 정외과, UC Davis 법학 박사, 공군중위, (주)영풍사장, MBC시사토론 사회자, 한·미 의원외교협의회장, 국방위원장	의원회관 : 326호 전화 : 784-6183 788-2485 FAX : 788-3326	
	이근식(1946)	서울 송파구 병 : 초선 서울대 법대, 행시 10회, 육군 병장 경남 거제군수, 국무총리정무비서관 내무부차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행정자치부장관	의원회관 : 822호 전화 : 784-5270 788-2808 FAX : 788-3819	
	조성태(1942)	비례대표 : 초선 육사(20기), 동국대 행정대학원 2군사령관, 국방부장관 동국대·한남대 행정대학원 예우교수 주간지 미래한국 편집고문	의원회관 : 521호 전화 : 784-2187 788-2361 FAX : 788-3521	
	한나라당	 김학승(1952)	경남 진해시 : 2선 건국대 정치학과, 경남도의원, 예결특위 간사, 당 원내 부총무, 당 사무총장, 경남도당 위원장	의원회관 : 411호 전화 : 784-3852 788-2385 FAX : 788-3411
	민주당	 송영선(1953)	비례대표 : 초선 경북 대영문화, 미국 하와이대학 국제정치학 박사 KIDA 국방정책실장 및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의원회관 : 741호 전화 : 784-5272 788-2816 FAX : 788-3741
	국민중심당	 이인재(1948)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 5선 의원 서울대 상대, 육군이병 코오롱 사장 국회 재경위원회 위원장 당 사무총장, 당 정책위원장	의사당 : 312호 전화 : 784-0931 788-2218 FAX : 788-3381
		 이성구(1953)	비례대표 : 초선 서울대 경제학과, 육군 병장 (주)동방포루마 회장, 4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의원회관 : 824호 전화 : 784-5031 788-2649 FAX : 788-3824
		 김송자(1940)	비례대표 : 초선 고려대 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부차관	의원회관 : 733호 전화 : 784-2052 784-2126 FAX : 788-3733
		 이인제(1948)	충남 논산·계룡·금산 : 4선 서울대 법대, 내전지법판사, 육군병장, 통일민주당 대변인 노동부장관, 민선경기도지사, 자유민주연합 총재권한대행	의원회관 : 327호 전화 : 784-5720 788-2953 FAX : 788-3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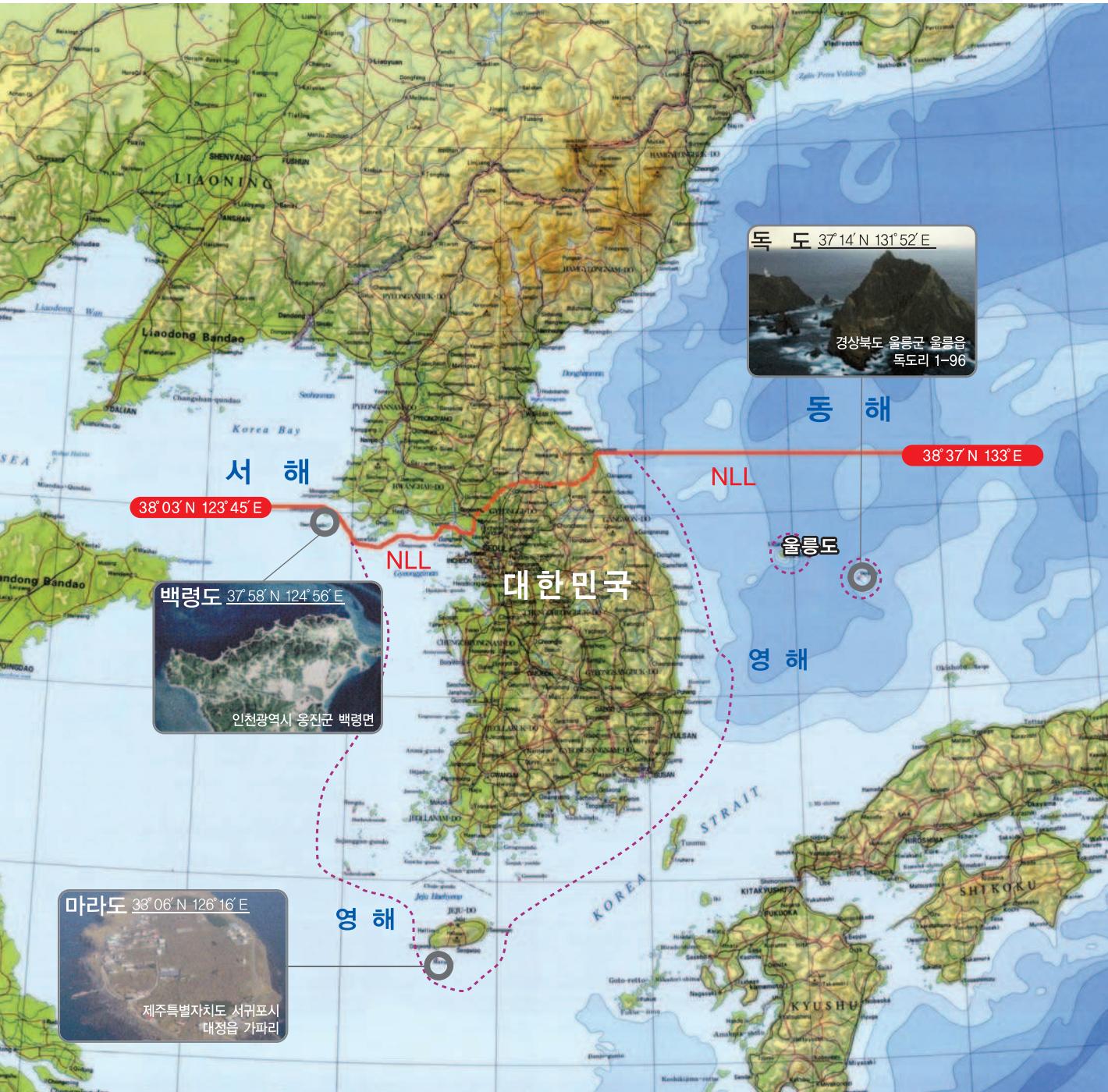
陸海空

국군이 수호해야 할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



비|매|품

2006년 12월29일 초판 발행

2006 국방백서

편찬 : 정책기획관실(기본정책팀)

발행 : 대한민국 국방부

최종감수 : 국어문화운동본부

편집 : (주)디자인티엠 02.2269.6841

인쇄 : 신흥P&P주식회사 031.955.7777

인터넷주소: www.mnd.go.kr

문의처 : 02. 748,6231~7



